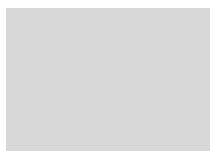


2006 나라살림



2 0 0 6 년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ISCAL YEAR 2006



2006 나라살림

2 0 0 6 년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ISCAL YEAR 2006

2006 나라살림

2006. 2 기획예산처

2006년 나라살림은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 '양극화 완화' 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곳에, 골고루 배분하였습니다.

미래 선진한국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세금은 국민들의 고된 땀방울이 하나하나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톨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혁신적인 재정운용으로 희망 찬 미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부 200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1장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9
제2장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예산처 장관의 제안설명	25

2부 2006년도 나라살림

제1장 2006년도 나라살림 종합	35
1. 재정운용 여건	36
2. 세입 규모	37
3. 지출 규모	44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8
제2장 재원배분 원칙 및 방향	53
1. 재원배분 원칙	54
2. 재원배분 방향	57
3.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59
4.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63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65
1. 사회복지·보건 분야	66
2. 교육 분야	81
3.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87
4. 농림·해양·수산 분야	98
5. 산업·중소기업 분야	107
6. 환경보호 분야	116
7. 문화·관광 분야	124
8. 국방 분야	131
9. 통일·외교 분야	136
1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1

11. R&D 분야	149
12.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지원 분야	156

제4장 재정운용시스템 혁신	163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정착	164
2.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시행·정착	166
3.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	168
4.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강화	169
5.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172
6.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174
7. 특별회계·기금 정비	177
8. 국가재정법 제정 추진	180

3부 200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1장 2006년도 예산	185
1. 2006년도 예산 총칙	186
2. 세입·세출예산 규모	190
3. 세입예산 내역	192
4. 세출예산 내역	199
5. 특별회계 규모 및 개요	216
6. 국고채무부담행위	217
7. 명시이월비	218
8. 계속비	219
제2장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221
1. 기금 요약	222
2. 기금 운용 규모 및 조성 규모	224
3. 기금 수입	225
4. 기금 지출	229
❖ 찾아보기	233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237

1부

200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1장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제2장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예산처 장관의 제안설명

제 1 장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 전반
기는 신용카드 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내수위축과 양극화 추세, 복핵위기, 정
치·사회적 갈등구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용위기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경제의 건실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
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해 온 결과, 이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아니라 체질개선을 통해
자생적인 회복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3년 초에는 600포인트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1,200포인트
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 물가는 3% 안팎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2003년에는 3만 개가 줄어 고용 없는 성장이 우려되었으나, 2004년에
42만 개, 올해에는 8월 말까지 30만여 개가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
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율과 소비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급격한 유가인상과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2,500억 달러를 돌
파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전년 대비 12.4% 성장하여 금년도 목표치인
2,85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2002년 말 1,200억 달러 수준에서 지난 9월 말에는 약 2,100억 달
러에 이르러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사분규 중심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으며, 특히 올해에는 35%나 감소하는 등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만 1,500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1만 6,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1만 8,000달러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강한 체질을 갖고 견고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신활력지역과 기업도시 선정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갈등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18년을 끌어 왔던 원전센터 입지문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외관계도 지혜롭게 풀어 왔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문제,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 간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 놓았습니다. 북핵문제도 6자회담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의식과 제도를 세계 수준에 맞게 선진화해야 합니다.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투명한 경제시스템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환경, 노사관계,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차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GDP 1조 달러를 달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한국의 사회복지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2006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 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 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제조업만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마련한 '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칫 이 흐름에 뒤처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ASEAN,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과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과 물류허브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이 이루어지는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통합 금융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도 시장 상황을 감안하는 가운데 착실히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부문의 재정운영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국가재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하고 예산·회계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

는 방향으로 조세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경제양극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와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같은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는 경제회복에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동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비중동 국가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겠습니다. 해외자원을 개발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2011년까지 총에너지 소비의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융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효율 기기 사용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부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8·31 대책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가 큰 어려움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건설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 없는 서민을 올리는 시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쌀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쌀협상 비준 동의안은 어려운 협상여건에서도 관세화 유예를 10년 간 추가 연장하는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해 얻어 낸 결과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선대책·후개방의 원칙 아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쌀농가 소득보전대책 등을 차질 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쌀협상 비준 동의 여부가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인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 특히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게는 교육·인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성장동력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사회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과 연구성과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를 구축하고, 산학 협력을 공고히해 나갈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학경쟁력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1단계 BK21사업에 이어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7년 간 2조 1,000억 원을 투자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올 2학기부터 시작한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인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을 계속 확대하여 앞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008년 새로 도입되는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가 양성·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교원 양성, 연수, 평가 체제를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과학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총리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 예산도 연 10% 이상 늘리는 등 투자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추출, 복제 강아지 스니피 탄생, 휴대인터넷 개발 등의 연구성과는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형 고속철도 등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기업현장에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세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선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국채 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정부는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 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주거 분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 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

까지 다가구 매입임대를 5만 호로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를 올해 6만 명에서 2009년에는 1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일자리도 금년 7만 개에서 내년에는 13만 개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출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과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산전·산후 휴가급여에 대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겠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인 계층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 문제는 미래의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 간병, 목욕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 7월 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 출범 전까지 동사무소부터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바뀌 일선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3%의 낮은 보험료로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8년에 국민연금법을 1차로 개정했습니다만, 당시 15대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16대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 또다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

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 내에 자문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노사관계 법과 제도, 관행이 국제 수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정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능력개발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노사정 등 국민 모두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시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오던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 내는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전쟁의 위험을 항구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의 기반 위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수행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정착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 전략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린 일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전 양상에 맞는 첨단전력 확보와 지휘체계 정비, 군병력 기동화 등을 통해 군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방관리체제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영문화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과 평양에서 남과 북이 민족대축전을 함께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의가 활발하게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지금 4,600여 명의 북측 근로자와 500여 명의 남측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 북한의 주요 도시인 개성에까지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최근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북교역도 꾸준히 늘어 2002년 6억 4,000만 달러에서 올해는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흡수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억 달러를 동독 쪽 주민에게 15년째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독일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 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 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6자회담 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이 타결되어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의 '쓰나미'와 미국의 '카트리나' 피해 지원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과 해일 피해를 입은 중미 국가들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역내 21개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매우 의미 있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아·태 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우리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건설을 전담할 '건설청'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올 6월 정부는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각 도에서 도시 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업도시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6개 시범지역에 역량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업도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은 금융, 경기도는 첨단산업,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특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 지식과 기술 중심의 첨단산업과 국제금융·서비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용 규제도 단순화, 투명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 군대가 사용해 온 용산의 미군 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김구 선생 등 독립지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도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독립공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출입이 통제되었던 청와대의 뒷산인 북악산을 개방하여 서울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 고궁박물관 개관에 이어 10월 28일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합니다. 이를 계기로 문화관광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과 삶의 질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교육역량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 관련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 본격 추진하여 좀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 등 소위 '게이트'가 없는 정책국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성숙한 의정활동의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가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실현을 위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를 받는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 등에 따른 선거과열과 혼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17대 총선 이래의 돈 안 드는 선거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화된 선거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국민의 뜻이 올바르게 정치구조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 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중장기 재원배분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하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사회안전망, 교육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시설투자사업은 종합투자계획(BTL) 등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금년 대비 5.9% 증가한 235조 6,000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세제개편과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의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 4,000억원 수준입니다.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배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금년 7조 8,000억원보다 15% 늘어난 9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배정하였습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대형 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금년의 49조 3,000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 7,000억원 수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와 긴급복지지원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육아지원 확대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 예산을 금년 27조 6,000억원에서 29조 1,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 신·증축, 대학 기숙사 건설 등에는 종합투자계획(BTL)을 대폭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 BK21사업,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부모마음 학자금대출 등의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방 분야 예산은 금년 20조 8,000억원에서 22조 9,000억원 수준으로 9.8% 늘렸습니다. 국방개혁 추진과 장비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8.4% 증가한 5조 9,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신설 등에 따라 지방이전재원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보다는 투자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교통 분야는 공기업 자체재원과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건설에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 분야는 132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합투자계획(BTL)은 하수관거 정비 등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8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여러 경제·사회적 의제들이 있습니다.

과거 스웨덴에서도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협약(잘츠요바덴 협약)을 체결하여 장기간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협약을 통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농민, 여성·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광복 이후 지난 6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던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독재의 어둠을 딛고 일어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진한국을 실현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의 역사를 열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2일
대통령 노 무 현

제 2 장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예산처 장관의 제안설명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예산처 장관의 제안설명

존경하는 강봉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내외 여건 변화와 해결해야 할 과제

우리나라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고유가와 함께 환율·금리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명실공히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양극화에 따른 사회갈등을 시급히 완화해야 합니다. 사회통합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습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동반성장'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래를 위해 인적자원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성장잠재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통일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시장에 맡기고 재정은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2만 달러 선진국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

졌습니다.

2006년도 경제전망과 나라살림 전체 모습

다음은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과 전체적인 나라살림의 모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금년 하반기 이후 수출이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 소비가 회복되어 지난 3/4분기 성장률이 4.4%를 기록하는 등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유가 등 대외여건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올해 하반기 이후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어 실질기준 5%, 경상기준 7.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정부는 재정이 경기중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을 포함한 총 지출 규모는 221조 3,803억원으로, 금년 대비 6.5% 증가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보다 8.4% 증가한 145조 7,0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130조 4,183억원이며, 내국세 107조 2,588억원, 교통세 11조 8,359억원, 관세 6조 5,02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6조 2,846억원이며, 국채발행 규모는 9조원입니다.

금융성기금과 여유자금 운용을 포함한 61개 기금운용계획상의 내년도 총 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12.2% 증가한 358조 5,518억원입니다. 기금의 자체수입은 87조 1,290억원으로 금년보다 5.2% 증가하였고, 기금·회계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3.7% 증가한 72조 8,989억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0.3% 수준의 소폭 흑자를 보일 전망이며,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는 GDP 대비 1.3% 수준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2006년도 나라살림의 중점과 분야별 지원 내용

다음은 내년도 나라살림의 중점과 분야별 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사회양극화에 따른 갈등구조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보육, 고용서비스 선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우선 R&D투자를 금년보다 15.0% 늘어난 8조 9,729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과학기술국채 발행 등을 통해 대형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기초연구 및 지방 R&D투자를 확대하여 원천기술 확보와 지방 기술혁신 역량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공교육 내실화와 대학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투자 규모를 금년 대비 5.1% 증가한 29조 636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단계 BK21사업에 착수하는 등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능력과 의욕이 있으면 누구라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금년보다 10.8% 늘어난 54조 6,53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요건을 완화하여 19만 명에 대한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사망이나 사고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육아투자를 확대하고 불임부부에 대한 치료비용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금년 대비 9.8% 증가한 2조 8,9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에 따라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생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금년보다 6.4%가 증가한 3조 8,4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한편, 악취관리 등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변 환경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 분야는 금년보다 9.8% 증가한 22조 8,63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첨단·

정예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통일 분야는 남북협력기금에 6,500억원을 출연하는 등 남북협력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외교 분야는 개발도상국 지원과 재외국민 보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금년 대비 8.4% 증가한 5조 9,3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보다는 투자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교통 분야는 동북아 물류중심기반 구축을 위해 인천공항, 부산·광양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되 정부재정뿐만 아니라 공기업 자체자금과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 분야는 132조원 투·융자 계획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소득안정과 농어촌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상화를 위해 출연 규모를 금년 대비 45% 늘어난 5,78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보다 4.5% 증가한 12조 3,91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유가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유전개발, 신·재생에너지개발 등을 대폭 증액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지출 효율화와 재정혁신 강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축소하는 등 내년도 예산과 기금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위주로 편성되도록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동결된 공무원 처우개선을 내년에는 물가상승률 수준인 3%로 인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

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언론·시민단체 등과 함께 예산낭비 사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 공공투자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고, 추진 중인 사업도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권과 자율’에 기반을 둔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성과관리제도 도입,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등 4대 재정혁신 과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혁신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재정건전성 노력 지속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금년 말에 GDP 대비 30%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OECD 국가(평균 76%)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속도가 빠른 데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채무가 급증한 원인은 2006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전환과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여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전환이 완료되는 2007년부터는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을 30%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요청

존경하는 강봉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 10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 기간 내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함께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의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는 재정지출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14일

기획예산처 장관 변 양 균

2부

2006년도 나라살림

제1장 2006년도 나라살림 종합

제2장 자원배분 원칙 및 방향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제4장 재정운용시스템 혁신

제 1 장

2006년도 나라살림 종합

1. 재정운용 여건
2. 세입 규모
3. 지출 규모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1.

재정운용 여건

2003년부터 회복세를 보여 온 세계경제는 2006년에도 4% 초반대의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며 2005년보다 다소 높은 2% 후반대의 성장세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제유가, 주요 국의 주택시장 조정에 따른 소비위축, 글로벌 불균형에 따른 환율변동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요인과 아울러 조류독감 확산 가능성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 세계성장률(IMF)	3.0%	4.0%	5.1%	4.3%	4.3%
- OECD 국가성장률(OECD)	1.5%	2.0%	3.3%	2.7%	2.9%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05. 9), OECD, OECD Economic Outlook(2005. 11)

2006년도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내수회복과 안정적인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5% 수준의 실질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2006년도 우리 경제 회복의 크기와 속도는 환율, 유가 등 대외여건의 안정 여부와 아울러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정도, 설비투자 회복 및 건설투자 증가 정도, 수출의 두 자리수 증가세 지속 여부 및 일자리 창출 수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1 2006년 경제 전망

구분	2004년 실적	2005년 추정	2006년 예산
실질성장률	4.6%	4.0%*	5.0%
경상성장률	7.4%	4% 수준	7.5%

* 2005년 GDP 속보치(2006. 1. 25)

2.

세입 규모

❖ 일반회계 세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등으로 구성되며, 2006년의 경우 2005년 예산(추경 포함) 대비 7.1% 증가한 144.8조원 수준이다. 특별회계 세입은 재특의 전대차관 감소 등으로 2005년 예산 대비 5.6% 줄어든 57.3조원 수준이다. 통합재정 기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재정의 총수입은 2005년 대비 5.8% 증가한 235.3조원이다.

2-1 일반회계 국세수입 : 2005년 예산 대비 6.8% 증가

2006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05년 추경예산(121.7조원) 대비 6.8% 증가한 130.0조원 수준이다. 2004년과 2005년 대규모 세수결손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내국세 수입은 2005년 예산 대비 6.1% 증가한 107.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세율인하 등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득세의 경우 명목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5년 대비 12.9% 수준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2005년 대비 14.1%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법인세는 2005년 상반기 기업실적이 2004년 대비 다소 부진하고, 세율이 2%p 인하됨에 따라 2005년 예산 대비 9.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5년 말 과세기반 정상화 등을 위해 세제개편이 이루어졌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하향 조정(9→6억원)됨에 따라 중

합부동산세가 2005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였다. 서민 난방용인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된 반면, LNG 특별소비세율이 소폭 인상(LNG : 40→60원/kg, 등유 : 154→134원/ℓ)되어 특별소비세는 2005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반영되었다.

2-2 일반회계 세외수입 : 2005년 예산 대비 71.3% 증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05년 추경예산(4.0조원) 대비 71.3% 증가한 6.8조원 수준이다. 이는 세입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공기업 출자배당수입 증대, 공기업 주식매각 등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충 노력에 기인한 것이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에는 경상이전수입(별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경상세외수입과 한국은행 잉여금, 공기업 주식매각대금,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다.

최근 매년 2~4조원 수준이었던 한국은행 잉여금은 환율하락 및 이자율 변동으로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에 대해 신규로 배당을 추진하고, 영업실적이 호전된 기업은행·토공 등 기존 정부 투·출자기관의 배당수입이 크게 늘어나 2006년 출자배당수입이 전년(0.4조원)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한전과 기업은행에 대한 정부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여 2조원 수준의 수입이 확보될 예정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충 노력에 힘입어 2006년도 세외수입은 2005년 대비 71.3%가 증가한 6.8조원 수준으로 반영되었다.

한편 세외수입 증대 및 재정지출 합리화 등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는 2005년에 9.5조원이던 것이 2006년에는 8.0조원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표 2-11 2006년 일반회계 수입

(단위 : 억원, %)

	2005년 추경예산	2006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계(I+II+III)	1,352,156	1,448,076	95,920	7.1
• 국세(I)	1,217,347	1,300,388	83,041	6.8
-내국세	1,009,244	1,070,986	61,742	6.1
-관세	62,293	65,026	2,733	4.4
-교통세	103,770	117,219	13,449	13.0
-교육세	35,040	36,957	1,917	5.5
-종합부동산세	7,000	10,200	3,200	45.7
• 세외수입(II)	39,809	68,188	28,379	71.3
-주식매각	1,009	20,144	19,135	1,896.4
-경상세외수입	37,074	44,901	7,827	21.1
-전년도 이월금	1,726	3,143	1,417	82.1
• 국채발행(III)	95,000*	79,500	△15,500	△16.3

* 실제 국채발행 규모는 9조원

2005년 주요 세법개정 내용

-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변경(인별 → 세대별)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 하향 조정 (6~9 → 3~6억원) 등
- 경제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
 -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
 - 기업 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
 -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 조세피난 과세제도 정비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신설
-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LNG·등유 세율 조정
 - 사업 포괄양도 비과세 요건 완화
 - 친환경 농업용 자재에 대한 지원 강화
 - 농·어업용 등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국가균형발전 지원
 -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
- 세제 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 연말정산 간소화
 - 국세 체납시 충급여액에 대한 압류 가능 금액을 조정
 - 인지세 전자납부방식 도입
 - 통관 단일창구 운영 법적 근거 마련

2-3 특별회계 세입 : 2005년 대비 5.6% 감소

특별회계 세입은 재정용자특별회계의 전대차관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감소 등에 따라 2005년 대비 5.6%가 축소된 57.3조원으로 전망된다.

21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세, 융자회수, 부담금, 내부거래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에는 재정용자특별회계의 만기도래에 따른 차관상환 회수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전체 세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별회계 세입 중 국세는 2005년도와 비슷한 규모이나, 맥주세율 인하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주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금 및 수수료 등은 2005년 예산 대비 6.6% 증가한 12.7조원으로 전망되며, 융자 회수는 전대차관 회수 감소에 따라 33.4% 감소한 4.7조원으로 전망된다.

표 2-2 특별회계 세입 증감

(단위 : 억원, %)

	2005년 추경예산	2006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계(Ⅰ+Ⅱ+Ⅲ)	606,257	572,520	△33,737	△5.6
• 국세(Ⅰ)	53,151	52,948	△203	△0.4
• 부담금 등 자체세입(Ⅱ)	188,747	173,281	△15,466	△8.2
• 보전거래 등 기타(Ⅲ)	364,359	346,291	△18,068	△5.0

2-4 기금 수입 : 2005년 대비 12.3% 증가

2006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규모는 2005년 기금운용계획 대비 12.3% 증가한 358.2조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자체수입은 6.8% 증가하고 정부내부수입은 12.9% 증가하며, 차입금은 4.3%, 여유자금 회수는 27.3% 수준 증가할 전망이다.

기금운용계획상 전체 수입은 358조원으로 2005년 대비 12.3%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여금 등 보험료 수입과 이자 수입 등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은 전체 수입의 24.6%를 차지할 전망이며 정부내부수입은 국채발행 규모 증가에 따라 96.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2-3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규모 증감

(단위 : 조원, %)

	2005년 계획	2006년 계획	증감액	증감률
합계(Ⅰ+Ⅱ+Ⅲ+Ⅳ)	319.0	358.2	39.2	12.3
• 자체수입(Ⅰ)	82.4	88.0	5.6	6.8
- 통합재정상 기금 수입	72.7	76.1	3.4	4.7
• 정부내부수입(Ⅱ)	85.3	96.3	11.0	12.9
• 차입금(Ⅲ)	80.9	84.4	3.5	4.3
• 여유자금 회수(Ⅳ)	70.3	89.5	19.2	27.3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에는 정부내부 간 거래, 민간차입금, 이미 기금으로 전입되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던 것을 회수하는 여유자금 회수 등 실질적인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어서 통합재정의 총수입 규모를 계산할 때에는 이 항목들이 제외된다. 또한 신용보증 등 금융성기금은 재정활동이 아닌 금융활동으로 분류되어 통합재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부기금의 수입은 통합재정상 기금 수입 규모인 76.1조원 수준이다.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2대 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의 기여금과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로 구성되는 사회보장성 기여금은 대상자 확대 및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4.6% 증가한 29.8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등에 융자한 자금을 만기 회수하는 규모는 전년보다 10.3% 증가한 17.1조원에 이를 전망이며 이자수입 등 여타 수입은 자산운용 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7% 증가한 29.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2-4 통합재정상 자체수입 증감

(단위 : 조원, %)

	2005년 계획	2006년 계획	증감액	증감률
합계(Ⅰ+Ⅱ+Ⅲ)	72.7	76.1	3.4	4.7
• 사회보장성 기여금(Ⅰ)	28.5	29.8	1.3	4.6
• 융자원금 회수(Ⅱ)	15.5	17.1	1.6	10.3
• 이자수입 등 기타(Ⅲ)	28.7	29.2	0.5	1.7

2-5 총수입 : 2005년 대비 5.8% 증가

2006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수입 증가(8.8%)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수입 감소와 기금 수입의 낮은 증가로 인해 2005년 대비 5.8%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 기준으로 총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 각각의 당해년도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수입을 합한 것으로서, 단순합계에서 보전거래 수입, 회계 간 및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

총수입 중 일반회계 수입 규모는 일반회계 총계 규모 144.8조원에서 국채발행 8.0조원 및 전년도 이월금 0.3조원을 제외한 136.5조원으로 2005년 대비 8.8% 증가한 수준이다. 이를 구분해 보면 국세수입이 2005년 대비 6.8% 증가한 130.0조원이고, 세외수입이 70.8% 증가한 6.5조원(전년도 이월금 제외)이다.

특별회계 수입은 만기도래에 따른 전대차관 회수금액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2005년 대비 6.5%가 줄어든 22.6조원으로 전망된다.

기금 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원금 회수 증가로 2005년 대비 4.7% 증가한 76.1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표 2-5 총수입 증감(통합재정 기준)

(단위 : 조원, %)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수입	222.4	235.3	12.9	5.8
• 일반회계	125.5	136.5	11.0	8.8
• 특별회계	24.2	22.6	△1.6	△6.5
• 기금	72.7	76.1	3.4	4.7

‘총수입’과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 합계’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의 단순합계는 통합재정상의 총수입과는 다르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정 규모 등을 설명할 때 단순합계가 아니라 총수입 개념을 사용한다.

첫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의 단순합계는 정부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원래 수입보다 과대 계상된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100원의 조세수입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이를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전입하는 경우 실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00원이지만 단순합계로 계산하면 수입이 200원으로 계상되어 실제 경제적 효과에 비해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비해 총수입은 회계 간, 기금 간,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100원만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경제적 효과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둘째, 회계별 단순합계는 보전거래를 포함하여 순수한 재정활동 이외에 정부의 금융활동도 포함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지출하고 남은 100원을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계상하면 실제 수입은 100원이지만 전년·금년 2개 연도 수입(200원)으로 계상되어 이중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국채발행 수입 및 차입금은 추후에 상환해야 하는 수입으로 단순합계로 계상하면 당해년도 수입이 과다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총수입은 차입금·국공채 발행 수입·전년도 이월금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하고 계상하므로 단순합계보다 작아진다.

단순합계가 아닌 총수입 개념을 활용하는 이유는 세계 각국의 공통 기준(IMF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재정수지 산정 등 재정운용의 국제적 비교에 도움이 되고 재정건전성 및 재정정책 수행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3. 지출 규모

❖ 200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재정 총지출 규모는 2005년 대비 5.9% 증가한 222.0조원 수준이며 일반회계 총계는 144.8조원으로 2005년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다.

3-1 일반회계 지출 규모 : 2005년 대비 7.1% 증가한 144.8조원 규모

2006년도 일반회계 지출 규모는 2005년보다 7.1% 증가한 144.8조원이며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8.0조원이다.

2006년 일반회계 지출증가율 7.1%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 평균 증가율 9.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일부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관련 세입·세출이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이다. 다만 2003년 이후 세입여건이 악화되면서 향후 재정운용의 중점으로서 세입기반 확대 및 지출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할 것이다.

표 3-1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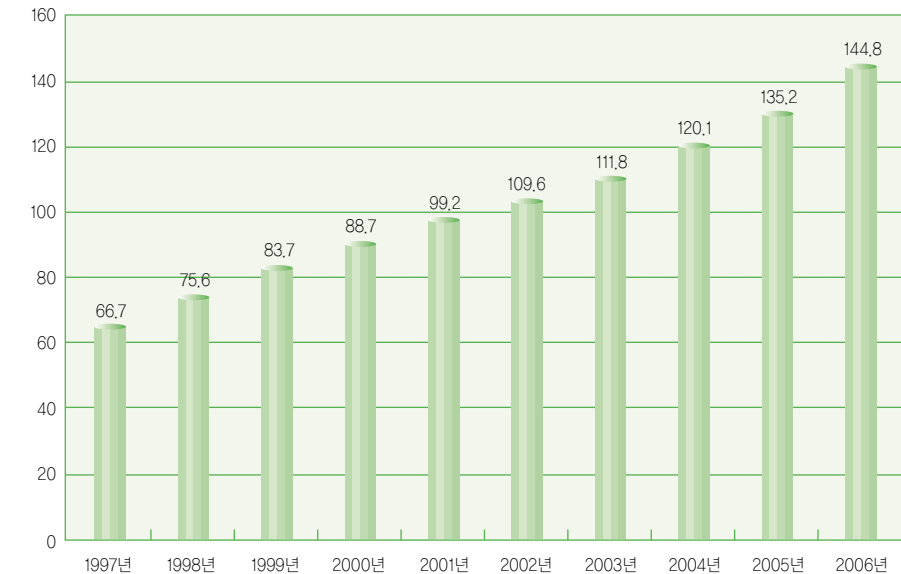
(단위 : 조원)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
10.4	3.6	2.4	1.9	3.0	2.5	9.5*	8.0

* 실제 국채발행 규모는 9조원

그림 3-1 일반회계 지출 규모

(단위 : 조원)



3-2 특별회계 지출 규모 : 2005년 대비 5.6% 감소

2006년도 특별회계 지출 규모는 2005년보다 5.6% 감소한 57.3조원 규모이다. 전대차관 상환 도래로 재정융자특별회계 규모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지출 규모가 감소하게 된 것이다.

특별회계는 2005년 대비 5.6% 감소한 57.3조원 규모이다. 특별회계 지출 규모 축소는 전대차관 상환 도래로 재정융자특별회계 규모가 대폭 감소(2005년 14.9→2006년 10.4조원, △4.5조원)한 것에 기인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6년도 예산 규모는 총계 기준으로 2005년보다 3.2% 증가한 202.1조원이고, 순계 기준¹으로는 4.4% 증가한 167.3조원이다.

¹ 순계 기준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이 이종으로 계산된 것을 제외한 규모이다. 2006년 예산의 경우 26.7조원이다.

3-3 기금 지출 규모 : 사업비는 2005년 대비 7.2% 증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사업비는 2005년보다 7.2% 증가한 74.6조원 규모이다. 사업비 중 사업성기금은 28.6조원, 사회보험기금은 22.5조원, 금융성·계정성기금은 23.5조원이다.

기금운용계획상 사업비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74.6조원으로 편성하였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기금은 연금·보험급여 등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보다 11.9% 증가한 22.5조원을 반영하였다.

인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영비는 증액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작년 수준인 2.3조원 수준이며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확대되어 전년보다 3.6% 증가한 116.9조원이다.

표 3-2 2006년 기금운용 규모 및 사업비 규모

(단위 : 조원, %)

구분	2005년 수정계획	2006년 계획	증감액	증감률
전체 운용 규모(61개)	319.0	358.2	39.2	12.3
• 사업비	69.6	74.6	5.0	7.2
- 사업성기금(40개)	26.1	28.6	2.5	9.6
- 사회보험(6개)	20.1	22.5	2.4	11.9
- 금융성·계정성(15개)	23.4	23.5	0.1	0.4
• 기금운영비	2.3	2.3	-	-
• 정부내부지출 등	134.3	164.3	30.0	22.3
• 여유자금 운용	112.8	116.9	4.1	3.6

3-4 총지출 규모 : 2005년 대비 5.9% 증가한 222.0조원 규모

2006년도 총지출 규모는 2005년보다 5.9% 증가한 222.0조원이며 일반회계 114.6조원, 특별회계 및 기금 107.4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및 국채와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222.0조원으로 2005년 209.6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114.6조원이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107.4조원으로 2005년 대비 각각 6.7%, 5.1% 증가하였다.

표 3-3 2006년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	
		예산	증가율
총지출	209.6	222.0	5.9
• 일반회계	107.4	114.6	6.7
(일반회계 총계)	(135.2)	(144.8)	(7.1)
• 특별회계 및 기금	102.2	107.4	5.1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2006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 대비 0.5조원이 개선된 1.3조원(GDP 대비 0.1%) 흑자이며 관리대상수지는 2005년 대비 0.4조원이 개선된 12.7조원(GDP 대비 $\Delta 1.4\%$)으로 전망된다.

❖ 2006년 국가채무는 외환시장 안정, 공적자금 상환, 일반회계 국채발행 등에 따라 2005년 전망치인 247.6조원보다 30.7조원이 증가한 278.3조원(GDP 대비 31.7%)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1 재정수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06년 통합재정수지¹는 1.3조원 흑자이나,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소요를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Delta 12.7$ 조원 적자로 전망된다. 이는 2005년보다 통합재정수지는 0.5조원, 관리대상 수지는 0.4조원 개선된 수치이다.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은 2006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및 환율 등 세입기반 약화, 사회복지 수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재정 지출소요로 인해 8.0조원으로 편성하였다.

¹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괄하고,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세입·세출의 차이이고,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소요를 제외한 수치를 의미한다.

표 4-1 통합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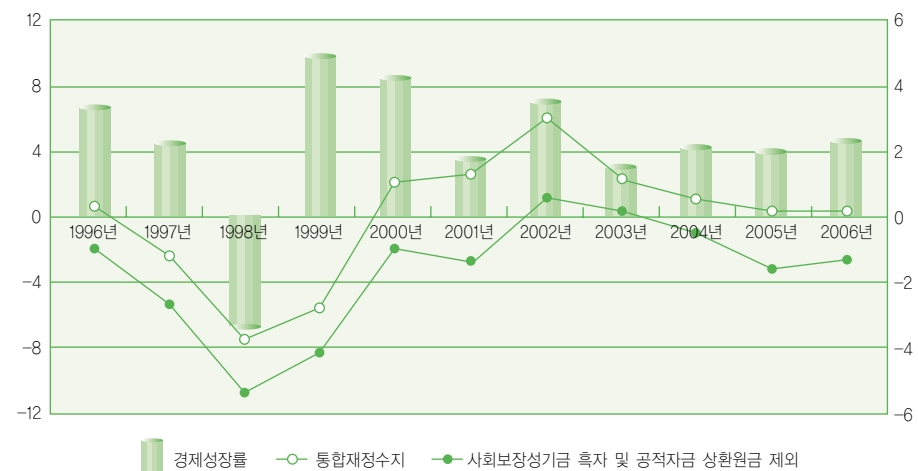
(단위 : 조원)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	증감액
• 통합재정수지(A) (GDP 대비, %)	0.8 (0.1)	1.3 (0.1)	0.5 —
• 조정			
- 사회보장성기금 흑자(B)	25.9	26.0	0.1
- 공적자금 상환소요(C)	12.0	12.0	—
• 관리대상 재정수지(A-B+C) (GDP 대비, %)	$\Delta 13.1$ ($\Delta 1.6$)	$\Delta 12.7$ ($\Delta 1.4$)	0.4
• 일반회계 적자국채	9.5	8.0	$\Delta 1.5$

그림 4-1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지 추이

(경제성장률, %)

(재정수지/GDP, %)



참고 관리대상 재정수지

관리대상 통합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소요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2005년에는 GDP 대비 1.6%, 2006년에는 1.4% 수준의 재정적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초기 적립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흑자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작으며 통화에 미치는 영향도 중립적이어서 제외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공적자금 상환은 이미 금융 구조조정 단계에서 투입되었던 자금을 국채로 전환해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한시적(2003~2006년)이므로 이를 제외해야만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참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합산하여 경상 GDP로 나눈 것을 말한다. 2006년도 조세부담률은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2005년도와 유사한 19.6%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조세부담률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부담을 합산한 국민부담률 역시 2005년도와 유사한 25.3%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4-2]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조세부담률	19.7	19.8	20.4	19.5	19.6	19.6
국민부담률	24.1	24.4	25.3	24.6	25.3	25.3

- 2004년 이전은 실적, 2005년 이후는 예산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영국 및 프랑스보다는 크게 낮고, 미국과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한편,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4-3] 주요 선진국과의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비교

(단위 : %)

	한국	OECD 평균 (2003년)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2003년)
조세부담률	19.5	26.8	29.4	27.5	18.7	15.6
국민부담률	24.6	36.3	36.1	43.7	25.4	25.3

* Revenue Statistics(OECD, 2005.10월), 2004년 기준

4-2 국가채무

2006년 국가채무는 2005년 전망치인 247.6조원(GDP 대비 30.4%)보다 30.7조원 증가한 278.3조원(GDP 31.7%)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환시장 안정용 11.0조원, 공적자금상환기금 11.3조원, 일반회계 국채발행 8.0조원 등에 주로 기인한다.

국가채무 전망치 278.3조원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43.3% 수준인 120.5조원이며, 나머지 56.7% 수준인 157.8조원은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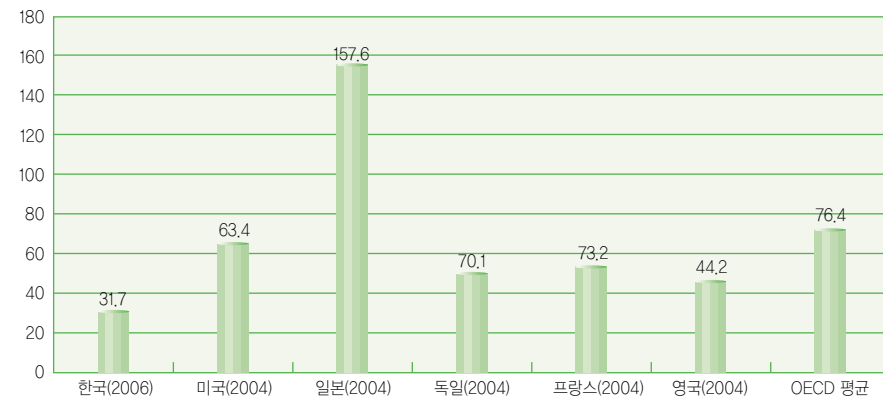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 증가(218.0조원)요인은 주로 정부자산의 증가를 수반하

는 외환시장 안정용(73.8조원), 국민주택기금(21.6조원), 재정융자(19.9조원)와 한시적인 공적자금 상환(54.3조원) 등이고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은 48.9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말 GDP 대비 31.7% 수준이나 미국 63.4%, 일본 157.6%, 독일 70.1% 등 2004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은 76.4%로 높은 수준인 바, 우리나라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2] 국가채무의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2005, 5)

제 2 장

자원배분 원칙 및 방향

1. 자원배분 원칙
2. 자원배분 방향
3.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4.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1.

재원배분 원칙

❖ 참여정부에 들어 재정운용에 있어 근본적인 혁신이 있었다. 5년 단위의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시계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예산편성방식에 있어서도 사전에 주어지는 지출한도에 따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되는 재원배분 원칙 및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 정부는 전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국가재원배분회의(2005. 4. 30~5. 1)를 개최하여 재원배분에 적용할 12대 원칙과 국가재원배분의 중요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였다. 2006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이렇게 합의된 재원배분 원칙을 구체화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 「재원배분 12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12대 원칙은 필요하면 앞으로 계속 수정·보완하여 나갈 계획이다.

원칙 1 Two Track

재정은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역량을 집중한다. 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 맡기고 이에 따라 남는 재정 여력은 복지 분야에 투입한다. 이를 위해 민간시장에서 소득계층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진입제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

원칙 2 민간자본의 활용

재정 이외에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앞당겨 공급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한다.

원칙 3 가격보조의 지양

재정지원 방식은 무차별적인 가격보조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직접 지원하여 형평을 제고한다. 지원함에 있어서는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도록 한다.

원칙 4 균형발전의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사업에 대해 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립시설은 지방에 우선 배치한다.

원칙 5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원칙적으로 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국가는 지자체 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둔다.

원칙 6 시민참여의 확대

재정사업 중 시민사회의 참여와 봉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인다.

원칙 7 제도개선의 우선

제도개선이 재정지출보다 효과적인 경우,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가정책상 필요시 재정지원에 앞서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제시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유도한다.

원칙 8 재정의 통합운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모두 국민의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재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원칙 9 사전예방의 강화

재해·안전·복지 분야에 대해 사전예방적 투자를 강화한다. 사후복구 소요를 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 부담이 줄어들도록 한다.

원칙 10 타당성 검증 강화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소요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를 얻은 후 추진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소요비용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한다.

원칙 11 일정 규모 할당의 금지

특정 분야의 지원 규모를 GDP나 재정의 일정 비율에 사전 연계하는 방식의 자원배분은 지양한다. 각 분야별 자원배분은 타당성이 검증된 구체적 사업을 토대로 결정한다.

원칙 12 성과평가의 강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2.

자원배분 방향

❖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한 사회경제 구조의 활력 저하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어 경제가 저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양극화 및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은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여 고령화가 본격화되기 이전 향후 10년 이내에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 이러한 재정환경 속에서 한정된 재원의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장기 자원배분 방향은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선진국형 재정지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 분야는 사회통합을 통해 경제성장의 에너지를 확대 재생산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분야는 민간의 혁신 능력 및 지식창출 역량을 확충해 나가는 데 지원을 주력하면서 재정투자를 내실화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러한 중장기 자원배분 방향에 따라 2006년 나라살림은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양극화 완화'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여 지원하였다. R&D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교육·의료·사회안전망 구축 등 양극화 완화와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단위 : 조원, %)

	2005년	2006년	증가율
R&D	7.8	8.9	14.2%
복지	49.6	56.0	12.8%
(기초생활보장)	(4.7)	(5.4)	(15.5%)

❖ 특히, 각 분야 내에서도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다.

표 2-1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동시에 기여하는 사업

사회복지 분야	· 사회적 일자리 지원 · 육아지원 · 고용서비스 선진화	1,691→3,039(79.7%) 7,313→10,588(44.8%) 13,046→18,050(38.4%)
산업·중소기업 분야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 중소기업 컨설팅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1,447→1,658(14.6%) 150→186(24.0%) 300→463(54.2%)
교육 분야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학자금 지원*	2,400→2,600(8.3%) 100→454(354.0%) 1,062→1,490(40.3%)

* 종전 이차보전에서 정부보증으로 지원방식 전환

❖ 또한 민간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보다 투자내실화에 주력하였다. SOC 분야는 민간자본 활용 등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화하고 농어촌 분야는 132조원 투융자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3.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 경제구조가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세수증가율이 갈수록 낮아져 재정여력은 크게 줄어든 반면, 저출산·고령화 대비, 양극화 완화, 교육·주거·의료 등 국민기본수요 충족, 성장잠재력 확충, 고유가시대 에너지대책, 국방개혁, 통일준비 등 재정에서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 대응하여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세출 구조조정은 기존사업을 중단·통폐합하거나 사업수행 방식을 효율화함으로써 투입재원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증액하거나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 2006년 예산안 편성시 각 부처 세출예산 중 의무적 지출(예: 인건비, 교부금, 채무상환, 법정부담금 등)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을 대상으로 10% 수준을 목표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구조조정 실적은 2005년 5.6%에서 2006년 9.3%로 대폭 확대되었다.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Two-track, 민간자본 활용 등 「재원배분 12대 원칙」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PART) 결과, 국회·감사원 등의 지적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였다.

표 3-1 세출 구조조정 실적

(단위 : 조원)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	
		부처요구	조정
· 구조조정 대상지출*	42.7	44.8	44.8
· 구조조정 실적	△2.4	△3.8	△4.2
· 구조조정률(%)	5.6	8.5	9.3

* 전년도 재량적 지출 총액에서 자연원료·자연감소사업 제외

세출 구조조정 우수사례

① 취업지원제도 폐지(노동부)

- 일반회계의 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기금의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제도와 유사.
—취업지원제 : 비정규직(인턴) 채용, 월 6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청년고용촉진장려금 : 정규직 채용, 월 60만원, 최대 1년 지원.
- 비정규직 고용을 유발하는 취업지원제도를 폐지(182 → 0억원)하고,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확충(683 → 850억원).

② 국가어항 건설 규모 축소(해양수산부)

- 국가어항 건설을 완공 위주로 지원하여 투자효율 제고(1,662 → 1,368억원).
- 절감재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기능 어촌·어항개발을 중점 지원(138 → 316억원).

③ 수자원공사·지방공항 부문 자체재원 활용(건설교통부)

- 물값 현실화(현실화율 1999년 74% → 2005년 100%)에 따라 광역상수도사업에 수자원공사 자체 재원을 사용토록 하여 수자원공사 지원 규모를 축소(3,024 → 1,408억원).
- 지방공항의 완공시기 조정·공항공사 자체재원 활용 등을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1,277 → 494억원).

④ 중소기업 기술지도(중소기업청)

-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을 기술지도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 투입 대비 효과가 미흡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PART)에서도 사업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업을 조기에 중단(30 → 0억원).
- 대신 경영포콘 컨설팅제도를 확대하여(150 → 186억원) 중소기업이 컨설팅업체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⑤ 저장품창고 신축사업 중단(조달청)

- 대규모로 저장·공급하는 방식에서 납품업체가 수요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조달업무체제를 개편함으로써 저장품창고 신축사업을 중단(51 → 0억원).

❖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5년도에 동결된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 2006년 역시 물가상승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2%로 인상하였으며, 민간보수접근율(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04년 98%에서 2006년 91%로 하락하였다.

	2004년	2005년	2006년
• 민간 대비 보수 수준	98%	94%	91%(예상)
• 보수인상률	3%	동결	2%

❖ 행정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2% 수준만 증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2006년도 소요 대비 20%를 삭감하고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및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 등에 사용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유흥업소 등에서 결재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토록 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도 높였다. 그리고 2006년부터 공무원여행을 통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 용도가 아닌 국내의 출장 등 공적 용도에 사용토록 제도화하는 등 예산절약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단위 : 억원, %)

	2005년 소요 (A)	2006년 소요 (B)	2006년 예산 (C)	2006년 소요 대비	
				(C-B)	%
• 업무추진비 (군부대 운영비 포함시)	1,558 (2,110)	1,589 (2,142)	1,277 (1,830)	Δ312 (Δ312)	Δ19.6 (Δ14.6)

❖ 2005년부터 국민의 입장에서 성과를 측정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미국의 PART)를 도입하여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등 재정운용과정에 환류(feed-back)하였다. 특히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전년 대비 평균 13.5%를 삭감하는 등 2006년도 예산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 또한 모든 재정사업은 적어도 3년에 한번은 국민에게 어떠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철저한 평가를 받게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표 3-2 2005년 자율평가 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

(단위 : 개, 조원)

	사업 수	2005년 예산 (A)	2006년 예산 (B)	증감	
				(B-A)	%
합계	555	35.0	35.8	0.8	2.4
• 우수	28	1.6	2.2	0.7	44.1
• 다소 우수	100	8.3	9.6	1.3	15.6
• 보통	340	21.7	21.0	△0.7	△3.2
• 미흡	87	3.4	3.0	△0.4	△13.5

❖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도 3월부터 43개 중앙부처 및 250개 지자체, 13개 공기업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예산낭비 대응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예산경험 및 민간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오프라인으로 개소하고 콜센터(1577-1242, 알뜰살뜰)를 설치하였으며 타당한 신고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국민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대형 공공투자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도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총사업비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또한 총사업비 변경·협의제도를 통해 1999년도 이후 총사업비 증액 규모를 큰 폭으로 축소(사업비 증액 : 1999년 6.9조원 → 2005년 2.1조원)시키는 등 대형 공공투자사업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

	2003년	2004년	2005년
• 타당성 재검증 (예산절감액)	15개 사업 (6,502억원)	5개 사업 (970억원)	7개 사업 (4,727억원)

❖ 세출 구조조정은 사회복지 등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함에도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에는 한계가 있는 현재의 재정상황에서 지출구조 효율화를 통해 재정위험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의 필연적인 노력이며 향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4.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구분	2005년	2006년	증감액	증감률
1. 사회복지·보건	49.6	56.0	6.4	12.8
2. 교육	27.6	28.8	1.2	4.0
3.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18.3	17.8	△0.5	△2.8
4. 농림·해양·수산	14.1	15.1	1.0	7.2
5. 산업·중소기업	11.9	12.4	0.5	4.2
6. 환경보호	3.6	3.8	0.2	5.1
7. 문화·관광	2.6	2.9	0.3	9.7
8. 국방(일반회계)	21.1	22.5	1.4	6.7
9. 공공질서·안전·통일·외교	11.4	12.7	1.3	11.4
10. R&D	7.8	8.9	1.1	14.2
11.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지원	5.5	5.9	0.4	8.1

- 분야별 자원배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계 기준

제 3 장

분야별 투자계획

1. 사회복지·보건 분야
2. 교육 분야
3.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4. 농림·해양·수산 분야
5. 산업·중소기업 분야
6. 환경보호 분야
7. 문화·관광 분야
8. 국방 분야
9. 통일·외교 분야
1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 R&D 분야
12.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지원 분야

1

사회복지 · 보건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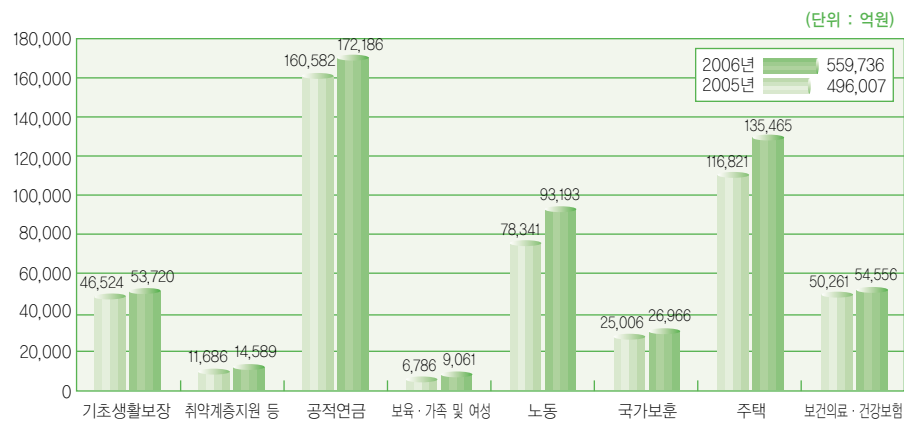
❖ 2006년 사회복지 · 보건 분야의 재정투자 규모는 2005년 대비 12.8%가 증가한 56.0조원으로 편성하였다.

❖ 이는 2006년 총예산 증가율 5.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사회복지 · 보건 분야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23.7%에서 2006년 25.2%로 1.5%가 증가하였다.

❖ 2006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 · 고령화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따라 관련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 부문별로는 저소득 ·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부문이 각 15.5%, 24.8%가 늘어났고, 저출산대책 관련 보육 · 가족 및 여성 부문이 33.5% 늘어났다.

[그림 1-1]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투자 계획



1-1 2006년 재정지원 방향

■ 저소득 ·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점차 개선되어 오던 빈곤율 및 빈부격차 수준이 최근 다시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지니계수	0.283	0.316	0.320	0.317	0.319	0.312	0.306	0.310
소득 5분위 배율	4.49	5.41	5.49	5.32	5.36	5.18	5.22	5.41

이는 산업, 노동시장, 소득 각 부분에서 양극화가 구조화되는 가운데, 취약한 사회보장 수준 및 느슨한 사회안전망의 결과로 빈곤층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작년 9월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희망한국 21’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통해 수급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위기에 처한 가정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실시한다.

둘째,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빈곤탈출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을 통한 자활 · 자립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무주택 빈곤층을 위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빈곤층 주거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 · 전세임대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부담비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200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고령화 역시 세계 최고 속도를 기록하면서 2018년 고령사회 도달에 이어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된다.

표 1-1 합계출산율 및 출산아 수 추이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출산율(명)	6.00	4.53	2.83	1.59	1.47	1.30	1.17	1.19	1.16
출산아 수(만 명)	104	100	86	65	63	55	49	49	47

표 1-2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구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7→14%	14→20%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미국	1942	2013	2028	71	15

이러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은 노동인구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약화, 사회보장지출의 급증, 노인 1인당 부양인구 수의 감소에 따른 사회적 부담부담의 증가 등을 야기하여 우리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현재의 합계출산율 1.16명을 2010년까지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하에 금년 1월 ‘저출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육아에 따른 개인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출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 진전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고, 치매·중풍노인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확대하며,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1-2 부문별 주요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다.

→ 기초생활수급자 수 : (2005년) 150만 명 → (2006년) 162만 명(12만 명 증)

경기회복 지연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12만 명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시켰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래 12세 미만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8세 미만 아동에까지 확대하여 9만 명을 신규로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해산급여를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하여 출산시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라도 화재나 가족의 사망, 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위험에 처한 빈곤층에게 주거, 의료 등 신속한 지원이 임시로 이루어지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웃이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견하여 정부에 신속히 알려줄 수 있도록 24시간 복지콜센터도 신설하여 운영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자활근로 지원을 확대한다. 차상위계층 2만 명에게 제공되던 자활근로 기회를 3만 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빈곤층이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창업할 때 담보나 보증이 곤란하여 융자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제도를 통하여 연간 100개 이상의 공동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3] 기초생활보장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 예산	46,524	53,720	15.5	
- 생계급여	18,273	20,077	9.9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12만 명 증)
- 의료급여	22,148	26,623	20.2	-18세 미만 아동 9만 명 증
- 자활근로	2,021	2,337	15.6	-차상위계층 1만 명 증

■ 저소득 노인 · 장애인 · 아동 지원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확충, 장애수당 인상, 지역아동센터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 노인일자리 확충 : (2005년) 3.5만 명, 6개월 → (2006년) 8만 명, 7개월

➔ 장애수당 : (2005년) 28.5만 명, 6만원 → (2006년) 30만 명, 7만원

➔ 지역아동센터 : (2005년) 800개소 → (2006년) 902개소(12.8% 증)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대비,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후소득 보전 외에도 건강 · 성취감 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을 감안, 일자리 지원대상을 2005년 3만 5,000명에서 2006년 8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한다.

치매 · 중풍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 중인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을 기존 6개 시군구에서 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기초수급 노인에서 일반 노인으로 확대한다. 또한 동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인생활시설 100개, 노인그룹홈 155개, 소규모 다기능 시설 65개소를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의 범위를 2005년 중증 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한 데 이어, 금년에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하였고, 내년에는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에게도 장애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수당을 2005년 월 6만원에서 2006년 7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

였고,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도 2006년에는 2005년보다 44개소가 늘어난 62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저소득 · 빈곤아동,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 빈곤아동의 방과후 학습, 급식, 상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2005년 800개소에서 2006년 902개소로 확대하고, 시설이 열악한 160개소에는 전세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서울 8,000만원, 지방 5,000만원). 또한 보호자가 없어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들을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양육하기 위해 아동그룹홈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2005년 60개소에서 2006년 120개소로 확대하고, 132개소에는 전세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서울 8,000만원, 지방 5,000만원). 또한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가정에 상해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한다(1인당 10만원). 이와 함께, 실종아동 전문기관을 신규로 설치하여 미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아동의 신속한 가정복귀를 도울 예정이다.

[표 1-4] 저소득 노인 · 장애인 · 아동 지원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11,686	14,589	24.8	
• 예산	9,866	11,576	17.3	
- 노인일자리	200	520	160.0	-일자리 수 35→80천 명 확대
- 노인시설 확충	837	1,066	27.4	-그룹홈, 소규모 다기능 시설 등
- 장애수당	897	1,119	24.8	-지원단가 인상(6→7만원)
• 기금	1,820	3,013	65.6	
- 방문도우미 지원	359	659	83.6	-도우미 7→13천 명 확대

■ 보육 · 여성 부문

육아부담 완화를 통한 여성의 경제참여 촉진을 위하여 육아 부문 투자를 40% 이상 확대하였다.

➔ 육아 부문 투자 비중 : (2005년) 7,313억원 → (2006년) 1조 588억원(44.8%)*

* 여성부 · 교육부 · 노동부 · 농림부 육아예산 합계

미래의 국가 인적자원인 영유아의 안정적 성장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위하여 육아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였다.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에서 70% 이하 계층까지, 특히 농어촌 지역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유아교육비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계층까지 확대함에 따라 2006년에는 2005년의 57만 명보다 38만 명 증가한 95만 명에게 영유아 보육료 및 유아교육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육시설 신축은 2005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122개소를 반영하였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자에게 보육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2005년 1,000개소에서 2006년 4,000개소로 대폭 확대하였다.

농어민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대상을 2.0ha 미만에서 5.0ha 미만의 농가로 확대하였고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담임수당을 1인당 11만원씩 지원하는 한편 시설 미이용 아동(4만 8,000명)에게는 연령에 따라 매월 4~8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강화됨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다.

영유아 보육시설



표 1-5] 보육·여성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6,786	9,061	33.5	
• 예산*	6,378	8,749	37.2	
- 영유아 보육료	2,671	4,386	64.2	-전체 아동 30~50%
- 종사자 인건비	2,738	3,131	14.4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확대
- 보육시설 기능보강	504	343	△32.0	-시설신축 축소:430→122개소
- 모부자가정 지원	195	293	순증	-복지부로부터 사업 이체
• 기금	408	312	△23.6	

* 육아예산은 보육·여성부문에 포함된 여성부 예산만 포함. 이외 교육부, 노동부, 농림부를 포함할 경우 전체 육아예산은 2005년 7,313억원에서 2006년 1조 588억원으로 44.8% 증가.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 (2005년) 46만 명 → (2006년) 53만 명

최근 실업률은 3%대로 안정적이나 경력직 선호, 팬찮은 일자리 부족(decent job) 등으로 청년 및 취약계층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훨씬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 부문 일자리 지원을 2005년 46만 명(1.4조원)에서 2006년 53만 명(1.5조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이 산업현장에서 직장연수시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며, 구직등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청년 실업자를 정규직원 채용시 월 6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한다.

교육·문화·복지·보육·환경 분야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1인당 월 평균 70만원, 1년 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민간기업, 지자체 등과 매칭하여 1개 기업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고용 취약계층인 중장년층 및 여성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중장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감액분의

일부(최고 월 50만원)를 6년 간 지원하는 고용연장지원금을 도입하였다.

여성의 고용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¹의 산전후 휴가급여 90일분 전액(최고 월 135만원)을 지원하고 여성근로자 유사산휴가급여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임신 또는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업주가 1년 이상 재계약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경우 중소기업 월 40만원, 대기업 월 20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하는 출산후 계속고용장려금을 신규 도입하였다.

채용박람회 현장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월 평균 급여 170만원 이하 근로자가 복지시설(문화생활, 여행경비 등) 이용시 연간 20만원 한도로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를 위해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 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¹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통신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표 1-6]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지원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78,341	93,193	19.0	
• 예산	7,189	7,392	2.8	
- 고용인프라 구축 및 직업능력개발 등	7,189	7,392	2.8	-일자리 및 교육훈련 지원확대
• 기금	71,152	85,801	26.0	
- 고용보험기금	27,691	39,002	40.8	-실업급여 확대
- 산재보험기금	37,227	40,899	9.9	-예방시설 용자확대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2,775	2,480	△10.6	-직업재활 지원강화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595	1,524	△4.5	-외국인 근로자 지원강화
- 임금채권보장기금	1,864	1,896	1.7	-무료 법률지원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및 보훈선양사업 확충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였다.

→ 국가유공자 지원 : (2005년) 25,006억원 → (2006년) 26,966억원(7.8%)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기본연금 5.1%, 부가연금 7% 6·25자녀수당 10.3~16.7% 인상(월 340~360→375~420천원)하였고, 무공영예수당은 11만원(10%), 참전명예수당 7만원(16.7%)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미성년 자녀양육수당을 신설(월 165~330천원)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민원서비스 부문의 투자강화 및 운영내실화를 기하였다. 보훈중앙병원 신축사업을 지속 지원(2005~2009, 총사업비 1,764억원)하고, 보훈상담센터 및 이동보훈팀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 및 민원서비스 개선도 추진하였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전역자에 대한 취·창업교육을 2005년 650명에서 2006년 1,090명으로 확대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제대군인 취·창업지원을 내실화하였다.

독립기념관 및 대전 현충원 이관에 따라 보훈선양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라사랑정신 함양 중심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153억원을 투자하고,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성역화사업에 18억원을 지원하며, 독도의용수비대 대원·유족과 기념관 건립에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1-7] 국가보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율	비고
합계	25,006	26,966	7.8	
• 예산	22,310	24,170	8.3	
- 기본연금	10,439	10,943	4.8	-단가 인상(5.1%)
- 부가연금	2,834	2,902	2.4	-단가 인상(7%)
- 기타보상금	4,765	5,282	10.8	-단가 인상
- 의료지원	2,253	2,635	17.0	-보훈중앙병원 건립 및 신규 진입대상자 추가
• 기금	2,696	2,796	3.7	
- 유공자·제대군인 등 대부	1,512	1,578	4.4	-지원물량 확대 및 특수임무 수행자 신규 지원

주택 부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등에 재정지원을 강화하였다.

➔ 주택투자/사회복지 비중 : (2005년) 23.6% → (2006년) 24.2%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2006년에는 11만 호(2005~2009년 간 52만 호)를 건설하는 등 서민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06년부터는 국민임대주택의 질을 제고하고, 입주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단가를 현실화하고 건설평형을 다양화(14~20 평형 → 11~24평형)하였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도시서민의 생업여건, 교통 및 주거 편의 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하여 매년 4,500호를 공급하고, 주공·지자체에서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도 매년 1,000호씩 공급할 것이다.

한편, 서민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민간 장기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총 50만 호, 2005~2009년 간 29만 호 공급)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국민임대주택 전경 및 내부 공간계획



[표 1-8] 주택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116,821	135,465	16.0	
• 예산	11,184	10,907	△2.5	
- 국민임대주택	7,919	8,989	13.5	-국민임대 11만 호
• 기금	105,638	124,558	17.9	
- 국민임대주택	28,746	32,127	11.8	-국민임대 11만 호
- 공공임대	14,689	13,955	△4.9	-공공임대 6만 호

■ 공적연금 중장기 재정 안정화 및 운용 효율화

공적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공무원연금은 정확한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한 개혁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

→ 공적연금 재정 규모 : (2005년) 160,582억원 → (2006년) 172,186억원(7.2% 증)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연금별 수급자 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급여 지급도 크게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2005년 170.3만 명에서 2006년 194.6만 명으로, 공무원연금이 2005년 21.8만 명에서 2006년 23.1만 명, 사학연금은 2005년 2.0만 명에서 2006년 2.1만 명, 군인연금은 2005년 6.6만 명에서 2006년 6.7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조속한 국회처리를 통하여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60%에서 2008년 이후 50%로 하향 조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도 현재 진행 중인 중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안정화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여 장기적 재정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표 1-9 | 공적연금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160,582	172,186	7.2	
• 예산	17,215	18,422	7.0	
- 군인연금(특별회계)	16,608	17,747	6.9	-수급자 6.6→6.7만 명
- 농어민연금 지원	607	675	6.9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 기금	143,367	153,765	7.3	
- 국민연금	42,545	47,358	11.7	-수급자 170→195만 명
- 공무원연금	79,537	82,105	3.2	-수급자 22→23만 명
- 사학연금	21,285	24,302	14.2	-수급자 2→2.1만 명

■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지원

의료산업화에 대응하여 공공의료의 기반을 확충하고, 질병의 사후치료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지켜 나간다.

→ 공공보건의료 확충 : (2005년) 5,504억원 → (2006년) 5,746억원

공공의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로 민간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보건소 시설개선에 573억원,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현대화에 3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적인 보건서비스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혈액안전관리에 320억원, 119구급체계 구축 등에 54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보건지소 신축 전후 모습



질병의 사후치료보다는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 및 의료비 절감에 힘을 계획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및 의료 수급자의 무료 암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 금연자의 2%로 금연클리닉 운영대상을 확대하고, 금연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총 3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3.9조원의 국고지원을 통해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에 불거진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확충에 169억원을 투자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을 2%에서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표 1-10 보건 의료 및 건강보험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50,261	54,556	8.5	
• 예산	37,141	37,507	1.0	
- 보건 의료	4,820	3,773	△21.7	-R&D기금 이관으로 감소
- 건강보험	31,122	32,248	3.6	-지역가입자 급여비 35% 지원 등
- 식의약품 관리	1,200	1,486	23.8	-식품안전 지원 확대
• 기금	13,120	16,987	29.5	
- 보건 의료 분야	3,866	6,275	62.3	-공공보건 의료 확충 지원
- 지역 건강보험 지원	9,253	10,712	15.8	-담배부담금 수입 65% (2006년 7월, 500원 인상)

2. 교육 분야

❖ 2006년도 교육 분야의 재정투자 규모는 28,8조원으로 2005년도 대비 4.0%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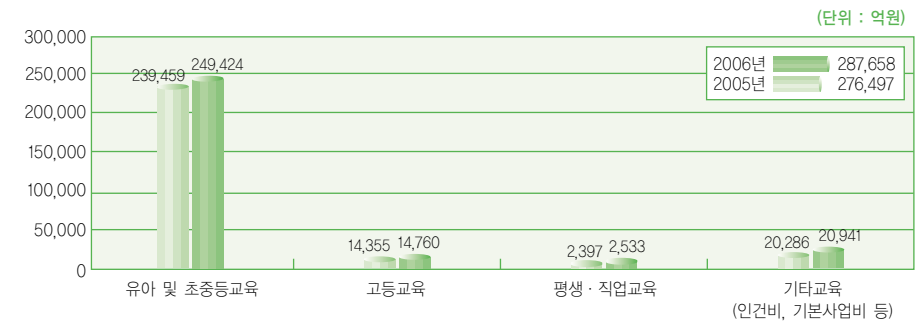
❖ 앞으로 세계 수준의 인적자원 개발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므로 공교육 내실화, 대학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하였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에 대한 재정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교육여건 개선, 수준별 학습 실시, 특기·적성교육 강화 등 학교교육 내실화를 충실히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교육비 부담 완화, 장애아동 학습권 보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고등교육 부문은 대학의 특성화·다양화와 연계한 구조개혁, 연구·교육역량 강화, 산학협력체제 활성화,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문대학과 실업계고의 내실화·특성화를 통한 직업교육체제 혁신 및 국제 교육협력사업을 강화하였다.

그림 2-1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



2-1 2006년 재정지원 방향

교육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투자 확충으로 교육성과 개선

지속적인 교육투자 확충으로 교육예산은 국가예산 중 가장 큰 비중(2005년 일반회계 대비 20.3%)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간(2001~2005년) 연 평균 7.0%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포함한 공교육 투자는 GDP 대비 7.1%(2002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OECD 평균 5.8%). 이와 같은 지속적인 투자확충 결과 우리 교육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다. 초·중등교육은 학업성취도 국제평가에서 최상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학교환경 개선, 2004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완전 실시 등 교육성과가 크게 가시화되고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미흡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확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높은 교육열, 입시 위주의 교육 및 낮은 국제경쟁력 등으로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2001년 10.7→2003년 13.6조원)하였고, 조기유학도 급증(초·중고 유학생 : 2001년 7,944→2003년 1만 498명)하고 있다. 세계 200위권 내 국내 대학 수가 3개 대학(The Times, 2005), 대학의 경제 요구 부합도가 52위(전체 60개국, IMD 2005)에 불과하는 등 대학 교육의 질은 국제 수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배출인력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도 낮다. 또한 지역 간·소득계층 간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06년에는 공교육 내실화, 고등교육경쟁력 강화 및 교육복지 확충에 중점

이에 따라 2006년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투자 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개선, 교수·학습 혁신, 교원평가 및 양성체제 강화, 학교운영 다양화, 영재교육·수준별 수업 등 수월성 교육 확대, 방과후 교실 운영, 학교폭력 예방 등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고등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다양화와 연계한 구조개혁, NURI사업, 제2단계 BK21 등 연구·교육역량 강화, 산학협력체제 활성화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

층 가정 등의 유아교육 여건 개선,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등 일반·장애학생의 통합교육기반을 강화하였고, 대도시 빈곤지역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확대하고, 농어촌 우수고 육성 등 농어촌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아울러 2005년도 2학기부터 시행된 정부보증 장기학자금 대출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2-2 부문별 주요 지원 내용

■ 고등교육 부문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방대학 육성에 중점을 두고 대학구조 개혁, 연구·교육역량 강화, 산학협력체제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였다.

→ (2005년) 14,355억원 → (2006년) 14,760억원(2.8% 증가)

국립대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지원(700억원)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제2단계 BK21사업을 신규 지원하였다. 석·박사 과정 학생 및 박사학위 취득 후 신진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연구여건 조성에 기여하였던 BK21사업이 2005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2006년부터 제2단계 BK21사업(2006~2012년)을 실시한다. 제1단계에는 연간 2,000억원 수준이 지원되었으나, 제2단계에는 연구인력 인건비 현실화, 차세대 국가전략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연간 2,900억원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치·의학 분야 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한 지원(65→75억원)을 확대하고,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문 분야별로 내실 있는 대학평가(15→37억원)를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수도권 대학에 대한 특성화사업(600억원)을 지속 지원하여 대학별 자율적인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였다.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산학연 협력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혁신 계정)사업을 대폭 확대(2,850→3,100억원)하였다. 2005년 2학기부터 시행된 정부보증 장기학자금 대출제도의 확대(2005년 2학기 20만 명→2006년 학기당 25만 명)를 위해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지원(1,490억원)을 신규 실시한다.

|표 2-1| 고등교육 부문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14,355	14,760	2.8	
• 예산	13,131	13,633	3.8	
- 2단계 BK21	1,850	2,900	56.8	-2단계 사업(2006~2012) 착수
- 대학구조 개혁 지원	800	700	△12.5	-국립대 통폐합 등 지원
- 대학특성화 지원	600	600		-수도권 대학 지원
- 산학연 협력활성화	450	500	11.1	-균특회계(지역혁신) 지원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2,400	2,600	8.3	-균특회계(지역혁신) 지원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	-	1,490	순증	-2006년 신규
• 기금	1,228	1,127	△8.2	
- 사학시설자금 융자	1,228	1,127	△8.2	-사립학교 시설 개·보수비 (1,200→1,100억원)

대학 토론식 강의



전산실 강의수업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학교교육의 내실화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하였다.

→ (2005년) 239,459억원 → (2006년) 249,424억원(4.2% 증가)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유아교육을 확대(만 5세아 81→142

천 명, 만 3~4세아 51→155천 명)하고, 장애유아 교육비를 확대 지원(15→20백 명)하였다.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확대(15→30개 지역)하여 도시 저소득지역에 대한 문화·복지사업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우수 고교 육성(21개 교, 168억원),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252개 교, 63억원) 등에 총 454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 지원(23조 7,367억원→24조 5,966억원)하여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초·중등교육은 학교교육 내실화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였다.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선과 교과서의 질 제고, 사이버 가정학습 등 e-러닝을 활용한 교수·학습혁신을 지원하였다. 교원 양성·연수·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특성화학교·자율학교 지정확대 등 학교운영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한편 영재교육·수준별 이동수업 등 수월성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확대 등 초·중등 영어교육 혁신을 지원한다.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교실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상담교사 배치, TV 계도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도록 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유도하였다.

|표 2-2|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239,459	249,424	4.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7,367	245,966	3.6	
- 유아교육 지원	871	1,997	129.3	-저소득층 만 5세아 14만 2,000명 무상교육 등
- 장애아 교육 지원	95	133	40.0	-장애유아 무상교육 2,000명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10	16	60.0	-국립학교 44명, 교원양성기관 22명
-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100	454	354.0	-우수 고교 21개 교 등
- 사이버 가정학습체제 구축	16	16	-	-수월성 교육 콘텐츠 개발 등

■ 평생·직업교육 부문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직업교육체제 강화를 위한 전문대학·실업계고의 내실화·특성화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 (2005년) 2,397억원 → (2006년) 2,533억원(5.7% 증가)

노동시장의 유동성 증대,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생애에 걸쳐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평생·직업교육체제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지역의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학특성화를 지원(1,680억원)하고, 실업계고 내실화·특성화를 지원토록 하였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문대생들의 학업 장려를 위하여 근로장학금(Work Study)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4→5천 명, 지방→수도권·지방)하였다.

그리고 재외동포의 모국어교육과 현지적응교육을 위한 외국 소재 한국학교·한국교육원 지원 및 재외동포 자녀 모국방문사업(313억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유학박람회(9억원) 등을 지원하였다.

표 2-31 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2,397	2,533	5.7	
- 전문대 특성화	1,680	1,680	-	-균특회계(지역혁신) 지원
- 전문대 Work-Study 프로그램 운영지원	80	100	25.0	-재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등	25	60	140.0	-평생교육센터운영 등
- 재외동포 교육 운영지원	288	313	8.7	-재외한국학교 및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 지원 등
- 외국인 유학생 유치	7	9	28.6	-해외유학박람회 개최 등

3.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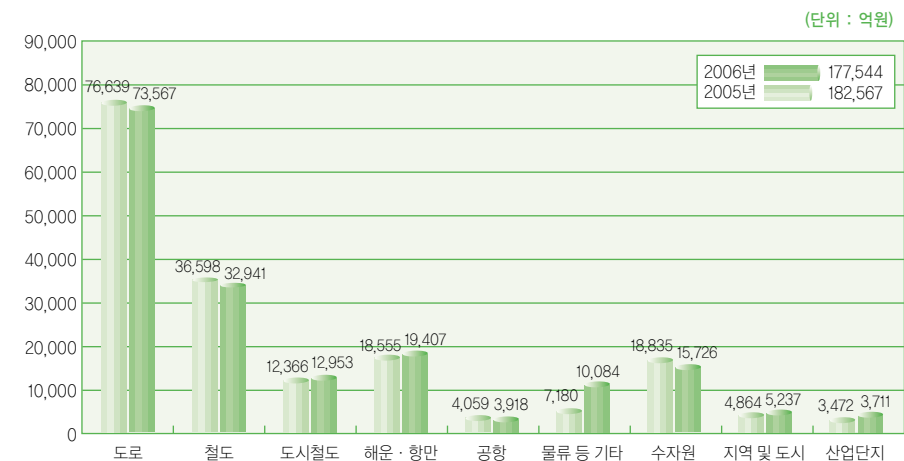
❖ 2006년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의 재정투자 규모는 17.8조원으로 2005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주요 특징은 SOC 투자속도 조절과 투자재원의 다변화로 압축할 수 있다.

❖ 그간의 SOC시설 축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투자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

❖ 재정투자를 보완하여 민자유치 활성화, 공기업 자체자금 투자확대 등 투자재원을 다변화하여 필요시설은 적기에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한정된 재원여건 내에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사업은 차질 없이 뒷받침하였다.

그림 3-11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재정투자 계획



3-1 2006년 재정지원 방향

SOC시설의 지속 확충을 위해 투자재원의 다변화 추진

1990년대 이후 경제활성화와 물류비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SOC 재정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1990년도에 비해 도로는 3.7배(4차선 이상), 항만은 2.4배에 이르는 등 SOC시설 축적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SOC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와 교통혼잡비가 여전히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SOC투자는 투자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수요증가로 재정운용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익성 있는 시설은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공기업 자체자금을 활용하는 등 투자재원의 다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OC 부문 간 · 부문 내 우선순위 조정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SOC 부문 간 · 부문 내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상당 수준 시설이 확충된 도로 및 이용도가 낮은 지방공항은 투자속도를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수자원 · 공항의 경우는 재정과 공기업의 자원 분담 기준을 재정립하여 광역상수도 및 지방공항 건설비 등에 대해 공기업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정된 자원범위 내에서 주요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

동북아시대 중심 선점을 위한 주변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공항, 신항만 등 물류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수도권 집중 해소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3-2 부문별 주요 지원 내용

도로 부문

도로 부문의 투자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 완공 위주의 투자 등을 통해 투자효율을 제고하고 민자유치 · 공기업 자체자금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기간망인 고속도로는 재정투자 이외에 공기업 자체투자 및 민자유치를 통해 적정투자 규모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국도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정체구간 중심의 투자를 강화하고 완공 위주의 투자 및 신규 착공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균특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의 교통애로구간 해소를 위해 2005년부터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도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을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교통사고 감축 등을 위해 유지보수 및 안전개선 투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¹⁾

표 3-1 도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76,639	73,567	△4.0	
- 고속도로 건설	13,729	10,310	△24.9	-도공 자체투자(1조) 감산
-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	7,087	12,702	79.2	-민자고속도로 건설지원
- 국도 건설	38,506	33,594	△12.8	-일반국도 축소
- 지자체 도로 건설 지원	6,746	7,256	7.6	-국지도 등
- 도로관리	10,571	9,704	△8.2	-유지보수 시설개량 · 안전개선, 지방도 구조개선 등

1) 도로공사 : 6년 간(2005~2010년) ABS 5조원을 발행하여 고속도로 건설에 추가 투자 계획.

■ 철도 부문

도로에 집중된 수송구조를 개선하여 수송효율 제고를 위해 주요 간선철도의 병목구간에 대한 집중투자와 대도시권 교통난 해결을 위한 광역철도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철도투자를 지속하여 철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장거리·대용량 수송, 대도시권 통근·통학수송 분야에서 철도의 역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복선전철화 투자는 선로용량과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대신 철도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철도 수송분담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2004년 4월 1단계 개통 이후 달라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간역사 신설, 대전·대구 도심통과구간 지상화 등 기본계획을 일부 조정 중이며, 호남고속철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추진예산을 반영하였다.

일반철도는 주요 간선철도의 병목·애로구간에 중점 투자하고,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전철 투자를 확대하되 완공 위주의 집중투자로 투자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구분	주요 완공사업	내용
• 경부선 • 광역전철	• 조치원~대구 전철화(2006년) • 청량리~덕소(2006년)	• 경부선 전 구간 전철화 완료 •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인구 분산

표 3-2 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36,598	32,941	△10.0	
- 고속철도	2,850	3,700	29.8	-경부·호남고속철도
- 일반철도	15,956	14,056	△11.9	-조치원~대구 전철화 등 17개 사업
- 광역철도	3,912	4,401	12.5	-청량리~덕소 등 12개 사업
- 철도 안전 및 운영	13,880	10,784	△22.3	-수송차량 구입 등

경부고속철도



■ 도시철도 부문

지하철 부문은 대도시의 교통난 완화와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적기에 완공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하철 건설은 지자체 재정여건, 공사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소요를 반영하였다. 대전 1호선은 2006년 완공소요를 반영하고 서울 9호선 등 계속사업은 연차소요를 반영하였다.

또한 대도시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하철 부채 문제를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채를 감축해 나가는 지자체에 대해서만 부채상환을 위한 국고를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에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

² 2005년부터 추진된 부채대책에서는 기존 부채의 조기 상환과 신규 지하철 건설시 차입금을 10%로 억제하는 조건 등을 전제로 건설비 지원율을 60%로 상향 조정.

[표 3-3] 도시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12,366	12,953	4.8	
- 도시철도 건설	9,342	7,583	△18.8	-대전 1호선 완공소요 등
- 도시철도 경영개선 지원	3,024	5,370	77.6	-부산교통공단 채무상환,내장재 교체 등

■ 해운항만 부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신항만 중심의 투자를 확대하고,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 등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상하이 양산항 개장으로 동북아 항만물류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동북아 허브 포트(Hub port)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부산항 신항, 광양항 등 신항만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2008년까지 부산항 신항 18선석, 광양항 19선석을 개발할 계획이다. 부산항 신항은 금년 1월 3선석을 개장하였으며, 금년 중 3선석을 추가로 개발하고 배후 수송시설 및 물류부지 건설을 가속화한다. 광양항은 양항(Two ports)의 하나로서 자립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물동량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동측 배후부지(59만 평) 외에 서측 배후부지 추가개발(53만 평)을 위한 기본설계비를 반영하였고, 한중일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신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평택·당진항, 인천북항, 울산신항만 등 지역별 거점 신항만도 연차별 개발계획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항만운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항운노조에서 항만인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것을 항만운송 사업자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항만인력 공급체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2006년에는 우선 부산항과 인천항의 항만인력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예산(412억원)을 반영하였다.

[표 3-4] 해운항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예산)	18,555	19,407	4.6	
- 신항만 개발 (부산항 신항) (광양항)	9,838 (4,482) (2,735)	10,402 (4,633) (2,690)	5.7 (3.4) (△1.7)	
- 주요항 및 일반항 건설	5,724	5,450	△4.8	
- 항만 민자유치 및 기술개발 등	2,993	3,555	18.8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신규)

부산항 신항



■ 항공·공항 부문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항공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공항에 대해서는 완공시기 연장 등 투자 규모를 조정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지원을 확대하여 일부 포화가 발생하는 여객계류장 등은 2008년 8월 이전에 조기 완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공항은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국내 항공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차별 투자 규모를 조정하였다. 지방공항 확장을 위한 신규 투자는 중단하고, 신규 건설 중인 무안·울진·김제공항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 규모를 조절하여 완공시기를 조정하였다. 특히 기존에 재정으로만 추진하던 지방공항 건설에 2006년부터 한국공항공사에서 사업비의 30%를 분담하도록 조정하여 지방공항 투자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항공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항공안전시설에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시설 점검에 대비하여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공항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표 3-51 항공·공항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4,059	3,918	Δ3.5	
- 인천국제공항 건설	2,458	3,071	24.9	-동북아 중추공항 지원
- 일반공항 건설 및 관리	1,277	524	Δ59.0	-한국공항공사 30% 분담
- 항공안전	274	261	Δ4.7	-항행안전시설, 공항소음대책 등
- 항공안전본부 운영	50	61	22.0	-항공안전본부 운영, 국제협력

인천국제공항



물류 등 기타 부문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5대 권역 복합화물터미널 및 유통단지 등 물류시설 확충, 간선급행 버스사업 등에 8,978억원을 편성하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다.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및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³

거점 간 대량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물류시설 부문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부산권 외에 2006년까지 호남권 내륙 화물기지를 완공하고, 8개 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서울, 대전, 천안 등)을 추진하여 물류시스템의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⁴

도심 대중교통 불편지역의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건설·운영비용이 많이 드는 지하철·경전철 대체수단으로 BRT(Bus Rapid Transit)사업을 하남~군자 간 도로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3-61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7,180	10,084	40.4	
-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	1,182	2,338	97.8	-부산, 광양, 인천 3개 지역
-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500	300	Δ40.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 건설교통 연구개발	1,519	2,620	72.5	-건교부 소관 R&D사업
- 건설교통 정보화	752	781	3.9	-건교부 소관 정보화사업
- 건설교통 행정 지원	1,878	2,192	16.7	-건교부 소관 인건비, 기본경비 등

3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 부산: 명지대교, 의곡~부산과학산단연결도로, 소사~녹산 간 연결도로.
- 광양: 울촌 1산단간선도로, 갈사만진입도로, 상삼~월전 간 도로 등.
- 인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송도 중앙대로, 영종도 남북유수지 연결도로 등.

4 복합화물터미널: 2010년까지 중부권, 영남권, 수도권 확장 등 완료.

- 유통단지: 2006년 2개소(강릉, 울산) 완공 예정.

■ 수자원 부문

주민반대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신규 댐 건설 예산은 축소한 반면, 홍수예방과 댐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댐 치수능력 증대, 국가하천 정비 등 치수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공기업 자체자금 투자 확대와 지방하천에 대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중소 규모 댐을 건설하는 한편, 기상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댐의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⁵

물값 현실화(현실화율 1999년 74→2005년 100%)에 따라 광역상수도사업에 수자원공사 자체재원을 우선 활용토록 하여 재정은 광역상수도 건설출자 규모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2005년 3,024→2006년 1,408억원).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근본적인 수해방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치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낙동강 수계 등 피해 빈발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기본적인 치수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⁶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방

표 3-7 수자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18,835	15,726	△16.5	
• 댐 건설 및 치수능력 증대	2,005	2,042	1.8	
• 용수공급 및 개발	4,906	2,010	△59.0	-수자원공사 자체투자 확대
•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11,803	11,578	△1.9	-지방 하천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 수자원정책	121	96	△20.7	-지하수 조사 및 관측

5 댐 건설 -2005년 완공 : 평화의 댐 증축, 탐진댐, 대곡댐.
-2006년 완공 : 감포댐, 평림댐.

댐(개) : (2005년) 27 → (2006년) 29.

6 전국 하천 개수율(%) : (2005년) 80.3 → (2006년) 81.9.

하천의 방재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치수사업 및 하천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를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개선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 지역·도시 및 산업단지 부문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⁷

지방 소재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 및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국고지원 대상 지방 산업단지 면적을 50만 m²에서 30만 m²로 하향 조정하는 등 지방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진입도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표 3-8 지역·도시 및 산업단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 지역 및 도시 부문	4,864	5,237	7.7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	-	453	순증	-도시계획·청사설계비 등
- 지역균형발전	3,391	3,355	△1.1	-개발촉진지구 지원 등
- 국토정보관리	1,472	1,430	△2.9	-지가조사, 국가기본도 제작 등
• 산업단지 부문	3,472	3,711	6.9	
-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3,472	3,711	6.9	-계속사업 24건, 신규사업 10건

7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재정 규모 : 8.5조원 이내(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51조).

-이전 대상기관 : 49개 기관(12부 4처 2청 등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23개).

• 개발촉진지구 36개 지구 지정(2005년).

• 특정지역 :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영산강 고대문화권(지정 예정).

4.

농림 · 해양 · 수산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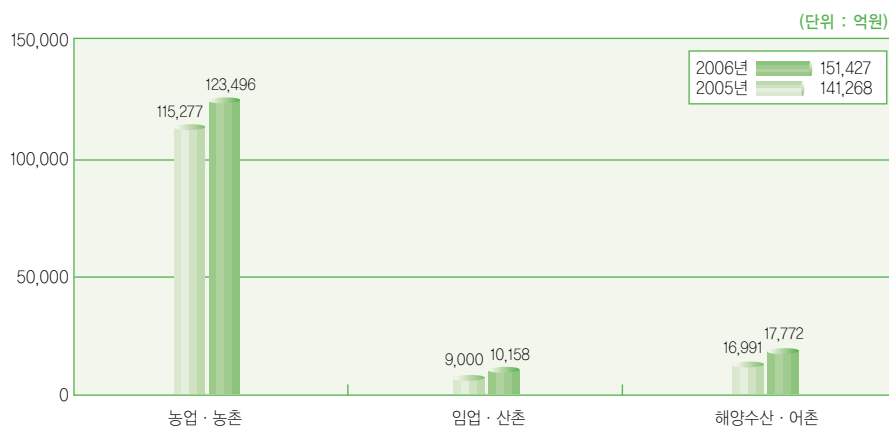
❖ 2006년 농림 · 해양 · 수산 분야의 재정투자 규모는 2005년 대비 7.2% 증가한 15.1조원이다.

❖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농어촌 활력증진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쌀관세화 유예협상 후속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쌀 시장 가격하락에 따른 쌀농가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쌀소득직불금도 대폭 확충하였다.

❖ 또한 농어업 R&D 지원, 전문경영체 및 친환경 농어업 육성 등 농어업 체질 강화와 농수산물 안전성 · 품질 강화, 재해예방 투자에도 중점을 두었다.

❖ 반면, 생산기반 조성은 완공 위주 지원으로 투자를 내실화해 나간다.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여 양곡매입 · 관리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그림 4-11 농림 · 해양 · 수산 분야 재정투자 계획



4-1 2006년 재정지원 방향

UR 이후 농어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에 지속 투자

UR협상 타결을 계기로 1992~1998년 간 42조원 규모의 ‘농어촌 구조개선 투융자계획’과 1999~2004년 간 45조원 규모의 ‘농업 · 농촌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10년 간 90조원(국고 69조원)을 투자하였다. 그 결과, 생산인프라 확충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과 재해대응력이 향상되고, 농어업 생산성, 농수산물 유통구조 등도 크게 개선되었다.

농어업인 소득은 불안정하고,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은 미약

농수산물 가격 하락, 생산비 상승 등으로 농어업인 실질소득은 정체되고, 가격 지지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농수산물의 국내외 가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다. 영세한 영농 규모,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은 농어업경쟁력 확보의 걸림돌이다. 교육 · 의료 · 주택 등 농어촌 생활인프라는 도시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다.

2006년에는 농어업인 생활안정과 농어촌 활력증진 중점 지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32조원을 지원하는 ‘농어업 · 농어촌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6년도에 12.1조원을 반영하였다. 농어업인 생활안정을 위해 직불제 등 소득보전 지원을 대폭 확충하고, 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어업신용보증기금 출연확대 등 농어업인 금융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농어촌 활력증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쾌적한 정주기반 조성 투자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농어촌 투자를 위해 부문 간 투자를 조정

부문 간 재원배분 구조개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농어촌 투자가 되도록 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증산 중심의 생산기반 투자, 수급안정 지원은 축소 내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농어가 소득안정과 농어업 구조조정, 기술개발 · 인력양성 등 미래성장동력과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확대한다. 아울러 성과평가를 통한 세출사업 구조조정, 재정융자사업의 금융기관 자금활용 비중확대 등 시

장원리 확대를 통해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하였다.

4-2 부문별 주요 지원 내용

■ 농업 · 농촌 부문

시장개방 추세 속에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유지를 위해 직불제를 대폭 확충하고, 농어촌 복지와 활력증진 투자를 확대한다.

→ 직불예산(농업예산비중) : (2005년) 10,014억원(13.6%)
→ (2006년) 19,235억원(23.4%)

소득안정 및 부담경감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부담경감을 적극 지원한다. 개방 전 소득 수준인 목표가격(17만원/80kg)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손실액의 85%를 보전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는 ha당 단가를 10만원 인상하여 70만원을 지급하고,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2005년 수확기 쌀값이 크게 하락한 점을 감안하여 14% 수준 하락시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반영하였다. 2004년 시범 도입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경지 경사도 14% 이상 영농여건이 열악한 전국 밭·과수원 187천ha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화를 위해 농가부담 보험료 50%와 운영비 전액 지원을 위해 567억원을 반영하였다. 국가재보험기금 소요(200억원)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농업인재해공제사업은 농작업 중 사망보험금을 현행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단가를 현행 1만 8,100원에서 4만 6,140원으로 인상한다.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001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5.9조원)의 상환연장 등 부채대책을 시행한다. 이를 포함한 각종 저리자금 공급에 따른 이차보전소요 6,540억원을 반영하였다. 농어업 분야 공적 신용보증기능 정상화를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확대한다. 연체 등으로 경영위

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은행사업(277ha)을 신규 시행한다.

복지향상 및 지역개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4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을 학기당 1만 3,000명에서 1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대상을 현행 2ha 미만에서 5ha 미만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48.3천 명)을 양육하는 여성 농어업인에게는 보육시설 이용아동 지원액의 50% 수준을 가정육아 비용으로 신규 지원한다. 65세 이상 고령 농가와 3ha 미만 사과 농가에 대한 영농인력 지원사업도 신규로 시행한다.

농산어촌 지역 분야는 농어업인의 삶과 도시민의 휴양이 상생하는 복합정주공간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이미 선정된 36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민의 여가를 농어촌 관광으로 흡수하기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도 확대한다(47→67개 마을). 도농교류사업의 활성화와 농촌 지역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촌지역개발 인턴제(사무장제)를 신규로 도입하

표 4-11 소득안정 및 복지향상 관련 사업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39,119	47,659	21.8	
• 예산	32,713	34,021	4.0	
- 쌀소득고정직불제	5,988	6,986	15.9	- 단가: 60→70만원/ha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23	523	325.2	- 31→187천ha
- 농작물 재해보험	235	567	141.3	- 보험료 50%, 운영비 100%
- 농업인 재해공제	114	183	60.5	- 768천 건
- 농어민 건강보험료	666	1,359	104.1	- 경감률 40→50%
- 농촌 대학생 학자금	127	483	280.3	- 13→16천 명(학기당)
- 취약농가 인력지원	-	227	순증	- 사고 농가 4천 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48.3천 명
- 부채 대책 등 이차보전	8,217	6,540	△20.4	- 기준금리 인하
- 농촌마을 종합개발	489	467	△4.5	- 신규 착수 40→20권역
• 기금	6,406	13,638	112.9	
- 쌀소득변동직불제	1,376	9,096	561.0	- 쌀값 14% 하락 지급
- 영농규모화사업	4,769	4,341	△9.0	- 매매 4,160ha, 임대 6,458ha
-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	422	순증	- 농지은행 277ha

고(100개 마을)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마을도 확대한다(20→65개 마을).

농업성장동력 확충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농업생명공학 등 R&D투자를 확대한다. 산·학·연·관 네트워크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을 20개 지구 지원한다.

젊고 영농 의욕이 높은 후계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창업농 1,000명을 선발하여 1인당 7,000만원을 지원한다. 발전가능성이 높은 우수 후계 농업인 1,500명은 1인당 8,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전문 농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경영교육 강화를 위해 농업인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한다(36→122억원).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해 농업자금의 지원효과를 높이고 부실대출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농업종합자금(재정자금 20%, 금융기관자금 80%) 지원 규모도 현행 7,511억원에서 8,761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물 안정성 관리 강화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축산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친환경 농업과 농식품 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42개소에서 60개소로 늘리고, 생산·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3개소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농산물 생산에서 수확 후 관리단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2004년 시범 도입한 우수농산물관리(GAP) 사업비도 확대한다(26→38억원).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인증 및 사후관리 전담조직 설치를 신규로 지원한다(11억원).

농업유통 효율화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 효율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산지의 규모화·표준화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해 산지유통 활성화사업을 집중 지원할(5,350→5,442억원) 계획이다.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을 47개소에서 56개소로 확대하고, 농산물 포장 및

하역기계화(222개소→294개소), 파렛트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76→89억원)도 확대 지원한다. 한편, 한·칠레 FTA 후속대책 지원을 위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1,190→1,284억원), 폐업 지원 등 경영안정 지원(668억원)도 차질 없이 반영하였다.

표 4-2 | 농업체질 강화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29,617	31,673	6.9	
• 예산	13,178	14,675	11.4	
- 농업 R&D	4,583	5,280	15.2	- 핵심전략과제 23→32개 등
-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810	228	△71.9	- 금융기관자금 70% 활용
- 농업인 교육훈련	36	122	242.3	- 지역특성화 교육 신규(36억원)
- 농업종합자금 지원	1,502	1,752	16.6	- 총운용 규모 8,761(국고 20%)
-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4	75	78.6	- 1,000ha 규모, 3개소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26	38	49.0	-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등
- 시·도 가축방역	305	516	69.2	- 공익 수의사(80명) 신규
- 물류기기 공동이용	76	89	16.7	- 600→700천 매, 단가 21.1천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65	180	9.3	- 47→56개소
• 기금	16,440	16,997	3.4	
-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5,350	5,442	1.7	- 공동마켓 1,043 등
- 과수산업 폐업지원	530	603	13.7	- 복숭아 1,498ha 등

화훼재배 유리온실



생산기반 조성·관리

그동안 집중투자가 이루어진 농업 생산기반은 기존사업 마무리 위주로 투자내 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규모 용수개발은 2005년으로 종료하였다. 중규모 용수개발은 계속지구 조기완공 위주로 지원하고 신규지구는 2005년 수준을 유지하여 전체 사업지구를 110개에서 101개로 조정하였다.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간척사업은 새만금지구 등 현재 시행 중인 10개 지구(3,460억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대구혁경지정리 신규착수 물량 축소(4.9→4.5천ha), 밭 기반 정비 사업량 축소(4.7→4.4천ha) 등 농지기반 정비사업도 지원 규모를 축소한다(3,073→2,726억원). 금강지구·영산강지구 등 대단위 농업개발 5개 계속 지구는 2005년 수준(910억원)을 반영하였다.

반면, 재해예방 관련 사업은 재해위험시설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2005년 수준으로 지원하되(3,454억원), 재해위험이 큰 지구를 중심으로 완공 위주로 지원한다. 상습침수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배수개선사업은 준공지구를 2005년 11개에서 16개로 확대한다. 서산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 설계비(20억원)를 신규로 반영하였다.

표 4-3 생산기반 조성·관리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20,384	20,331	Δ0.3	
• 예산	16,373	16,334	Δ0.2	
- 중규모 용수개발	2,722	2,436	Δ10.5	-110→101지구
- 농지기반 조성	2,051	1,885	Δ6.6	-대구혁경지정리 164천ha 등
- 대단위 농업개발	910	930	2.2	-5개 계속지구 910 등
- 수리시설 개보수	3,454	3,454	-	-준공 99, 신규 84지구
- 배수개선사업	2,165	2,179	0.6	-130지구, 188천ha
• 기금	4,010	3,997	Δ0.3	
- 농지조성사업	3,909	3,460	11.5	-새만금 2,200억원 등

임업·산촌 부문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과 산불·병해충 등 산림재해 방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제고에 중점을 둔다.

→ 숲가꾸기 : (2005년)161천ha → (2006년) 307천ha

숲의 다양한 가치와 편익 확보를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소요(2,000→3,000명)도 증액 반영하였다. 국내 목재 자급기반 조성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리기다 갱신 조림 등 경영림 확보를 위한 조림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백두대간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4개소) 및 표지석 설치(10개)를 신규 반영하였다.

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초대형 헬기 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산불 진화 및 감시장비를 확충하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원을 대폭 증원(3,940→5,910명)하였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목 제거를 중점 추진하고(276→889천 본), 예방용 나무주사(520ha) 방제비, 소나무 반출 이동단속 경비 등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산림휴양시설을 확대하고 수목원과 생태숲 등 산림생태자원 보전·관리를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 4-4 산림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9,000	10,158	12.9	
- 숲가꾸기사업	1,475	1,584	7.4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조림사업	546	584	7.0	-리기다 갱신 조림 반영 등
- 국유재산 관리	829	892	7.6	-사유지 매수(18천ha)
-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229	299	30.4	-임산물 생산단지(12개소)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95	507	435.1	-감염목 제거 및 항공방제
- 산불방지대책	167	223	34.0	-산불 진화대(5,910명)
- 헬기 운영	535	700	30.8	-초대형 헬기 2대(1차년도)

■ 해양수산 · 어촌 부문

어가소득 안정 및 어업 구조조정 등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투자에 역점을 둔다.

어업인 소득안정 및 어촌활성화를 위해 어촌관광진흥사업 지원에 역점을 둔다.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 어촌관광단지, 어촌어항복합공간, 다기능 어항 등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이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138→314억원).

WTO/DDA 협상 등 수산 분야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업 구조조정 등 수산자원 회복에 집중 투자한다. 2005년부터 착수한 불법 소형 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를 2006년 중 완료하고(2005년 2,000척, 2006년 500척), 연근해 수산자원 확보를 위하여 2006년 약 600여 척의 연근해 어선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다목장화, 인공어초 시설 등 자원조성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수산물식품 식생활 안전을 위해 수산물 검사시설 ·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원산지 관리, 생산이력제 등 제도적 정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1세기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자원 개발 등 해양과학기술 분야, 해양문화 육성에도 중점을 두고 투자한다. 2006년 제2의 남극대륙기지 건설, 대형 위그선 상용화 개발 등을 신규 착수할 계획이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차질 없는 개최 지원을 위한 유치활동, 박람회장 부지조성 등 예산도 신규 반영하였다.

|표 4-5| 해양수산 · 어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16,991	17,772	4.6	
• 예산	11,542	12,358	7.1	
- 어촌어항 관광진흥	138	314	27.5	-어촌관광단지 등
-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345	534	54.8	-390→600척
- 2012 여수박람회	-	112	순증	-유치활동, 부지조성
• 기금	5,449	5,415	△5.8	
- 비축 및 출하 조절	477	330	△30.8	-정부 비축기능 축소
- 수산물 구매지원	1,298	1,344	3.5	

5. 산업 · 중소기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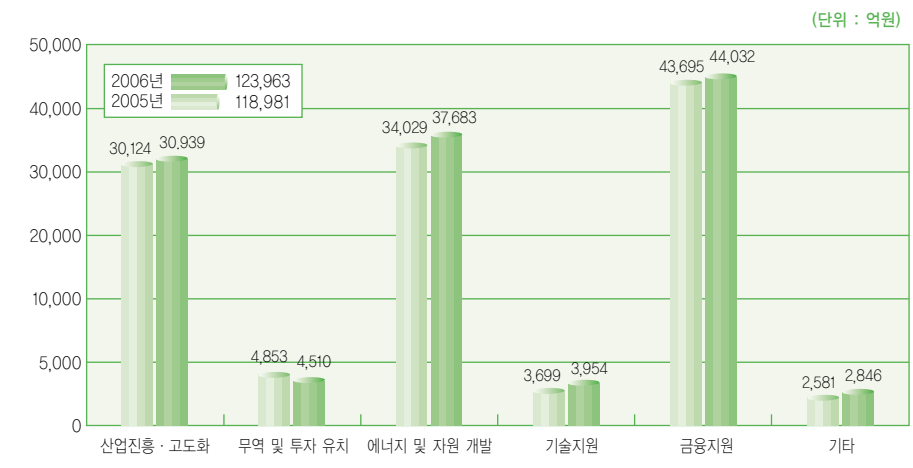
❖ 2006년 산업 · 중소기업 분야 재정지원은 금융지원을 축소함에 따라 2005년 대비 4.2% 증가한 12.4조원 수준이다.

❖ 그러나 금융지원을 제외할 경우 2005년 대비 6.2% 증액하여, 경제양극화 해소 및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미래성장동력사업에 역점을 두고 투자하였다.

❖ 또한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의 정착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에 투자를 강화하였다.

❖ 아울러 지역 혁신역량 강화 및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부산 · 대구 · 광주 등 13개 거점지역 중심으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였다.

|그림 5-1| 산업 · 중소기업 분야 재정투자 계획



5-1 2006년 재정지원 방향

산업고도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지원

외환위기 이후 경제양극화 구조를 타파하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기술개발 촉진 등 산업기술에 재정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에 병행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간, 계층 간, 부문 간 성장격차 완화를 위하여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경기회복 지연,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여력도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고유가 대비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지원 강화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에 고유가 및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태양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 및 해외지원자원 개발을 집중 투자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분산 추진 중인 지역 전략산업의 추진체계를 통합·연계하여 사업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역별 산업여건에 적합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산업·대학·연구소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내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5-2 부문별 주요 지원 내용

■ 산업 진흥·고도화 부문

고부가가치형 생산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신산업 및 인력절감형 투자에 재정지원의 초점을 두고, 지방을 혁신의 주체·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로봇 등 미래 혁신기술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R&D·인력·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조기 산업화를 도모할 것이다. 아울러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품질혁신역량 강화, 품질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품질혁신 기반구축사업 예산을 신규로 지원하였다(신규 35억원).

또한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공급기지화 달성을 위하여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주요 기술 및 품목의 기술개발을 선택·집중하여 지원한다(1,600→1,800억원).

기존 산업단지를 생산과 연구가 조화된 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교육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사업을 확대한다(420→663억원).

한편, 다양화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산·대구 등 4개 지역 2단계 사업과 전북·대전 등 9개 지역 진흥사업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성공 가능성이 큰 신규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는 지역혁신 산업기반 구축사업을 통합하여 2005년 대비 9.4% 증액된 4,265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지방을 혁신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산업·대학·연구소를 연계한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을 적극 지원한다(650→709억원).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은 시·도 자율에 의해 지역혁신과제를 선정·추진하고, 기존 산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의 혁신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표 5-1 산업 진흥·고도화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30,124	30,939	2.7	
• 예산	23,610	24,399	3.4	
- 산업기술 개발	12,110	12,892	6.5	-산업혁신기술 개발
- 지역균형발전	6,096	6,594	8.2	-지역 전략산업 진흥
- 재래시장 활성화	1,268	1,478	16.5	-재래시장시설 개선
- 중소기업 인력유입 인프라	213	194	△8.7	
• 기금	6,513	6,541	0.5	

대형유통점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자생력 확보 지원을 위해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혁신지원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1,268 → 1,478억원).

고급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사업성고가 부진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사업 등 일부 사업은 축소하였다(213 → 194억원).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외국인 투자유치와 선진무역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외국인 경영·생활 환경개선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선진국과의 지식격차가 큰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중점 지원하였다(882 → 1,055억원).

국제 수출통제 체제 강화에 따른 국내 수출입 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전략물자 수출 통제기반 구축사업을 지원하고(19 → 30억원), 수출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대불 자유무역지역 조성은 연차별 계획을 반영하였으며(189억원), 동해와 울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설계비를 신규로 지원하였다(15억원).

또한, BRICs 등 신흥 유망시장의 전략적 개척을 위한 해외 마케팅사업과 세계

일류상품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226 → 229억원).

기타 지원사업으로는 FTA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지원하고(3억원), 중국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중 산업협력사업을 강화하였다(7 → 9억원).

표 5-2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4,853	4,510	△7.0	
• 예산	4,743	4,387	△5.6	
- 외국인 투자유치	942	1,115	18.4	-외국인 투자유치
- 마케팅 지원	1,632	1,646	0.9	-한국무역진흥공사 지원
- 수출보험	500	500	-	
-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214	200	△6.6	
• 기금	109	123	12.9	
- 수출인규배터 지원	40	59	47.5	

또한 내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변모시키고 세계적인 수출 선도 기업군을 발굴, 육성해 나갈 것이다(160 → 134억원). 이를 위해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214 → 203억원),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204 → 203억원) 등을 병행하여 지원하였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에너지 안정공급 및 가격안정 등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원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보급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한다.

국내외 유전개발사업은 원유 자주개발률 10% 달성을 위한 투자를 착실히 지원하였다. 유망 광구에 대한 탐사·개발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정공급능력을 강화하였다(2,918 → 3,833억원). 그리고 유연탄, 우라늄, 철 등 전략광물의 자주개발 및 안정적 공급확보를 위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재원을 확대하였다(655 → 880억원).

베트남 15-1 광구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태양열,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예산을 2005년 대비 45.8% 증액하였다(794→1,158억원).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보급확산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을 보조받거나 융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였다(2,093→2,588억원).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및 집단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였다(7,411→7,636억원).

한편, 석탄·연탄가격 안정을 위한 탄가안정대책비와 폐광·감산에 따른 탄광 종사자의 생활안정지원자금 및 대체산업 창업자금융자 지원 등 석탄산업 합리화를 위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4,744→4,621억원).

표 5-3 에너지 및 자원 개발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34,030	37,683	10.7	
• 예산	22,906	24,709	7.9	
- 유전개발	2,918	3,833	31.4	-유전개발 출자·융자
-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	2,887	3,746	29.8	-기술개발 등
- 에너지 이용 합리화	7,411	7,636	3.0	-에너지 절약시설 등
• 전력산업기반기금	11,124	12,974	16.6	
- 전력수요 관리	1,174	1,219	3.8	-전력부하 관리·효율 향상

기술지원 부문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다양한 산학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산현장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신 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2,348억원→2,679억원).

특히, 중소기업·교수 및 재학생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하고 대학졸업 인력을 중소기업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산학협력실 설치지원사업(70억원)'을 금년부터 신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R&D능력 제고와 함께 맞춤형 고급 기술인력을 지원할 것이다.

표 5-4 기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3,699	3,954	6.9	
• 예산	2,890	3,104	7.8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1,447	1,658	12.2	-중소기업 R&D
- 산학협력실 설치 지원	-	70	순증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 기금	810	850	4.7	
-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800	850	6.3	

이미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상품화를 지원하는 개발기술 사업화에 대해서는 2005년 당초예산 대비 6.3% 증가한 850억원을 지원한다.

■ 금융지원 부문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일반창업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방 소재 영세기업보증을 중심으로 업무를 특화해 나갈 것이다.

기술집약형 기업의 원활한 성장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평가와 신용보증의 연계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융자 중심에서 투자 병행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2009년까지)을 통해 창업투자조합 및 중소기업투자 사모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중점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지속 지원하고(1조 8,000→1조 5,000억원), 집적을 통한 투자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동화사업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표 5-5 금융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43,695	44,032	0.8	
• 예산	8,891	12,033	35.3	
- 신용보증기관 출연	6,500	9,000	38.5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
• 기금	34,804	31,999	△8.1	
- 모태조합 출자	1,200	1,100	△8.3	-창업기업 기술개발
- 소상공인 지원자금	5,100	4,300	△15.7	-창업 및 경영개선
- 중소·벤처창업자금	3,900	3,830	△1.8	-벤처기업 지원
- 구조개선자금	18,000	15,000	△16.7	-자동화 설비 지원
- 협동화자금	2,800	2,800	-	

■ 기타 산업·중소기업 부문

고객 및 성과 지향적인 조직문화의 정착과 정책·혁신의 통합으로 최우수 수준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지식기반 행정체제의 정착에 필요한 응용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정보화 예산을 지원하여 산업자원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12억원).

또한, 산업자원 분야 행정혁신을 위한 혁신교육과정 운영과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 혁신체질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이 곤란한 대구·경북, 전북, 충북 등 지방 중소기업청의 청사를 신축하는 한편, 비연고 직원, 무주택 독신직원을 위한 관사를 지속 구입 및 임차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표 5-6 기타 산업·중소기업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2,581	2,846	10.3	
• 예산	1,895	2,103	11	
-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12	12	-	
- 혁신능력 개발	4	4	-	
- 청사 신축	66	59	△10.6	
• 기금	686	743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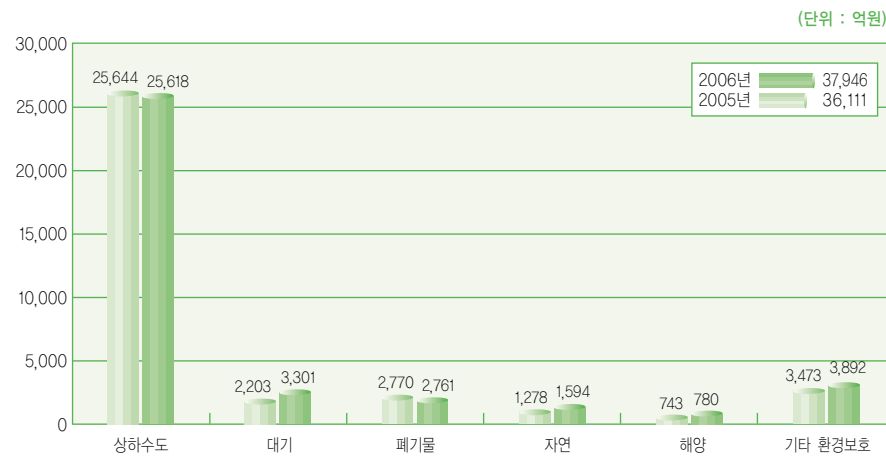
6. 환경보호 분야

❖ 2006년 환경보호 분야 투자는 3조 7,946억원으로 2005년 대비 5.1% 증가한 규모이다. 예산은 5.1% 증가한 3조 1,410억원이고, 기금(4대 강 수계, 수산 발전)은 4.8% 증가한 6,536억원이다.

❖ 환경보호 분야의 내실 있는 투자를 위해 그동안 집중 투자된 상하수도 부문의 투자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점차 중시되고 있는 대기·자연 부문 등의 투자를 확대하였다.

❖ 농어촌 등 급수취약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 환경성 질환 예방체계 구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그림 6-1 환경보호 분야 재정투자 계획



6-1 2006년 재정지원 방향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민간자본 활용

중소 도시지역에 비해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하수관거 정비에 민간의 자본과 이니셔티브를 적극 활용(BTL)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중점 투자

수도권의 대기질을 파리 등 선진국의 주요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재정투자를 병행 추진한다. 한편, 공공시설 내 공기질 관리, 생활소음 저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순환체계 구축

제품설계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재활용 및 소각 처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 또한,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를 확고히 정착시킨다.

자연보전 및 새로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강화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보건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물자원 보전, 환경성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밖에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6-2 부문별 주요 지원 내용

■ 상하수도 부문

그동안 집중 투자된 부문으로 투자 규모를 축소하되, 급수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식수원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하수관거 정비에 BTL 방식을 활용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한다. 동 부문은 2005년 대비 0.1% 감소한 2조 5,618억원을 지원하였다.

상수도 보급률이 높은 중소 도시지역(2003년 93.9%)의 시설 개발 및 개량은 실소요 위주로 반영하고, 급수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공단폐수 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하수관거 정비에 BTL 방식을 병행하여 민간의 자금 및 이니셔티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수계 전체 오염 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는 비점(non-point)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오염총량제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4대강 유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간다.

|표 6-1| 상하수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25,644	25,618	Δ0.1	
• 예산	19,475	19,191	Δ1.5	
-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1,467	1,698	15.7	-농어촌, 도서 지원
- 공단폐수 처리시설	1,271	1,264	Δ0.6	
- 하수관거정비	5,357	4,907	Δ8.4	-BTL 병행 추진
• 기금(4대 강 수계)	6,169	6,427	4.2	
- 한강 수계	3,450	3,555	3.0	

하수처리장



■ 대기 부문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대도시 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공공시설 내 공기질 관리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동 부문은 2005년 대비 49.8% 증가한 3,301억원을 지원하였다.

2006년 1월부터 정밀검사에 불합격한 수도권 내 운행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법적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전기 하이브리드 차 보급, 중소 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등 제작차 및 사업장 지원도 실시한다.

수도권 외 5대 광역시 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시내버스와 청소차를 청정연료인 천연가스(CNG) 차량으로 대체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산업단지 주변의 완충녹지 조성을 지원하고, 공공시설 내 실내 공기질 오염실태 조사, 소음자동측정망 구축 등 생활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이 밖에 기후변화 영향평가, 교토메커니즘 이행방안 마련,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구축 등 교토의정서 발효(2005년 2월)에 따른 국내 기후변화협약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표 6-2I 대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2,203	3,301	49.8	
- 수도권 대기개선 대책	1,081	2,081	92.5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책	-	100	순증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577	498	△13.7	-충전소 설치용자 축소
- 생활소음 종합대책	-	40	순증	
-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	40	순증	

천연가스버스



폐기물 부문

소각·매립 등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동 부문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2005년 대비 0.3% 감소한 2,761억원을 지원하였다.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매립·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되,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투자 규모를 조정한다.

난분해성 합성수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사용 시범사업(서초구 등 3개 지자체)을 실시하고, 농촌지역에 장기간 적체(2004년 411천 톤)된 폐비닐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등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활용기반시설 투자를 지속하되, 사전에 집행여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한다.

또한, 폐기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배출농도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간다.

표 6-3I 폐기물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2,770	2,761	△0.3	
- 쓰레기 처리시설	1,077	899	△16.5	-소각·매립시설 등
- 농촌 폐비닐 처리	54	130	140.7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	29	순증	-1개소(전주시)
- 다이옥신 측정분석기반 구축	-	7	순증	

■ 자연 부문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와 더불어 생물자원 및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동 부문은 2005년 대비 24.7% 증가한 1,594억원을 지원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검토기법 개발, 전략환경평가 운용기반 강화 등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여가문화 확산 등에 대응하여 자연 친화적인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훼손지 복구, 해설요원 운영 등 국립공원 내 탐방인프라 정비에 역점을 둔다.

멸종 위기 동식물 보호, 야생 동식물 밀렵·밀거래 방지 등 동식물 보호사업에 지속 투자하고, 생물다양성협약(1992년 6월)에 따른 국가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자생생물 조사 등 생물자원보전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동강 유역 사유지 매입·관리, 특정 도서(153개) 모니터링·감시 강화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생태계 보전 노력을 강화한다.

표 6-4 자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1,278	1,594	24.7	
- 전략환경평가 운용기반 강화	-	4	순증	
- 국립공원사업	610	708	16.1	- 훼손지 복구 등
-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방지	14	14	-	
-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	53	순증	
- 특정 도서 관리	-	7	순증	- 독도 등 153개 도서

■ 해양 및 기타 환경보호 부문

환경 친화적인 연안 조성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환경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경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환경보건 등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해양 부문은 2005년 대비 5.0% 증가한 780억원, 기타 환경보호 부문은 2005년 대비 12.1% 증가한 3,892억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원 발생 및 폐기물 투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연안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연안 정비에 중점 투자한다.

2010년 환경기술(ET)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원천기술 및 상용화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 대학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소기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환경 친화적 기업경영을 유도하고, 환경산업체가 중국 등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수출 협력단 파견 등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환경보건 투자를 확대한다.

표 6-5 해양 및 기타 환경보호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4,216	4,672	10.8	
• 해양	743	780	5.0	
- 연안정비(예산)	174	207	19.0	
-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기금)	20	20	-	
• 기타 환경보호	3,473	3,892	12.1	
-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 개발	882	930	5.4	- R&D사업
- 환경개선자금 융자	600	540	△10.0	
- 환경성 질환 예방체계 구축	8	15	87.5	

7. 문화 · 관광 분야

❖ 2006년도 문화관광 분야의 재정투자 규모는 2.9조원으로 2005년보다 9.7% 증가하였으며, 예산 기준으로는 10.1% 증가한 1.7조원, 기금은 9.2% 증가한 1.2조원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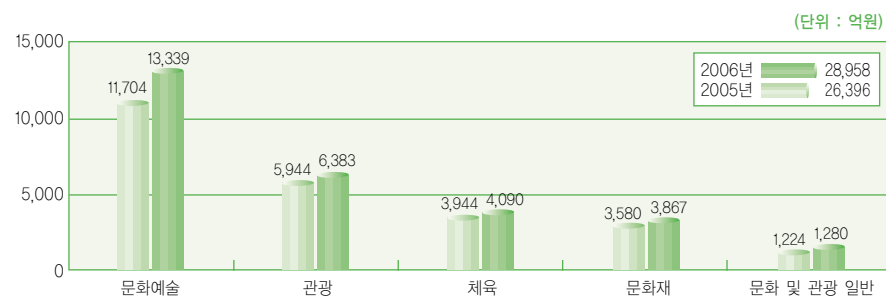
❖ 2006년도 문화 · 관광 분야 재정투자는 국민이 다양한 문화와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소득 수준 상승 및 주 40시간제 근무 확산에 따라 증대된 여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 관광 · 스포츠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특색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보급을 통해 문화체험기회를 신장하였다.

❖ 또한 21세기 문화강국을 실현하고 국민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및 주민의 문화예술교육, 소외 지역 · 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 문화콘텐츠, 관광 · 스포츠 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획 · 마케팅 지원 등 기반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뒷받침하였다.

[그림 7-1] 문화 · 관광 분야 재정투자 계획



7-1 2006년 재정지원 방향

국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기반투자 확대

국민의 기본적인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그동안 국가적 중추 문화시설 및 지역 공공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고 운영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시설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평가이다.

이에 따라 BTL 방식을 통한 생활권역 중심의 문화 · 관광 ·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프로그램 지원으로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따른 문화 거점도시 조성, 소외지역 문화환경 조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 및 문화적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문화 소외지역 · 계층 지원 등 문화복지 강화

특히 문화 · 관광 바우처 및 공연관람료 할인제도인 사랑티켓제도 확대,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으로 지역별, 계층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등 문화복지 정책을 강화하였다.

문화산업 고도화 및 관광 ·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문화 · 관광 · 스포츠 산업은 산업기반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창작소재 및 관광 프로그램 부족, 판매 · 유통시스템의 낙후로 국제경쟁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게임 · 영화 등 문화콘텐츠 제작기반 확충 및 문화기술대학원 설립 등을 통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산업을 미래핵심전략으로 육성해 나가며 역사 · 문화 · 생태 관광자원 개발 및 대중골프장, 여가 캠핑장, 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 등을 통해 관광 · 스포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7-2 부문별 주요 지원 내용

■ 문화예술 · 산업 부문

국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및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적극 지원하였다.

➔ 문화예술 · 산업 : (2005년) 11,705억원 → (2006년) 13,339억원(전년 대비 14% 증)

국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디지털도서관, 명동국립극장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새로이 문화예술단체 전용 연습공간(5억원),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5억원) 조성 등 국가기반 문화시설 등을 신규 반영하였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건립(274→312억원)을 대폭 증액 지원하였다.

또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소외 계층 및 지역에 대한 문화권 신장을 위한 사업을 중점 지원하였다. 국악 · 영화 · 연극 · 무용 등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사업(67→104억원)은 대상학교(3,217→3,530개) 및 문화예술 교원연수 프로그램(27→41개)을 확대하였다. 문화 소외 지역 ·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63→75억원) 및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35→62억원)을 확대하여 주민의 문화생활 격차를 해소하였다.

문화산업은 게임 · 영화 · 애니메이션 등 공동 제작시설 등 H/W와 기술개발 · 인력양성 · 마케팅 등 S/W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소 건립 · 운영(10→25억원) 및 디지털시네마시스템(14억원) 및 문화기술(CT)대학원 설립(59억원)을 신규 반영하여 기술개발 · 고급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저작권 교육 및 해외저작권 보호(22억원)사업을 신규 반영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매체선택권 보장 및 다양한 여론형성을 위해 신문발전기금 출연(250억원), 신문유통원 설립 · 운영(100억원) 등 언론의 공익적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 지원하고(150억원), 지역 문화산업의 R&D 및 창의적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문화산업 연구센터 설립을 지원하였다(25억원).

한편, 동북아 시대를 주도할 지역거점 문화도시 육성을 위해 광주 문화중심도시 상징물인 '아시아 문화의 전당'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경주 역사문화도시(40억원) · 전주 전통문화도시(30억원)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표 7-1 문화예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11,705	13,339	14.0	
• 예산	8,333	8,891	6.7	
-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1,031	2,085	102.2	-문화의 전당 부지매입 등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67	104	55.2	-대상 학교 수 확대 등
- 문화산업인프라 구축	40	84	110.0	-CT대학원 설립 등
• 기금	3,372	4,448	31.9	
- 사회취약계층 등 문화예술교육	35	62	77.1	

■ 관광 부문

여가수요에 대비하여 테마형 · 체험형 관광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해외홍보 강화 및 해외관광센터 설립 등을 중점 지원하였다.

➔ 관광산업 : (2005년) 5,944억원 → 6,383억원(전년 대비 7.4% 증)

➔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 (2004년) 북경 → (2005년) LA → (2006년) 방콕

지역별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컨설팅 · 평가 · 인센티브 제고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하였다. 특히 지역의 독특한 역사 · 문화 · 관광 · 레포츠 자원을 개발하는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672→1,030억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체험형 생태 · 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110→132억원)도 적극 지

원하였다.

아울러 기업 주도의 주거·휴양·관광·레저·교육·의료 등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레저도시 조성(15억원)사업을 신규로 지원하였다.

한편 관광공사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413억원→467억원) 및 해외 홍보사업(101→110억원)을 적극 지원하며, 해외관광문화센터를 2004년 북경, 2005년 LA에 이어 2006년에는 방콕에 설립하여 한국문화와 관광지를 적극 홍보한다.

상주 도남서원



상주 동학교당



체육 부문

국가대표 선수 육성 등 전문체육과 주민의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체육 부문도 적극 지원하였다.

→ 생활체육공원 : (2005년) 105개소 → (2006년) 121개소

→ 일반 선수 대비 장애인 선수 수당 : (2005년) 60% → (2006년) 80%

국민이 쉽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기반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지원하였다.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확충을 위해 지방 체육시설(515억원)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국민체육센터(10개소), 학교운동장 잔디 우레탄(89개소), 축구센터·공원

(17개소),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5개소) 등 다양한 주민친화형 시설들도 대폭 확충하였다.

아울러 전국 시·군별로 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 배치(3~4인→4~5인)하고, 새로이 노인 체육활동 전담 지도자(250인) 배치 및 노인종목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주민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장애인 체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고, 장애인 우수선수 연금 지급액을 일반선수의 60%에서 80% 수준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장애인 체육활동사업(49억원→109억원)을 강화하였다.

전문체육 부문은 제2선수촌 이전사업 지원(61억원), 국가대표 훈련일수 확대(105일→150일) 및 수당 인상(3→3.5만원) 등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표 7-2 체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3,944	4,090	3.7	
• 예산	1,136	1,487	30.9	
- 전문체육 육성	261	311	19.2	- 제2선수촌 이전
- 지방 체육시설 지원	254	515	102.8	
• 기금	2,808	2,603	△7.3	
- 스포츠산업 융자	118	158	33.9	- 스포츠 서비스업체 신규 지원

문화재 부문

문화재 원형의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기능을 강화하였다.

→ 광화문 복원 및 전면광장 조성(신규) : 30억원

→ 문화재 종합병원 건립 : 20억원 반영

문화재의 과학적인 원형보존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의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위해 증대된 자치단체의 보수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극 지원(1,610→1,762억원)하고, 경복궁 복원(90억원) 및 궁·능원 보수정비(85억원)사업은 원형에 부합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관광자원화를 통해 문화재 향유기반을 적극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유교문화권(131억원), 남해안권(86억원)의 관광자원화사업 및 백제역사 재현단지(89억원)사업은 관광과 적극 연계되도록 지속 지원하고, 국립 고궁박물관 조성·운영(60→87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체계적인 문화재의 진단·치료·복원을 위해 문화재 종합병원 건립(20억원) 등 조사연구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부족한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통문화연수시설 건립(30억원) 등을 통해 국립 전통문화학교 교육기능을 강화하였다.

문화재 종합병원 조감도



8. 국방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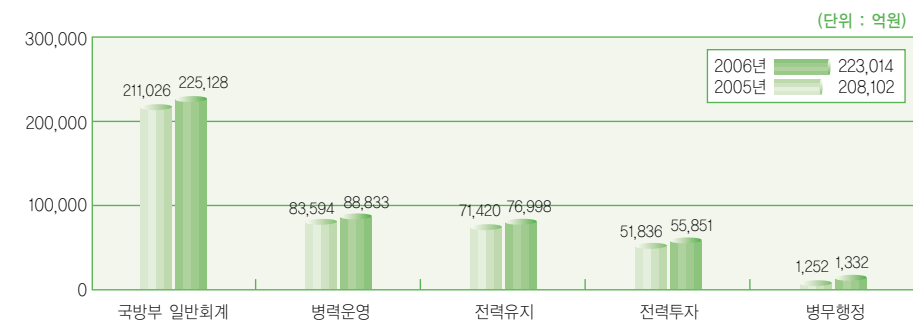
❖ 2006년 국방 분야의 재정투자 규모는 22.3조원으로 2005년보다 7.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2005년 대비 6.7% 증가한 22.5조원 수준이다. 2006년도 국방재정투자는 국방개혁과 장병복지 향상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병력집약적인 군구조에서 기술집약적인 첨단 전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F-15K 전투기, 이지스함(KDX-III) 등 핵심전력 위주로 전력투자를 강화하고, 첨단 무기체계를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국방 R&D투자를 확대하였다.

❖ 아울러,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장병의 사기·복지 증진을 위해 사병봉급을 인상하고, 사병내무반 개선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등 복무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 한편,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구비되었으며,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신설되고 방위사업법도 제정되었다.

[그림 8-1] 국방 분야 재정투자 계획



8-1 2006년 재정지원 방향

국방개혁 뒷받침을 위한 투자 확대

우리 군은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적인 전력증강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도 병력 위주의 양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크게 변화하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와 현대전의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하반기에 국방개혁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개혁방안에 따라 2020년까지 병력을 68만 명 수준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슬림화해 나가되 핵심전력은 증강하는 한편, 병영문화·군 사법제도·예비전력제도의 개선 등 폭넓은 개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군구조로 변모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 국방 분야 재정투자는 장기적으로 이 같은 국방개혁을 지원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존전력 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전력투자는 핵심전력 위주로 강화

육·해·공군의 통합적인 전력증강을 위해 핵심전력에 집중 투자하고, 첨단 무기체계를 자체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방위사업청 발족에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였다.

병영문화개선 및 유류비 등 중점 지원

내무반을 침대형으로 전환하는 등 병영시설을 조기에 현대화하고 사병 봉급을 인상하는 등 병영문화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와 함께 부사관 확대, 공공요금 현실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군 유류비 소요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다.

8-2 부문별 주요 지원 내용

국방개혁 뒷받침을 위한 핵심전력 증강

핵심전력 위주로 투자를 집중하고 첨단 무기체계를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확대하였다.

→ 연구개발비/국방비 비중 : (2005년) 4.5% → (2006년) 4.8%

자위적 방위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F-15K 전투기, 이지스함(KDX-III), K1A1 전차 등 핵심전력 위주로 투자를 확대한다. 독자적 감시·정찰 체계 구축을 위한 C4I/전자전 투자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전방의 병력집약형 경계시스템을 정보화, 과학화된 경계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나아가 미래형 첨단 무기체계를 자력 개발할 수 있도록 국방 R&D투자 비중을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2006년도 국방비 중 국방 R&D투자 비중을 전년에 비해 0.3% 증가한 4.8% 수준으로 확대한다. 2006년 예산에는 특히, 국내 항공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한국형 헬기(KHP)를 자체 연구 개발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새로이 반영하였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2005년 4월부터 시행된 '주한 미

[표 8-1] 전력투자비(일반회계 기준)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72,987	74,994	2.7	
- 기동 및 타격	8,299	8,948	7.8	-K1A1 3,091
- 해상 및 상륙	12,439	13,550	8.9	-KDX-III 4,051
- 공중 및 방공	15,738	16,737	6.3	-F-15K 9,334
- C4I 및 전자전	3,669	3,975	8.3	-공중조기경보기 372
- 지원전력	25,308	22,804	△9.9	
- 연구개발	7,535	8,980	19.2	-국방비 대비 4.8%
(경상비 등 포함시)	(9,293)	(10,845)	(16.7)	

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주한 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를 2006년도부터 신설하여 사업추진을 뒷받침한다.

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획득 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및 각 군에 분산되어 있던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방위사업청이 2006년 1월 1일부터 출범하게 된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국방예산 중 전력투자비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F-15K



K1A1



■ 병영문화 개선 및 장병 사기 · 복지 증진

경상운영비는 병영문화를 선진화하고 장병의 사기 ·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원하였다.

→ 경상운영비/국방비 비중 : (2005년) 65.4% → (2006년) 66.7%

사병내무반은 현재의 노후 · 협소한 침상형(0.7평/인)에서 분대 단위 침대형(2.0평/인)으로 순차적으로 개선하되 민간자본투자(BTL) 방식을 병행하여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2006년도에는 전년 대비 27.6% 증가한 6,981억원을 지원하여 육군 78개 대대, 해 · 공군 74동 등을 새롭게 개선하되 전방의 경우 군구조 개편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 공법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민간자본(BTL)을 통해 126동이 추가 건립될 예정이다.

2006년 중 사병봉급은 40% 인상되며(상병 기준 4.6→6.5만원), 항공수당 및 잠수함수당도 10% 인상된다. 또한, 병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인터넷 PC를 장병 10명당 1대씩 이용토록 민간자본 등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한편, 전군의 분대장에게 월 2만원씩 지휘활동비를 새로이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군 의료사고를 계기로 현역병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을 대폭 증액(41→184억원)하고, 우수 군의관 확보를 위해 장기 군의관 수당도 적정 수준 인상한다.

직업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인아파트 개선사업도 BTL 방식을 활용하여 2006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한편, 2006년 예산에는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안보태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류비를 현실화하여 반영하였으며, 무기체계의 첨단화 · 과학화에 따라 교육훈련 및 국방정보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게 된다.

침대형 내무반



표 8-2 경상운영비(일반회계 기준)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138,039	150,134	8.8	
- 인건비	69,828	74,754	7.1	-상병 : 월 4.6→6.5만원
- 급식 및 피복	13,766	14,081	2.3	-급식 및 피복 품질 개선 등
- 시설 건설	9,868	11,640	18.0	-육군 78대대, 해공군 74동
- 교육훈련 등	6,398	6,878	7.5	-전문요원 양성 등
- 장비운영 연료	3,707	5,443	46.8	-유류단가 현실화
- 기타	34,472	37,338	8.3	

9. 통일 · 외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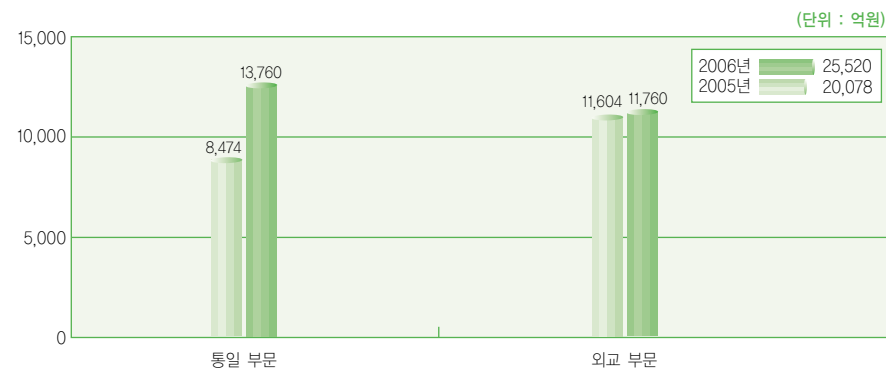
❖ 2006년 통일 · 외교 분야는 2005년도 대비 27.1% 증가한 2.6조원으로 편성하였다.

❖ 통일 · 외교 분야는 남북 간 긴장완화와 주민 · 사회문화 · 경제 교류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력 규모에 상응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였다.

❖ 통일 부문은 농업협력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확대와 의약품 제공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을 확대하였다.

❖ 외교 부문은 우리나라 경제력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 강화를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ODA) 예산 및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을 확대하였다.

그림 9-1 통일 · 외교 분야 재정투자 계획



9-1 2006년 재정 지원 방향

통일 부문 예산은 남북협력사업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2006년도 통일 부문 예산은 북한의 경제회복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북 경제협력을 대폭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적 지원사업 및 사회문화 교류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남북 간 긴장완화 및 북한의 개혁 · 개방 지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증진의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외교 부문 예산은 국제개발협력(ODA)을 확대하고 국제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

2006년도 외교 부문 예산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 DDA 협상 등 국제적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 경제력 규모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ODA) 및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 콜센터 설치 등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외교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9-2 부문별 주요 지원 내용

■ 통일 부문

2006년 통일 부문에는 전년 대비 62.4% 증가한 13,760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농업·경공업 협력 등 남북경협사업의 대폭 확대와 함께 인도적 사업 및 사회 문화 교류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대된 결과이다.

통일 부문 재정투자는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포함한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루어진다. 통일 부문 재정지원은 주로 남북한 간 긴장완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에 소요된다. 남북 관계의 가변성을 감안하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규모를 2005년 5,000억원에서 2006년 6,500억원으로 대폭 증가시켰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협력 지원, 교류협력기반 조성, 인도적 지원, 경수로 사업 등을 위해 쓰인다. 남북 간 사회문화사업의 추진과 공동 체육행사 개최 등을 위해 1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등 이산가족교류 지원을 위해 206억원을 지원하였다. 쌀 40만 톤 및 비료 30만 톤 지원을 위해 2,62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단체 및 대북 구호활동 지원 등 인도적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개성공단 개발, 신동력 경협사업 등 남북경협사업 추진을 위해 5,629억을 편성하였으며, 경수로사업 종료에 따른 청산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청산 비용 2,041억원을 반영하였다.

|표 9-1| 남북협력기금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7,400	12,581	70.0	
- 교류협력기반 조성	1,781	5,629	216.1	-신동력 경협사업 추진
- 경수로사업	1,092	2,041	86.9	-청산비용 반영
- 인도적 지원	1,865	2,188	17.3	-의약품 지원 등 확대
- 기타	2,662	2,723	2.3	

■ 외교 부문

2006년 외교 부문에는 일반회계 예산과 관련 기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3% 증가한 11,760억원이 편성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출연금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ODA) 및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

외교 부문 재정투자는 외교부 일반회계 예산과 대외경제협력기금·국제교류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교 부문에 투자되는 재원은 국제적 경제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사회에의 기여도 강화에 주로 쓰이게 된다.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 등 국제개발협력(ODA)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ODA/GNI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남아시아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5,000만 달러 중 2,000만 달러를 본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개도국에 대한 협력사업(해외봉사단 파견, 베트남 중부지역 병원 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역할 강화를 위하여 국제기구분담금을 전년 대비 26.4%(원화 기준) 증액하였고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를 잘 아는 소관부처로 국제기구분담금을 일부 이관하였다(농림부, 환경부 등 14개 부처에 294억원 이관). 또한 동시다발적 FTA 협정 추진 및 DDA 협상 강화 등 국제 통상외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발굴 단계부터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 체계적 평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

|표 9-2| 국제교류기금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397	491	23.7	
- 한국학기반 확대	81	94	16.0	-교수직 및 강좌운영 지원 등
- 한국학전문가 육성	42	47	11.9	-펠로십 및 장학제도 등
- 인적교류	22	29	31.8	-인사교류사업, 포럼 및 국제회의 개최
- 문화교류	77	88	14.3	-문화교류 협력 지원 등
- 재외동포교류	113	156	38.1	-재외동포재단 사업비
- 기타	62	77	24.2	-기금관리비 등

다. 또한 지원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와의 협조융자, 수출금융과의 혼합신용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제교류기금은 한국학 전문가 육성과 인적 교류 및 문화 교류, 재외동포 교류 등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한국학 전문가 육성사업 등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에 지원하는 재외동포교류사업비를 전년 대비 38.1% 증액된 156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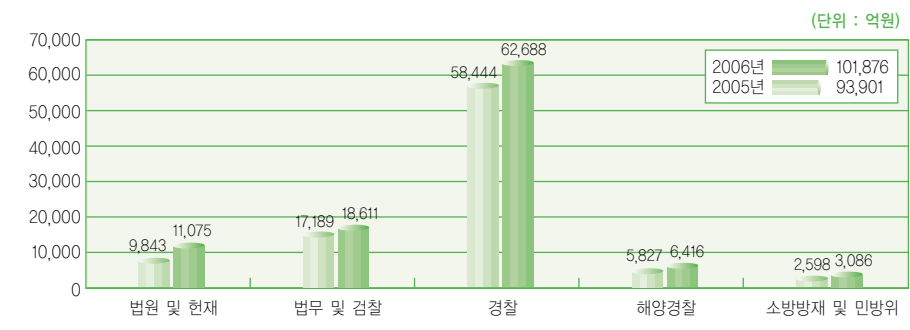
세계한상대회 개막식



1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 2006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05년 대비 8.5% 증가한 10.2조원으로 편성하였다.
- ❖ 대법원은 국선번호 확대 등 사법제도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재정을 중점 투자한다.
- ❖ 법무부는 저소득층의 법률구조 확대, 재소자의 처우개선 및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관리체계 강화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 경찰청은 수사의 과학화·정보화 장비를 지속 확충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예방순찰활동을 체계화하는 등 치안서비스를 확대한다.
- ❖ 해양경찰청은 대형 함정, 항공기 등 해양 광역경비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해상치안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해상활동을 보장한다.
- ❖ 소방방재청은 상습침수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 정비 등 예방투자사업을 확대하여 사전예방적 재난관리에 주력한다.

그림 10-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투자 계획



10-1 2006년 재정지원 방향

그동안 인권보호 및 치안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투자 확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00~2004년 연 평균 10.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 분야 예산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7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법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력 증원, 보수 인상, 관련 시설 및 장비 보강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데서 기인한다. 이에 따라 법률구조 확대, 수용환경 개선, 치안역량 강화, 해상치안력 향상 및 재난대응능력 제고 등의 효과가 있었다.

아직 인권의 사각지대 상존, 치안역량 및 사전예방적 재난관리 미흡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 재소자 처우개선, 수사의 과학화, 지역치안·해상치안 역량 강화 및 사전예방적 재난관리 능력 향상 등은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2006년 예산에서는 인권보호 확대, 치안역량 강화 등에 중점 투자

이를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006년도 예산 규모는 10.2조원으로 2005년 9.4조원 대비 8.5% 증액된 수준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국선변호 및 법률구조 대상 확대, 수용환경 개선,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관리 등에 지원을 강화하였다.

과학수사장비를 지속 확충하여 범죄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예방순찰활동을 체계화하는 등 지역 치안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 위주의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국제해양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해양주권 확보와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국 수준의 해양 광역경비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광역위성통신망 구축, 노후함정 대체 및 항공기 도입 등에 지원을 확대하였다.

사전예방적 재난관리를 위해 상습침수지역 등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재난발생시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형 헬기 도입 등 소방장비 현대화 또한 추진한다.

10-2 부문별 주요 지원 내용

■ 법원 및 현재 부문

2006년 법원 및 현재 부문은 사회·경제적 약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 국선변호료 확대 : (2005년) 174억원 → (2006년) 350억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형사사건에 있어 사선변호인이 없는 모든 구속 피고인 및 영장실질심문단계의 피의자까지 국선변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6년 국선변호 예산을 2005년 대비 176억원을 증액한 350억원을 반영하고 그 시행성과를 보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민법이 개정(2005년 3월 2일)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신분등록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59→155억원).

표 10-11 법원 및 현재 부문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3,218	3,903	21.3	
- 국선변호료	174	350	101.1	-국선변호 대상 확대
- 호적업무 전산화	59	155	162.7	-신분등록시스템 구축

■ 법무 및 검찰 부문

2006년 법무 및 검찰 부문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확대하기 위해 대상자를 4.3% 확대하고 수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법률구조 대상 : (2005년) 1,756만 명 → (2006년) 1,960만 명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법률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법률구조 대상자를 2005년에 이어 추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참전유공자, 월 평균 소득 220만원 이하(2005년 200만원 이하) 근로자 등도 구조대상자에 포함 될 예정이다(210→232억원).

교정시설의 수용과밀을 해소하고(1.27→1.4평) 열악한 수용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키 위해 부족·노후 교정시설의 신·증축, 수용실 개수대 설치,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748→777억원). 특히 출산을 저하로 군복무 대상인력 감소에 따라 교도소 외곽경비시스템을 전자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고(100억원) 신규 교정시설 확충은 재정여건 및 설치·운영상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성공적 정착과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구료비 등 수용경비 확충을 통하여 18만 명에(2005년 말 기준)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보호관리 체계도 강화한다(40→61억원).

표 10-21 법무 및 검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4,942	5,417	9.6	
- 법률구조	210	232	10.5	-법률구조 대상자 확대
- 수용 관리	748	777	3.9	-재소자 처우·환경개선
- 전자경비시스템	-	100	순증	-교도소 외곽경비 개선
- 외국인 관리	40	61	52.5	-외국인 보호관리 강화

■ 경찰 부문

2006년 경찰 부문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등에 재정투자를 강화하였다.

→ 112순찰차 5분 이내 현장출동률 : (2005년) 80.4% → (2006년) 83.6%

범죄의 지능화·광역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장비(사이버 범죄 수사장비, 자외선 지문감식기, 열화상 카메라 등) 및 디지털 무선망(TRS) 등 정보통신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경찰 종합상황실 전경 및 범죄차량 감식활동



예방순찰활동을 체계화하고 5분 안에 현장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치안력 극대화를 위해 112 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 구축(12→15억원)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범죄수사용 차량 296대 신규 보급 및 내용년수 경과 112 순찰차 교체 등 차량확보 예산도 대폭 확대하였다(291→397억원). 또한 교통정보센터 운영, 첨단 신호체계 도입,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등 과학적·체계적인 교통관리체제를 구축하여 2009년까지 OECD 평균 수준 이하로 교통사고를 감축할 계획이다(1,898→2,006억원).¹

¹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2005년 3.9 → 2009년 2.0명.

노후한 경찰서 개축 및 경찰종합학교 신축·이전 등 시설개선을 위해서도 적정 소요를 반영하였다(1,532→1,672억원).

표 10-3 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15,545	15,990	2.9	
- 차량관리	291	397	36.4	-112 순찰차 교체
- 과학수사장비	64	99	54.7	-수사장비 보강
- 교통안전활동	1,898	2,006	5.7	-무인단속 장비 확충
- 시설개선	1,532	1,672	9.1	-경찰서 3개소 신축

해양경찰 부문

2006년 해양경찰 부문은 어업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대형 함정, 항공기 등 해양 광역경비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EEZ 현장대응시간 : (2005년) 11.6시간 → (2006년) 10.4시간

광역해역에서의 효율적인 경비강화를 위해 대형 함정 2척 건조비를 반영하고 해양수색구조협약에 따른 해상구조체제 구축을 위해 항공기 3대(비행기 2, 헬기 1)를 추가로 도입하는(190→230억원) 등 EEZ 해역 내 어업자원 보호 및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광역장비 위주로 재정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 해역 지휘가 가능한 광역위성통신망사업(신규 24억원)을 추진하여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연안 해역 안전관리를 위한 헬기 열상장비, 고속 제트보트 등 해상 수색·구조장비 보강(신규 72억원)으로 바다안전망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선령초과로 치안임무 수행에 차질이 있는 노후 중·대 함정 조기 대체 건조에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318→577억원).

대형 함정(태평양 1호, 3,000톤)과 헬기를 이용한 입체적 수색구조 활동



표 10-4 해양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2,963	3,178	7.3	
- 광역위성통신망 구축*	-	24	순증	-광역 지휘체계 구축
- 항공기 도입	190	230	21.1	-항공수색 및 구조강화
- 노후함정 대체건조	318	577	81.4	-대체건조 확대

* 2005년도에 독도 경비 강화를 위해 예비비로 5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소방방재·민방위 부문

2006년 소방방재·민방위 부문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재난에 대한 신속한 현장투입이 가능하도록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였다.

→ 5분 이내 재난현장 출동률 : (2005년) 68% → (2006년) 70%

재해에 대한 사후복구 위주의 대응에서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상습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붕괴위험 지역 등 재해위험이 높은 120개 지구를 2006년에

정비(1,165억원)하고,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하여 방재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난 발생시 강풍 등 악천후에서도 신속한 인명구조, 산불 진화 등이 가능하도록 다목적용 대형 소방헬기를 도입(총사업비 350억원, 2006년 100억원)하는 등 소방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실질적인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풍, 호우, 대설 등 풍수해 발생시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를 대상으로 한 재해보험제도를 시범적으로 9개 기초자치단체에 도입·시행하며(17억원),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부담해주므로 동 보험에 가입한 피해주민은 저렴한 보험료 부담만으로 실질적인 복구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표 10-5 소방방재·민방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2,099	2,625	25.1	
- 재해예방투자	1,558	1,815	16.5	-위험지구 정비 확대 등
- 재난대응 등	324	404	24.6	-119시설·장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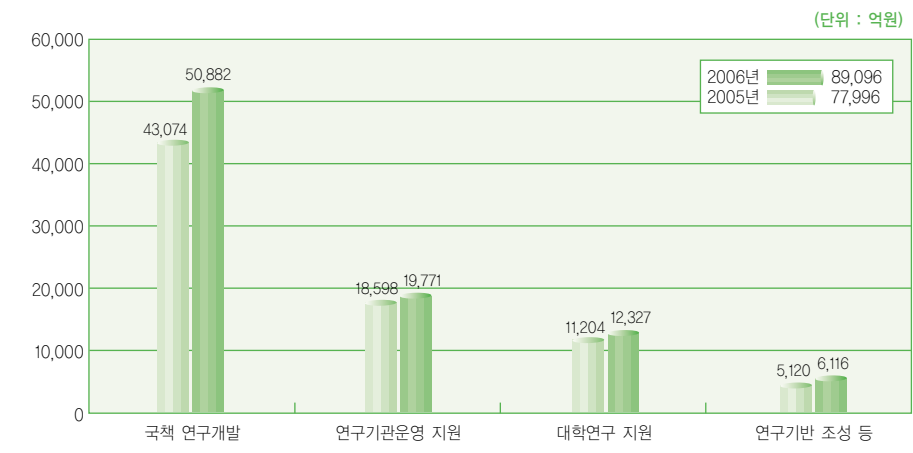
11 R&D 분야

❖ 2006년 R&D 분야의 재정투자 규모는 2005년 대비 14.2% 증가한 8,9096억으로, 예산 7,2조원, 기금 1.7조원이 투입된다. 특히 R&D 분야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2006년에는 2,252억원 규모의 과학기술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 R&D투자는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지원과 지역의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 R&D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핵심 첨단기술 분야 인력양성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도 강화하였다.

❖ 아울러, 중복·분산 투자의 조정, R&D사업 성과평가 강화, R&D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가기술혁신체계(NIS)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그림 11-1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11-1 2006년 재정지원 방향

지속적인 R&D투자 확대로 투자 규모는 선진국 수준

R&D 분야는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2004년 GDP 대비 총 R&D투자 비중이 2.85%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으며, 정부 R&D 투자 규모도 1997년 3조원에서 2005년 7.8조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그러나, R&D투자의 양적 확대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나타나고 있다. R&D투자 사업의 성과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기초연구 투자 미흡, R&D자원의 수도권 집중, 중소기업의 R&D 역량 취약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확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하여 투자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D재원을 전략적·효율적으로 투자

2006년에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성과의 효율적 활용에 역점을 두어 투자한다. 민간 투자가 부족한 기초·원천 연구 및 지방의 혁신역량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민간 부문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기술개발 성과 확산 및 선진적 연구개발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투자효율성 제고 노력도 병행한다.

11-2 부문별 주요 지원 내용

■ 기초·원천연구 확충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 연구역량 잠재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주도권 확보기반을 마련한다.

→ 기초연구 투자 비중 : (2005년) 21.5% → (2006년) 23.7%

신기술 창출의 주도권 확보가 시급하고 산업고도화 및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에 따라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민간 부문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2007년까지 R&D예산의 25%를 기초·원천연구에 투자한다.

창의적 소규모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특정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연구센터, 국가지정연구실 등 기초·원천연구의 핵심기반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 참여와 더불어 포항 방사광가속기,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나노팜 등 대형 연구시설·장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아울러 R&D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순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표 11-1| 기초·원천연구 주요 변동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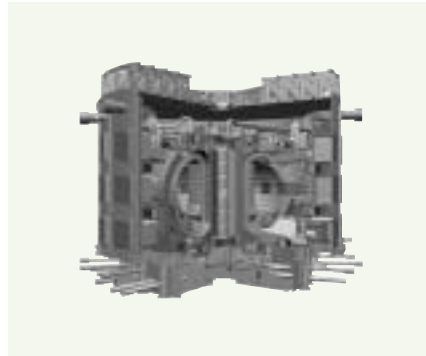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14,460	17,163	18.7	
- 특정 기초연구	671	821	22.3	-지원대상 확대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40	95	137.5	-국제공동개발 참여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부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주장치 모형



■ 지역 혁신역량 강화

지방 R&D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경쟁력 있고 특성화된 분야를 집중 투자하여 지방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

→ 지방 R&D투자 비중 : (2005년) 33.7% → (2006년) 36.2%

지방대 학생 부족, 산업기반 취약 등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역이 ‘필요로 하고’, ‘할 수 있는’ 방식과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로 경쟁력 있고 특성화된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기술개발→지역산업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국가 R&D 예산 중 지방 R&D 비중을 2007년까지 40%로 확대해 나간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지방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을 통해 지역 연구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테크노파크, 지역혁신센터 등 그간 구축해 온 지역별 센터를 활용한 산·학·연 연계 방안도 강구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과학기술 혁신 로드맵에 기초한 권역별 특성화 및 사업 기획·평가 강화를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에도 역점을 둔다.

표 11-2 지방 R&D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22,734	26,168	15.1	
- 지역대학 혁신역량 강화	2,400	2,600	8.3	-신규 사업단 추가 지원
-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421	461	9.5	-지역별 컨소시엄 구성

송도 테크노파크 단지



■ 미래성장동력 육성

대형 연구개발 실용화사업,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선진국 견제를 극복하고 중국 등 후발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정보통신(IT), 에너지·환경기술(ET) 등 미래유망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인간유전체 기능 연구 등 신기술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을 목표로 투자하는 21

세기 프론티어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한국형 고속철도, 자기부상열차, 해수담수화용원자로, 미래형 해양운송체계, 치매치료제 개발 등의 실용화사업을 신규로 지원한다. 특히, 과학기술국채 발행을 통해 경제적 과급효과가 큰 이들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주도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이전기술 실용화 등에 집중 투자한다.

표 11-3 미래성장동력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5,865	7,772	32.5	
-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	724	순증	-5개 사업 지원
- 21세기 프론티어사업	1,888	2,070	9.6	-사업단별 지원 확대

미래형 해양운송체계



고속철도



창조적 인재양성 등 연구기반 조성

창조적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유통·활용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을 강화한다.

기초·원천기술을 담당하는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력양성 투자를 확대한다.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을 토대로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핵심 연구인력과 산업기술 인재양성에 중점 지원한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체계개선, 기술정보·인력 DB 구축, 연구개발 서비스 육성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도 강화한다.

이공계 대학의 공학교육 교과과정 개편, 공학인증제 도입을 지원하고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BK21)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지향형 인재 공급을 위해 기업가 연구센터, 대학부설 산학연구실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운영의 자율화, 성과평가 강화 등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해외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여 과학기술 정보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표 11-4 연구기반 조성 주요 변동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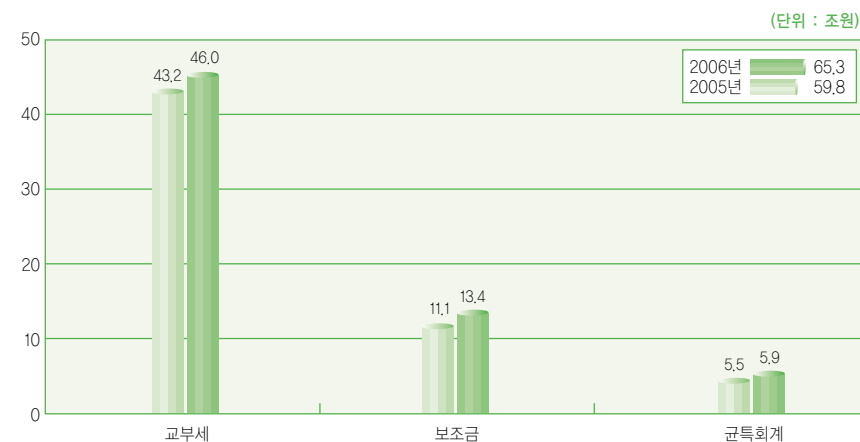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 창조적 인재 강국	1,739	3,873	122.7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 정부출연연구기관	9,304	10,101	8.6	-38개 기관(연구회 포함)

12.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지원 분야

- ❖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지원 분야는 2005년 대비 9.2%가 증가한 65.3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 ❖ 지방이전재원 중 교부세는 2005년 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신설 등에 따라 확대(6.3%)되었으며, 보조금도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20.9%)하였다.
- ❖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5년 대비 8.1%가 증가한 5.9조원 규모로 편성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혁신발전을 위한 사업을 중점 지원하였다.

그림 12-1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지원 분야 재정투자 계획



12-1 2006년도 재정지원 방향

지방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책임성 및 균형발전 효과 제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에 대한 재원이전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재원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였으며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세수 확대분을 교부세로 지원하여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대하였다.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였다.

세입확보 노력, 채무관리 등 지방재정의 상태 및 관리개선 노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환류하고 재정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기존의 경제성 위주의 재정투자에서 탈피하여 경제성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장기적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활용하였다.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는 재정사업의 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추진 여부, 규모 및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의 합리성 및 책임성 제고

지자체별 재원 배분시 인구, 면적 및 낙후도 요소(재정력 지수, 노인인구 비율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모델을 개발하여 배분하였다. 또한 지자체 선호도가 낮은 재해예방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편성하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4,445→5,100억원, 14.7%).

균특회계 운영의 지자체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자체별로 균특회계의 세출 구조조정 실적,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에 113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다.

12-2 부문별 주요 지원 내용

■ 지방재정 지원 부문

재정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이전재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 지방재정 지원 : (2005년) 59,8조원 → (2006년) 65,3조원

먼저, 지방 이양된 복지사업의 신규 재정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권교부세율을 당초 0.83%에서 0.94%로 0.11% 인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 지원 규모도 2005년도 8,454억원에서 2006년 10,024억원으로 18.6% 확대 지원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고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확대 지원하였으며(0.7→1조원), 이를 통해 지방의 자율재원인 교부세 규모가 확대되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기초생활급여, 장애인시설 확충 및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11.1→13.4조원, 20.9%).

표 12-11 지방재정 지원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597,644	652,674	9.2	
• 지방교부세	432,212	459,631	6.3	
- 보통교부세	179,275	186,043	3.8	
- 분권교부세	8,454	10,024	18.6	-분권교부세율 인상(0.83→0.94%)
• 국고보조금	110,782	133,975	20.9	
• 균특회계	54,650	59,067	8.1	

■ 국가균형발전 부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5.9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 부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등 3개의 주요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은 2030년까지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행정 기능과 기타 자족 기능을 갖춘 친환경적·미래지향적 도시를 모델로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총 소요 비용은 국고 8.5조원, 민자 35.4조원 등 43.9조원 규모로서 특히 2006년도부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정부청사 설계비 등을 중심으로 353억원을 반영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수도권 및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에 175개 공공기관을 시·도별 발전 정도, 지역 전략산업 및 혁신 클러스터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이 이전할 10개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2005년도 말에 완료됨에 따라 향후 본격적으로 지방이전재원 규모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정소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06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5년 대비 8.1%가 증가한 5.9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지역개발 계정은 재원배분 모델개발 등을 통해 지자체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적정투자 유도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혁신 계정은 사업 추진시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여 지자체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2-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54,650	59,067	8.1	
- 지역개발 계정	41,884	45,127	7.7	-낙후지역 개발사업 중점 지원
- 지역혁신 계정	12,766	13,940	9.2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 중점 지원

지역개발 계정의 경우 우선 낙후지역 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오지·도서·접경지역 및 소도읍 육성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7,682→8,463억원, 10.2%) 한편, S/W·Brain Ware 위주의 신활력 지역 지원사업(1,900억원)을 통해 낙후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농산어촌 개발 분야는 생산기반 확충부분은 축소하고(6,859→6,670억원), 소득원 개발 부분은 증대하는(3,945→4,120억원) 등 내부적으로 활발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 SOC 분야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민자 접속도로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문 위주로 대폭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였다(12,353→14,450억원).

[표 12-3] 지역개발 계정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고
합계	41,884	45,127	7.7	
- 자율편성 대상사업	26,038	28,291	8.7	-농어촌 투자, 지역 SOC 등
-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	9,682	10,363	7.0	-낙후지역 개발 등
- 재해예방사업	4,445	5,100	14.7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 그린벨트·토지관리 등	1,720	1,373	△20.2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지역혁신 계정은 먼저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전략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였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300→463억원) 및 지역 농업클러스터(농림부 120→200, 농진청 50→100억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지역별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였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4+9개 지역 진흥사업을 지속 지원하였으며(3,600→3,740억원), 산업기술, 지역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별 신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300→525억원).

지역 혁신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 인적자원 및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 New University Regional Innovation)은 성과평가를 통해 부실사업단 7개를 제외하여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18개 사업단을 신규 지원하는 등 총 123개 사업단에 대해 전년 대비 8.3% 증가한 2,60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덕 R&D 특구를 연구개발 및 생산성 마케팅 기능까지 갖춘 국제적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100→250억 원).

[표 12-4] 지역혁신 계정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업	2005년	2006년	증가율	비고
합계	12,766	13,940	9.2	
- 지역전략산업 육성	6,525	7,135	9.3	-지역 기술혁신 거점구축 등
- 지역인적자원 개발	4,630	4,880	5.4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등
- 지역 과학기술 확충	180	340	88.9	-대덕 R&D 특구 육성 등
- 기타	1,431	1,585	10.3	-농업·문화 혁신 등



제 4 장

재정운용시스템 혁신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정착
2.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시행 · 정착
3.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
4.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강화
5.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6.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7. 특별회계 · 기금 정비
8. 국가재정법 제정 추진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정착

❖ 예산 · 기금을 망라하는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에 처음 수립된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년)을 수정 · 보완하여 연동계획인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였고, 2006년 예산은 동 계획을 바탕으로 편성하였다.

■ 중장기 재정운영의 기본 틀로서 단년도 예산과 연계 강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간의 총 재정 규모, 분야별 자원배분 우선순위, 주요 재정사업별 지출 규모 등을 사전에 제시하여 국가재정운영의 기본 틀 역할을 한다. 특히 금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6년도 예산안 편성시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 각계 각층의 참여 기회 대폭 확대

각 부처와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14개 분야별 작업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정부부처 · 학계 · 언론계 · 민간기업 · 민간연구소 · 시민단체 등이 패널로 참가한 분야별 공개토론회를 TV에 생중계(KBS, K-TV)하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의 참여기회를 한층 확대하였다.

■ 자원배분 원칙 및 방향에 대한 기준 마련

대통령 주재로 2005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1박 2일 간 개최된 국무위원 자원배분회의를 통해 「자원배분 12대 원칙」을 도출하는 등 자원배분의 원칙과 기본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복지 분야는 사회통합을 위해 경제성장의 에너지를 확대 · 재생산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분야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 자원배분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성과중심의 프로그램 체계로 전환하여 국회에 제출

‘장-관-항’으로 구분되어 투입에 치중했던 기존 예산체계를 ‘분야-부문-프로그램(정책사업)’으로 전환하여 작성,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재정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과를 보다 쉽게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재정운용시스템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 재정운영의 효율성, 재정건정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중장기 국가비전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자원배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재정건정성의 확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동 계획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개토론회, 국무위원 자원배분회의, 국무회의 보고 등을 통해 분야별 자원배분계획이 확정되므로 자원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시행 · 정착

❖ 2004년부터 도입된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따라 각 부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의 틀을 토대로 제시된 지출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통보된 편성지침에 따라 소관 예산을 자율편성하고, 기획예산처는 편성지침 및 지출한도 준수 여부를 협의 · 보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 '분야별 · 부처별 지출한도' 등을 미리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 부처별로 자율편성하는 제도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으로 기획예산처는 국무위원 자원배분회의에서 논의한 자원배분 방향과 원칙을 토대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각 중앙관서에 제시하고 각 중앙관서는 지출한도 내에서 풍부한 정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2005년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기초로 5월 초에 부처별 2006년 예산 지출한도를 설정하여 각 부처로 통보하였다.

	증진(Bottom-up)	개선(Top-down)
• 자원배분 순서	지출 총액 ↑ 분야별 · 부처별 예산 규모 ↑ 사업별 예산 규모	지출 총액 ↓ 분야별 · 부처별 지출한도 ↓ 사업별 예산 규모
• 편성 기간	4개월(6~9월)	9개월(1~9월)

■ 전략적 자원배분 및 자율적 구조조정 활발히 진행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부처별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지출구조가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각 부처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실적은 2005년 5.6%(△2.4조원)에서 2006년 9.3%(△4.2조원)로 크게 상승하였다.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각 부처가 지출한도를 감안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여 요구한 결과, 일반회계 요구증가율이 2004년 30.8%에서 2006년 예산요구의 경우에는 9.3%로 대폭 줄어들게 되어 '과다요구-대폭삭감'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프로그램 예산체제로 전환 추진

미국, 호주 등 선진 OECD 국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위해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프로그램 예산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장-관-항'으로 구분한 예산체계를 '분야-부문-프로그램(정책사업)'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2006년 예산의 경우 프로그램 체계를 시범 적용한 결과를 국회에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하였고,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프로그램 체제로 전환하여 정식 제출하였다.

3.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

❖ 2005년에 최초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 예산편성과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재정운용과정에 환류(feed-back)하였다.

■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기획예산처에서 사전에 제시한 평가지침에 따라 각 부처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에서 확인·점검한 후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부처에서는 스스로의 평가결과를 자율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에 따른 부처의 자율적 예산운용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한다.

■ 평가결과를 2006년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전체 사업의 84.3%(468개)가 '보통' 등급 이상, 15.7%(87개)가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06년 예산을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하는 등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시 적극 활용하여, 약 1.1조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표 3-11 2005년 자율평가 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

(단위 : 개, 조원)

	사업 수	2005년 예산 (A)	2006년 예산 (B)	증감	
				(B-A)	%
합계	555	35.0	35.8	0.8	2.4
- 우수	28	1.6	2.2	0.7	44.1
- 다소 우수	100	8.3	9.6	1.3	15.6
- 보통	340	21.7	21.0	△0.7	△3.2
- 미흡	87	3.4	3.0	△0.4	△13.5

4.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강화

❖ 국민들이 제기하는 예산낭비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예산낭비 대응시스템을 2005년 3월에 구축하였으며, 2006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예산낭비 사례를 중점 개선하여 국민들의 재정집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 2005년은 범정부적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구축

각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기업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그동안 일반국민, 시민단체, 언론, 시민 등에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으나, 단편적인 대응에 그칠 뿐 범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5년 3월, 기획예산처는 전국 43개 중앙부처 및 250개 지자체, 13개 공기업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예산낭비 대응전담반을 운영하여 예산낭비 신고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신고센터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2005년 동안 393건의 예산낭비와 관련된 신고를 접수받아 95건의 타당한 지적에 대해 개선조치를 완료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민·관 예산낭비 대응체계 구축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신고접수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감시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간담회 개최 및 공동 현장점검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예산낭비 대응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로 업무처리 절차 표준화 도모

2005년은 시스템 구축 첫해로 각 기관 사이에 업무처리 방식이 달라 일부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낭비 대응! 이렇게 합시다’라는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각 기관의 예산낭비 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자 교육을 통해 예산낭비 대응 혁신마인드 확산

각 부처의 예산낭비 대응전담반 직원을 대상으로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및 감사교육원 교수를 초빙하여,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낭비 대응업무를 처리하도록 유도하였다.

■ 2006년은 예산낭비 대응을 통한 재정신뢰도 회복에 노력

예산낭비 신고센터 개소

예산경험 및 민간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오프라인으로 개소하고 콜센터(1577-1242, 알뜰살뜰)를 설치하는 등 예산낭비 신고센터 기능을 보강하여 현장점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예산낭비 신고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대폭 강화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문화상품권 등 소액의 사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성과금 지급한도를 2,6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산절감과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한 예산낭비 신고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 규정을 2005년 12월 개정하였다.

2006년은 고질적 예산낭비 사례 방지를 통해 재정신뢰 도모

국민들이 연례적·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부의 예산낭비 방지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록 한다.

이와 함께 예산낭비 신고센터 및 재정 전반에 대한 홍보,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대국민 캠페인 및 시민단체와 공동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예산낭비 대응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중의 하나인 보도블록 교체 공사



■ 국민과 정부가 함께 예산낭비 대응에 나서야

예산낭비 방지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되는 문제이다. 앞으로도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5.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세입 징수, 예산 편성·집행·결산·평가 등 재정프로세스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제공할 수 있는 통합재정 정보시스템이다.

■ 예산 및 회계제도를 선진체제로 개편

국제 기준(IMF GFS)을 고려, 공공 부문 재정통계 작성범위 재설정

현행 중앙정부 회계, 기금 중심의 재정통계로는 국가 전체의 재정규모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의 수립, 재정위험요인의 관리, 국가 간 통계비교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2005년 6월 관계기관, 관계부처, 재정전문가 등으로 ‘공공부문분류위원회’를 발족, 통계작성 범위를 재설정하였다. 향후 정부의 재정통계에는 중앙 및 지방의 모든 회계와 기금, 230여 개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사업 및 성과 관리를 연계한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현재의 ‘장·관·항·세항·목’ 예산구조를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목’ 체계로 개편한다. 이는 현행 예산체계가 예산사업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재원배분 및 성과관리 등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2005년도에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프로그램 예산구조를 적용하여 국회에 2006년 프로그램 예산서를 시범 작성·제출한 바 있으며, 금년에 작성하는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07년도 정부예산안에 동 체계를 공식 적용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 평가기준 등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예산과 회계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계부처 간 일부 이견사항에 대해 협의·조정 중에 있으며,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중앙재정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회계제도 개편 내용을 담아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공공 부문의 모든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사업관리시스템 및 원가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과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05년 2월부터 9월까지 정보화 설계를 마치고, 동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2007년부터는 가동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 재정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정보가치 제고

첫째, 국제 기준에 의한 재정정보의 비교는 물론 재정통계에 의한 합리적 정책 결정이 가능해진다.

둘째, 일반국민도 예산사업을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기금·회계 간 유사·중복 사업의 파악이 가능해져 예산낭비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회계처리의 투명성 및 정확성이 제고되고, 향후 도래할 재정소요 파악이 가능해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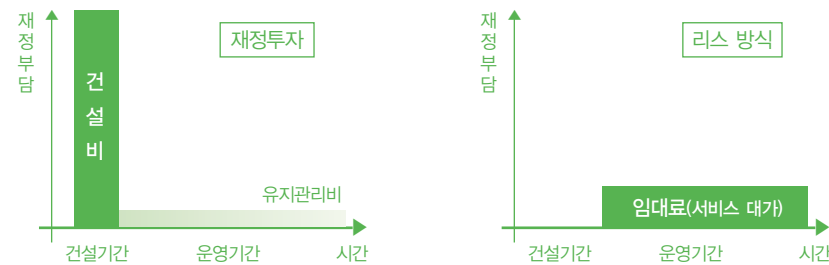
넷째, 일반국민에서부터 정책결정자까지 필요한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게 되어 국민의 재정참여 및 정보활용성이 제고된다.

6.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지난해 선도사업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내실화와 성공모델 창출에 초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¹

■ 민간자금·경영기법을 활용하여 전통적 재정운용방식을 전환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은 이미 민간에서 일반화된 리스 방식을 공공 부문에 접목한 것이다. 민간투자자가 학교, 미술관, 노인요양시설 등 공공시설을 설계·건설한 뒤, 20~30년 간 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종합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매년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BTL사업 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째, 국민생활에 긴요한 학교·복지·문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앞

¹ BTL사업 고시 규모 : (2005년) 3.8→(2006년) 8.3조원.

당겨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과 재정투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BTL사업은 시중의 여유자금을 실물 공공투자로 연결시켜 생산적 투자를 증대하고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게 된다.



■ BTL을 통한 교육·복지시설 확충의 성공적 기반 구축

2005년 한 해 동안 정부는 BTL사업 시행모델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민·투자자·공무원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BTL지침, 표준협약 등 세부 매뉴얼의 수립과 투자자에 대한 부가세·법인세 감면 및 금융기관의 투자규제 완화 등 세제·금융 지원제도 개선, 복합화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지역 중소기업체 참여우대가점제 및 제안비용보상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토대 위에 정부는 2005년도 사업 86개, 3.8조원 규모의 사업을 고시하였으며 2006년 상반기 중 우선협상자 선정, 협상,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25년 이상 노후되고, 15평 이하 협소한 군인 APT. 재정사업으로는 200세대 건설에 약 180억원 예산이 일시에 소요.



충주 군인 APT 민간투자자의 설계안. 투자자는 약 13억원 리스료를 매년 지급받고 국방부에 20년 간 종합임대서비스 제공.

2006년은 협약체결 · 집행 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

2006년도 사업은 15개 분야 8.3조원의 규모로서 2005년도 사업에 비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대상시설을 확대하였다. 특히 복합시설, 과학관 등 민간의 효율 발휘가 높은 시설을 추가로 지정하였고,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군인APT, 노후 하수관거, 일반철도(경전선, 전라선)에 대해서도 2005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시설유형별 표준모델을 재정비하여 시행모델의 정밀성을 제고하고, 제안비용보상제의 본격 시행을 통해 투자자의 경쟁 활성화와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BTL사업의 본격적인 성공모델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표 6-1 2006년도 BTL사업 한도액

대상시설	한도액(억원)	시설유형(사업 수)
• 국가사업	26,002	군인 APT(11), 사병내무반(17), 일반철도(2), 국립대 기숙사(2), 기능대학(5)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28,218	하수관거(29), 생활체육시설(4), 도서관(3), 박물관(1), 복합노인시설(3), 한약유통시설(5), 복합시설(8), 과학관(3)
• 예비사업 한도액	2,711	국가사업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한도액의 5%
• 지자체 자체사업	26,216	초중등학교 신개축(265개교)
합계	83,147	

- BTL사업 추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BTL 전용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www.mpb.go.kr/btl.html)

7.

특별회계 · 기금 정비

추진 배경

재정구조 복잡성에 기인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하

국가재정이 일반회계 외에, 21개의 특별회계 및 61개의 기금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회계와 기금 간 역할분담이 불분명해지고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계 · 기금 간 재원 이동이 제한되어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원 여유가 있는 회계 · 기금의 경우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투자하기도 한다.

대내외적인 특별회계 기금 정비 요구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국회, 언론, 학계 등에서 대외적으로는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특별회계 · 기금을 대폭 정비하여 재정구조를 단순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 변화

2004년부터 국가재원배분의 중장기 전략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각 분야 · 부문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 방향이 설정되어 재원확보 목적의 특별회계 및 기금 유지 필요성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이해관계자 설득이 용이해졌다.

■ 추진 경과

2004년부터 정부혁신위 주관으로 특별회계·기금정비 추진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지적과 재정운용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2004년 3월부터 특별회계·기금정비를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객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주축인 재정세제전문위원회와 기금준치평가단이 정비시안을 만들었고, 각 부처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2004년 하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5년 5월 대통령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된 후, 2005년 9월 국무회의에서 최종수정안을 수립하였다.

■ 정비방안의 주요 내용

특별회계 21 → 14개, 기금 61 → 55개

정비방안의 주요 내용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와, 응급의료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줄여 일반회계 등으로 관리 전환하는 것이다.

표 7-11 세부 정비방안 개요(2006년 1월 현재 기준)

구분	정비방안	현행	정비방안		정비결과
			폐지/이관	통합/분리	
특별회계 기금		21 61	5 6	2(5→3) —	14 55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운영 가능한 ‘국유재산 관리, 교통시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특허관리, 국립의료원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이관한다.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특별회계기금 간의 통합으로는 ‘재정융자특별회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군인연금특별회계는 군인연금기금’에, ‘농어촌특별세관리’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통합한다.

아울러, ‘통신사업특별회계’는 ‘우편사업’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하

여 투명성을 제고하며, 그 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 나머지 특별회계는 계속 유지한다.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재원에 의존하고 사업의 신축성이 필요하지 않은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일반회계로 관리전환할 계획이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의 경우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문화 분야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모태펀드 투자사업으로 기금의 적립금을 이관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광복회로 이관하여 민간 기금화할 것이다.

정비대상에서 지원하던 사업은 타 회계 기금에서 지속 지원

정비 후에도 정비대상 특별회계 및 기금의 사업은 일반회계 및 관리전환된 특별회계·기금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지속 지원할 계획이므로 회계·기금이 없어지더라도 지원사업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 향후 추진 계획

2006년 1월 현재 국유재산특별회계, 방위산업육성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입법조치는 완료

그 외 6개 특별회계와 4개 기금의 관련 법률은 신속히 입법조치를 완료하여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재정법 제정안에 특별회계·기금정비제도 규정

이와 같은 특별회계·기금 정비를 제도화하기 위해 현재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신설 심사 및 기금준치평가 규정을 특별회계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국가재정법 제정안에 담았으며 이러한 근거 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

국가재정법 제정 추진

❖ 참여정부의 재정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재정법’ 제정을 추진한다.

■ ‘국가재정법’ 제정 추진배경

현행 예산회계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25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기본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옴에 따라 최근의 재정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적인 재정개혁 추세에 부합하고, 국민 전체적 관점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의 기본법 역할을 하게 될 ‘국가재정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국가재정법’(안) 주요 내용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중·장기 재정전망, 재정운용의 목표 및 전략,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등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편성(Top-down제도)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과정에서 부처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부처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에 상응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전체적 시각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의 과다한 여유재원을 상호 전출·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였다.

재정의경기대응기능 강화

경기 불황시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국채를 탄력적으로 발행하여 재정지출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차년도 이후의 계속비 사업 물량을 앞당겨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기 호황시에 발생한 세제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재정이 경기 변동의 진폭을 완화하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채무 관리 및 건전재정기조 유지

정부가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과 상환계획, 증감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5년 간의 재정수지 추계자료와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예산회계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을 구체화하여 추경편성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정의투명성 제고

국회의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결산 국회제출 기한을 2개월 앞당겼으며, 통합재정수지 등 중요한 재정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그동안의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안)을 2004년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법안은 2005년 4월 상임위(운영위)에 상정되어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정부는 여·야 협의 등을 거쳐 동 법안이 2006년 초반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3부

200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1장 2006년도 예산

제2장 2006년도기금운용계획

제 1 장

2006년도 예산

1. 2006년도 예산 총칙
2. 세입·세출예산 규모
3. 세입예산 내역
4. 세출예산 내역
5. 특별회계 규모 및 개요
6. 국고채무부담행위
7. 명시이월비
8. 계속비

1. 2006년도 예산 총칙

- 제1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144,807,610,439,000원
② 재정융자특별회계	10,382,406,871,000원
③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392,618,543,000원
④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067,249,522,000원
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2,778,585,000,000원
⑥ 교통시설특별회계	12,595,344,729,000원
⑦ 등기특별회계	266,835,302,000원
⑧ 교도작업특별회계	49,200,000,000원
⑨ 군인연금특별회계	1,774,683,428,000원
⑩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007,242,000,000원
⑪ 환경개선특별회계	2,632,588,122,000원
⑫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7,493,598,000원
⑬ 우체국보험특별회계	561,100,262,000원
⑭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669,016,792,000원
⑮ 특허관리특별회계	297,973,000,000원
⑯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906,702,766,000원
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26,416,370,000원
⑱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45,259,465,000원
⑲ 양곡관리특별회계	1,293,150,627,000원
⑳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16,798,756,000원
㉑ 통신사업특별회계	5,006,226,007,000원
㉒ 조달특별회계	215,130,966,000원

- 제2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200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 제4조 예산회계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은 1,0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 제5조 2006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 제6조 2006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 제7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 제8조 2006년도에 있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우체국보험·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16개 기타특별회계에 적용)	18,000,000,000,000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통신사업특별회계	100,000,000,000원
④ 조달특별회계(회전자금)	200,000,000,000원
⑤ 쌀소득보전기금	50,000,000,000원

- 제9조 2006년도에 있어서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년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교통시설특별회계	60,000,000,000원
② 국민주택기금	9,0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외화표시채권)	1,000,000,000,000원
④ 공공자금관리기금	68,000,000,000,000원

- 제10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예산회계법 제3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 내 아래 비목 상호 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래 제1호 인건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되는 비목 이외의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 ①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 ②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 ③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 ④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 ⑤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 ⑥ 기업회계의 조작비,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 ⑦ 재해대책비
- ⑧ 반환금
- ⑨ 선거 관련 경비

- 제11조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학교경비 중 공무원 봉급을 강사료로, 국립병원의 의사봉급을 기타직 보수로, 국방부 소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내역 상호 간, 기동 및 타격전력, 해상 및 상륙전력, 공중 및 방공전력, C4I 및 전자전 전력, 지원전력, 연구개발항의 내역 상호 간에는 예산회계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국제유가 변동으로 국방부 소관 유류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예산회계법 제3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생활급여 예산에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회계법 제3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제12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제10조, 특허관리특별회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회계	수입	지출
• 통신사업특별회계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국립의료원특별회계 • 특허관리특별회계	- 금융영업수입 - 부가보험료수입 - 병원수입 - 수수료수입	- 지급이자 - 보험보상금 - 진료비 - 출원 · 심사 · 심판 직접경비

- 제13조 일반회계예비비 중 1,2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 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의료보험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

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 제14조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15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통신사업특별회계의 2005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분의 일반회계 전출금	37,900,000,000원
--	-----------------

- 제16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375,760,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93,023,235,000원
③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96,590,878,000원
④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1,800,000,000원
⑤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218,100,000,000원
⑥ 조달사업특별회계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전입금	2,680,000,000원

- 제17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 금액의 합계액은 207,060,000,000원 이내로 한다.
- 제18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7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2 세입 · 세출예산 규모

Summary of Budget Revenues and Expenditures

● 세입예산(Budget Revenues)

구분 Classification	2005년도 예산 FY 2005 Budget		2006년도 예산 FY 2006 Budget		증(△)감 Change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1. 내국세(Internal Taxes)	100,924,400	74.6	107,098,600	74.0	6,174,200	6.1
2. 관세(Customs Duties)	6,229,300	4.6	6,502,600	4.5	273,300	4.4
3. 교통세(Transportation Tax)	10,377,000	7.7	11,721,900	8.1	1,344,900	13.0
4. 교육세(Educational Tax)	3,504,000	2.6	3,695,700	2.6	191,700	5.5
5.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700,000	0.5	1,020,000	0.7	320,000	45.7
6. 세외수입(Non-Tax Revenues)	13,480,887	10.0	14,768,810	10.2	1,287,924	9.6
• 국채발행(Borrowing from Bonds)	9,500,000	7.0	7,950,000	5.5	△1,550,000	△16.3
• 기타수입(Other)	3,980,887	2.9	6,818,810	4.7	2,837,924	71.3
합계(total)	135,215,587	100.0	144,807,610	100.0	9,592,024	7.1

※ 일반회계 세입 규모임.

※ 2005년도 세입 · 세출예산은 추경 포함 최종예산임(이하 별도표시가 없는 한 추경 포함 최종예산임).

단위 : 백만원(In Million Won)

● 세출예산(Budget Expenditures)

구분 Classification	2005년도 예산 FY 2005 Budget		2006년도 예산 FY 2006 Budget		증(△)감 Change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1. 방위비(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22,020,476	16.3	23,511,696	16.2	1,491,220	6.8
2. 교육비 (Education Expenditures)	27,438,045	20.3	28,540,223	19.7	1,102,178	4.0
• 교부금	23,736,721	17.6	24,596,646	17.0	859,925	3.6
• 일반경비	3,701,323	2.7	3,943,578	2.7	242,255	6.5
3.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s)	17,779,505	13.1	19,347,715	13.4	1,568,210	8.8
4.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s)	28,060,533	20.8	28,303,225	19.5	242,692	0.9
5. 일반행정 (General Administration)	14,607,042	10.8	17,101,586	11.8	2,494,544	17.1
• 입법및선거관계 (Legislature & Election)	494,020	0.4	582,178	0.4	88,158	17.8
• 사법및경찰 (Judiciary & Police)	7,255,763	5.4	7,863,531	5.4	607,768	8.4
• 일반행정 (General Administration)	6,857,259	5.1	8,655,877	6.0	1,798,618	26.2
6. 지방재정교부금 (Grants to Local Gov't)	20,135,831	14.9	21,366,498	14.8	1,230,667	6.1
7. 채무상환및기타 (Repayment of Gov't Debt & Others)	3,334,922	2.5	4,036,842	2.8	701,920	21.0
8. 예비비(Contingency)	1,645,159	1.2	2,249,825	1.6	604,666	36.8
9. 재정용자지원(Support for Fiscal Financing)	194,073	0.1	350,000	0.2	155,927	80.3
합계(Total)	135,215,587	100.0	144,807,610	100.0	9,592,024	7.1

※ 일반회계 세출 규모임.

단위 : 백만원(In Million Won)

3. 세입예산 내역

Budget Revenues

● 세입예산 총괄표(Summary of Revenues Budget)

구분 Classification	2005년도 예산 FY 2005 Budget	2006년도 예산 FY 2006 Budget	증(△)감 Change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1. 국세(Tax Total)	118,230,700	126,343,100	8,112,400	6.86
가. 내국세(Internal Taxes)	100,924,400	107,098,600	6,174,200	6.1
나. 관세(Customs Duties)	6,229,300	6,502,600	273,300	4.4
다. 교통세(Transportation Tax)	10,377,000	11,721,900	1,344,900	13.0
다. 종합부동산세(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700,000	1,020,000	320,000	45.7
2. 교육세(Educational Tax)	3,504,000	3,695,700	191,700	5.5
3. 세외수입(Non-Tax Revenues)	13,480,888	14,768,811	1,287,923	9.55
가. 재산수입(Property Income)	413,153	887,300	474,147	114.8
나. 경상이전수입(Current Transfer)	2,621,598	2,909,566	287,968	11.0
다. 재화및용역판매수입(Sales of Goods & Services)	427,329	472,997	668	0.1
라. 수입대체경비수입(Receipts Tied to Expenses)	126,325	143,529	17,024	13.6
마. 관유물매각대금(Sales Proceeds of Gov't Owned Properties)	15,470	17,085	1,615	10.4
바. 융자및전대차관원금 (Trensurey Loan & Sub-Leale Loan)	34,041	30,636	△3,405	△10.0
사.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Borrowing & Excess Fund)	123,296	2,043,394	1,920,098	1,577.3
아. 전년도이월금(Carry-over from Prev. Year)	172,596	314,304	147,708	82.1
자. 정부내부수입및기타 (Intra-Gov't Transfer & Others)	9,502,080	7,950,000	△1,552,080	△16.3
4. 국채발행(Borrowing from Bonds)	(9,500,000)	(7,950,000)	(△1,550,000)	(△16.3)
합계(Total)	135,215,588	144,807,611	9,592,023	7.1

단위 : 백만원(In Million Won)

• 200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 국세수입 내역(Tax Revenues)

구분 Classification	2005년도 예산 FY 2005 Budget	2006년도 예산 FY 2006 Budget	증(△)감 Change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가. 내국세(Internal Taxes)	100,924,400	107,098,600	6,174,200	6.1
(1) 소득세(Income Tax)	24,507,600	27,677,700	3,170,100	12.9
(가) 신고분(Not Withheld Income Tax)	8,472,200	9,577,500	1,105,300	13.0
(나) 원천분(Withheld Income Tax)	16,035,400	18,100,200	2,064,800	12.9
(2) 법인세(Corporation Tax)	29,671,600	26,883,100	△2,788,500	△9.4
(3) 상속세(Inheritance Tax)	1,818,200	2,198,300	380,100	20.9
(가) 상속세(Inheritance Tax)	743,100	821,500	87,400	11.9
(나) 증여세(Gift Tax)	1,084,100	1,376,800	292,700	27.0
(4)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36,224,500	41,315,200	5,090,700	14.1
(5) 특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	4,461,700	4,434,100	△27,600	△0.6
(6) 증권거래세(Security Transaction Tax)	1,676,700	1,802,500	125,800	7.5
(7) 인지세(Stamp Tax)	494,300	496,300	2,000	0.4
(8) 기타내국세(Other Internal Tax)	2,069,800	2,291,400	221,600	10.7
나. 관세(Customs Duties)	6,229,300	6,502,600	273,300	4.4
다. 교통세(Transportation Tax)	10,377,000	11,721,900	1,344,900	13.0
라. 교육세(Educational Tax)	3,504,000	3,695,700	191,700	5.5
마. 종합부동산세(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700,000	1,020,000	320,000	45.7
조세 합계(Tax Total)	121,734,700	130,038,800	8,304,100	6.8

단위 : 백만원(In Million Won)

● 소관별 세입예산(Budget Revenues by Agency) ①

소관 Agency	2005년도 예산 FY 2005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계 Total
(1) 대통령 비서실(Office of the President)	—	—	—	—
(2) 국회(Nat' l Assembly)	411,000	—	—	411,000
(3) 대법원(Supreme Court)	203,183,019	—	—	203,183,019
(4) 감사원(Board of Audit & Inspection)	257,200	—	—	257,200
(5)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40,200	—	—	40,200
(6) 중앙선거위(Central Election Mag. Com.)	602,900	—	—	602,900
(7) 국무총리실(Office of the Prime Min.)	11,245,336	—	—	11,245,336
(8)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118,949,041,316	9,500,000,000	—	128,449,041,316
① 내국세(Internal Taxes)	100,924,400,000	—	—	100,924,400,000
② 관세(Customs Duties)	6,229,300,000	—	—	6,229,300,000
③ 교통세(Transportation Tax)	10,377,000,000	—	—	10,377,000,000
④ 종합부동산세(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700,000,000	—	—	700,000,000
⑤ 세외수입(Non-Tax Revenues)	718,341,316	9,500,000,000	—	10,218,341,316
(9) 교육인적자원부(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3,774,317,084	—	—	3,774,317,084
(10) 통일부(Ministry of Nat' l Unification)	26,300	—	—	26,300
(11)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	90,519,000	—	—	90,519,000
(12)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1,476,299,997	—	—	1,476,299,997
(13)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ce)	88,321,000	—	—	88,321,000
(14) 행정자치부(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 Home Affairs)	9,041,474	—	—	9,041,474
(15)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13,907,820	—	—	13,907,820
(16) 문화관광부(Ministry of Culture & Tourism)	20,646,743	—	—	20,646,743
(17) 농림부(Ministry of Agr. & Forestry)	2,456,200	—	—	2,456,200
(18) 산업자원부(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	30,049,636	—	—	30,049,636
(19)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 Welfare)	164,574,119	—	—	164,574,119

2006년도 예산 FY 2006 Budget				증△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계 Total
87,000	—	—	87,000	87,000	—	—	87,000
511,000	—	—	511,000	100,000	—	—	100,000
219,328,268	—	—	219,328,268	16,145,249	—	—	16,145,249
274,300	—	—	274,300	17,100	—	—	17,100
1,100	—	—	1,100	△39,100	—	—	△39,100
194,400	—	—	194,400	△408,500	—	—	△408,500
13,980,748	—	—	13,980,748	2,735,412	—	—	2,735,412
129,270,929,041	7,950,000,000	—	137,220,929,041	8,771,887,725	△1,550,000,000	—	8,771,887,725
107,098,600,000	—	—	107,098,600,000	6,174,200,000	—	—	6,174,200,000
6,502,600,000	—	—	6,502,600,000	273,300,000	—	—	273,300,000
11,721,900,000	—	—	11,721,900,000	1,344,900,000	—	—	1,344,900,000
1,020,000,000	—	—	1,020,000,000	320,000,000	—	—	320,000,000
2,927,829,041	7,950,000,000	—	10,877,829,041	2,209,487,725	△1,550,000,000	—	659,487,725
4,299,587,795	—	—	4,299,587,795	525,270,711	—	—	525,270,711
26,400	—	—	26,400	100	—	—	100
104,071,300	—	—	104,071,300	13,552,300	—	—	13,552,300
1,679,197,000	—	—	1,679,197,000	202,897,003	—	—	202,897,003
88,685,000	—	—	88,685,000	364,000	—	—	364,000
6,452,000	—	—	6,452,000	△2,589,474	—	—	△2,589,474
11,916,293	—	—	11,916,293	△1,991,527	—	—	△1,991,527
23,429,648	—	—	23,429,648	2,782,905	—	—	2,782,905
7,481,020	—	—	7,481,020	5,024,820	—	—	5,024,820
30,802,418	—	—	30,802,418	752,782	—	—	752,782
132,989,307	—	—	132,989,307	△31,584,812	—	—	△31,584,812

단위 : 천원(In Thousand Won)

● 소관별 세입예산(Budget Revenues by Agency) ②

소관 Agency	2005년도 예산 FY 2005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계 Total
(20) 노동부(Ministry of Labor)	8,654,200	—	—	8,654,200
(21)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7,002,000	—	—	7,002,000
(22) 건설교통부(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20,599,374	—	—	20,599,374
(23) 해양수산부(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6,516,796	—	—	6,516,796
(24) 국가보훈처(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563,340	—	—	563,340
(25) 중앙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	2,321,370	—	—	2,321,370
(26)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138,564,337	—	—	138,564,337
(27) 국정홍보처(Korean Information Service)	108,180	—	—	108,180
(28) 국세청(Nat' l Tax Service)	604,508,939	—	—	604,508,939
(29) 관세청(Customs Service)	14,472,000	—	—	14,472,000
(30) 통계청(Nat' l Statistical Office)	167,510	—	—	167,510
(31) 병무청(Ministry Manpower Adm.)	1,716,453	—	—	1,716,453
(32) 경찰청(National Police Adm.)	33,299,975	—	—	33,299,975
(33) 기상청(Meteorological Adm.)	5,841,000	—	—	5,841,000
(34)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48,713	—	—	248,713
(35) 문화재청(Cultural Properties Adm.)	10,994,424	—	—	10,994,424
(36) 농촌진흥청(Rural Development Adm.)	4,180,850	—	—	4,180,850
(37) 산림청(Korea Forest Service)	4,729,000	—	—	4,729,000
(38) 중소기업청(Small & Medium Business Adm.)	4,972,990	—	—	4,972,990
(39)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8,605,090	—	—	8,605,090
(40) 해양경찰청(Nat' l Maritime Police Adm.)	1,424,699	—	—	1,424,699
(41) 방송위원회(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1,155,000	—	—	1,155,000
(42) 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Commission)	—	—	—	—
합계	125,715,586,584	9,500,000,000	—	135,215,586,584

2006년도 예산 FY 2006 Budget				증△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계 Total
18,487,000	—	—	18,487,000	9,832,800	—	—	9,832,800
12,802,000	—	—	12,802,000	5,800,000	—	—	5,800,000
21,705,385	—	—	21,705,385	1,106,011	—	—	1,106,011
7,935,183	—	—	7,935,183	1,418,387	—	—	1,418,387
547,497	—	—	547,497	△15,843	—	—	△15,843
2,585,000	—	—	2,585,000	263,630	—	—	263,630
136,937,129	—	—	136,937,129	△1,627,208	—	—	△1,627,208
895,443	—	—	895,443	787,263	—	—	787,263
684,433,377	—	—	684,433,377	79,924,438	—	—	79,924,438
15,175,000	—	—	15,175,000	703,000	—	—	703,000
454,441	—	—	454,441	286,931	—	—	286,931
280,270	—	—	280,270	△1,436,183	—	—	△1,436,183
11,180,211	—	—	11,180,211	△22,119,764	—	—	△22,119,764
6,015,750	—	—	6,015,750	174,750	—	—	174,750
715,019	—	—	715,019	466,306	—	—	466,306
17,589,312	—	—	17,589,312	6,594,888	—	—	6,594,888
8,438,043	—	—	8,438,043	4,257,193	—	—	4,257,193
4,449,228	—	—	4,449,228	△279,772	—	—	△279,772
7,364,804	—	—	7,364,804	2,391,814	—	—	2,391,814
6,636,720	—	—	6,636,720	△1,968,370	—	—	△1,968,370
2,055,839	—	—	2,055,839	631,140	—	—	631,140
946,750	—	—	946,750	△208,250	—	—	△208,250
37,000	—	—	37,000	37,000	—	—	37,000
136,857,601,439	7,950,000,000	—	144,807,610,439	9,592,023,855	—	—	9,592,023,855

단위 : 천원(In Thousand Won)

● 성질별 세외수입(Non-Tax Revenues by Object)

구분 Classification	2005년도 예산 FY 2005 Budget	2006년도 예산 FY 2006 Budget	증△감 Change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1. 재산수입(Property Revenues)	413,153	887,300	474,147	114.8
(1) 관유물대여료(Rent from Land & Buildings)	20,901	23,269	2,368	11.3
(2) 정부출자수입(Dividends & Profits)	377,616	843,604	465,988	123.4
(3) 전대차관이자수입(Interest)	6,915	7,105	190	2.7
(4) 기타이자및재산수입(Others)	7,721	13,322	5,601	72.5
2. 경상이전수입(Current Transfer)	2,621,598	2,909,566	287,968	11.0
(1) 벌금및몰수금(Fine & Confiscation)	1,665,724	1,879,661	213,937	12.8
(2) 변상금및위약금(Indemnities & Penalties)	21,682	33,755	12,073	55.7
(3) 가산금(Penalties to Delinquency)	592,411	655,672	63,261	10.7
(4) 기타경상이전수입(Others)	341,782	340,478	△1,304	△0.4
3. 재화및용역판매수입(Sales of Goods & Services)	472,329	472,997	668	0.1
(1) 병원수입(Hospital Income)	48,674	4,353	△44,321	△91.1
(2) 입장료수입(Admission Fee)	1,277	3,558	2,281	178.6
(3) 면허료및수수료(License & Commission Fee)	188,297	203,973	15,676	8.3
(4) 입학금및수업료(School Entrance & Tuition Fee)	213,763	241,450	27,687	13.0
(5) 항공항만및운수수입 (Revenues from Air-port, Harbors & Water)	18	57	39	216.7
(6) 실습수입(Revenues from School Experiments)	3,176	5,419	2,243	70.6
(7) 기타잡수입(Other)	17,124	14,187	△2,937	△17.2
4. 수입대체경비수입(Receipts Tied to Expenses)	126,325	143,529	17,204	13.6
(1) 관유물대여료(Rent from Land & Buildings)	181	226	45	24.9
(3) 입장료수입(Admission Fee)	3,621	5,704	2,083	57.5
(4) 면허료및수수료(License & Commission Fee)	110,849	126,090	15,241	13.7
(5) 기타잡수입(Other)	11,674	11,509	△165	△1.4
5. 관유물매각대금(Sales Proceeds of Gov't Owned Properties)	15,470	17,085	1,615	10.4
(1) 고정자산매각대금(Sales of Capital Assets)	713	3,893	3,180	446.0
(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금(Sales of land & Intangible Assets)	14,746	13,156	△1,590	△10.8
(3) 재고유동자산매각대금(Sales of Inventory & Current Assets)	10	36	26	260.0
6.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Treasury Loan Sub-Lend Loan)	34,041	30,636	△3,405	△10.0
(1) 융자원금회수(Collection of Principals A/C)	3	—	△3	△100.0
(2) 전대차관원금회수(Collection of Counterpart Sub-Loan)	34,038	30,636	△3,402	△10.0
7.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Borrowing & Excess Fund)	123,296	2,043,394	1,920,098	1557.3
(1) 유가증권매각대금(Sales of State-holding Stocks)	123,296	2,043,394	1,920,098	1557.3
8. 전년도이월금(Carry-over from Prev. Year)	172,596	314,304	141,708	82.1
(1) 전년도이월금(Carry-over from Prev. Year)	172,596	314,304	141,708	82.1
9. 정부내부수입및기타(Intra-Gov't Transfer & Others)	9,502,080	7,950,000	△1,552,080	△16.3
(1) 전입금(Transfer from Gen. A/C)	—	—	—	—
(2) 예탁원금회수(Collection of Deposit)	1,931	—	△1,931	△100.0
(3) 예수금(Collection of Trust Fund)	9,500,000	7,950,000	△1,550,000	△16.3
(4) 예탁이자수입(Interest form Deposit)	149	—	△149	△100.0
합계(Total)	13,480,887	14,768,810	1,287,923	9.6

단위 : 백만원(In Million Won)

4. 세출예산 내역
Budget Expenditures

● 소관별 세출예산(Budget Expenditures by Agency) ①

소관 Agency	2005년도 예산 FY 2005 Budget	2006년도 예산 FY 2006 Budget	증△감 Change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1) 대통령비서실(Office of the President)	59,282	61,240	1,958	3.3
(2) 대통령경호실(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58,715	59,437	723	1.2
(3) 국회(Nat'l Assembly)	336,711	356,601	19,890	5.9
(4) 대법원(Supreme Court)	664,764	754,324	89,561	13.5
(5) 국가안전보장회의(Nat'l Security Council)	5,079	5,361	281	5.6
(6) 국가정보원(Nat'l Intelligence Service)	408,829	429,226	20,397	5.0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13,100	12,724	△376	△2.9
(8) 국민경제자문회의(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1,707	2,285	578	33.9
(9) 감사원(Board of Audit & Inspection)	75,489	79,257	3,767	5.0
(10)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16,001	17,626	1,625	10.2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	157,308	225,577	68,269	43.4
(12) 국무총리실(Office of the Prime Minister)	294,024	307,390	13,366	4.5
(13)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 Economy)	4,757,944	6,639,795	1,881,851	39.6
(14) 교육인적자원부(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7,438,045	28,540,223	1,102,179	4.0
① 교육재정교부금(Revenue Sharing to Local Educational Agency)	23,736,721	24,596,646	859,924	3.6
② 일반경비(General Adm.)	3,701,323	3,943,578	242,255	6.5
(15) 통일부(Ministry of Nat'l Unification)	594,322	755,193	160,871	27.1
(16)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	901,125	879,990	△21,135	△2.3
(17)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1,530,295	1,665,120	134,825	8.8
(18)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ce)	21,102,611	22,512,865	1,410,254	6.7

단위 : 백만원(In Million Won)

● 소관별 세출예산(Budget Expenditures by Agency) ②

소관 Agency	2005년도 예산 FY 2005 Budget	2006년도 예산 FY 2006 Budget	증△감 Change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19) 행정자치부(Ministry of Government Adm. & Home Affairs)	21,916,059	23,529,468	1,613,410	7.4
① 지방재정교부금(Revenue Sharing)	20,135,831	21,366,498	1,230,666	6.1
② 일반경비(General Adm.)	1,780,227	2,162,971	382,743	21.5
(20)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1,840,261	2,071,580	231,320	12.6
(21) 문화관광부(Ministry of Culture & Tourism)	840,740	966,435	125,695	15.0
(22) 농림부(Ministry of Agr. & Forestry)	5,206,526	4,962,719	△243,807	△4.7
(23) 산업자원부(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	1,650,279	1,595,105	△55,173	△3.3
(24)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178,091	170,206	△7,885	△4.4
(25)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 Welfare)	8,906,745	9,706,335	799,589	9.0
(26)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1,529,546	1,547,645	18,099	1.2
(27) 노동부(Ministry of Labor)	693,001	732,089	39,088	5.6
(28)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643,775	872,939	229,164	35.6
(29) 건설교통부(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15,422,172	14,770,629	△651,543	△4.2
(30) 해양수산부(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2,305,123	2,413,949	108,826	4.7
(31) 기획예산처(Ministry of Planning & Budget)	2,843,413	3,858,608	1,015,196	35.7
① 예비비(Contingency)	1,645,159	2,249,825	604,666	36.8
② 일반경비(General Adm.)	1,198,254	1,608,783	410,530	34.3
(32) 법제처(Ministry of Legislation)	14,615	17,937	3,322	22.7
(33) 국가보훈처(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2,204,659	2,391,395	186,736	8.5
(34) 중앙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	93,223	100,865	7,642	8.2
(35)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34,752	38,689	3,937	11.3
(36) 국정홍보처(Korean Information Service)	55,255	61,351	6,096	11.0
(37) 국세청(Nat'l Tax Service)	984,378	1,048,002	63,624	6.5

단위 : 백만원(In Million Won)

● 소관별 세출예산(Budget Expenditures by Agency) ③

소관 Agency	2005년도 예산 FY 2005 Budget	2006년도 예산 FY 2006 Budget	증△감 Change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38) 관세청(Customs Service)	314,695	336,339	21,644	6.9
(39) 통계청(Nat'l Statistical Office)	238,832	178,072	△60,760	△25.4
(40) 병무청(Military Manpower Adm.)	130,637	139,031	8,393	6.4
(41) 경찰청(National Police Adm.)	5,247,784	5,637,970	390,186	7.4
(42) 소방방재청(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90,220	132,444	42,224	46.8
(43) 기상청(Meteorological Adm.)	131,475	153,369	21,894	16.7
(44) 문화재청(Cultural Properties Adm.)	295,230	331,807	36,577	12.4
(45) 농촌진흥청(Rural Development Adm.)	364,116	397,415	33,299	9.1
(46) 산림청(Korea Forest Service)	469,138	537,224	68,086	14.5
(47) 중소기업청(Small & Medium Business Adm.)	1,436,316	1,879,714	443,399	30.9
(48) 식품의약품안전청(Korea Food & Drug Adm.)	119,977	154,842	34,865	29.1
(49) 해양경찰청(Korea Coast Guard)	560,272	626,299	66,028	11.8
(50) 방송위원회(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476	4,838	4,362	916.4
(51) 국가인권위원회 (Nat'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406	21,558	1,152	5.6
(52) 국가청렴위원회(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18,049	19,696	1,647	9.1
(53) 청소년위원회(Korea Youth Commission)	—	19,825	19,825	순증
(5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Inspection of Collaborations for Japanese Imperialism)	—	7,800	7,800	순증
(5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The Ombudsman of Korea)	—	14,516	14,516	순증
(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	45,259	45,259	순증
(57) 과거사정리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	9,410	9,410	순증
합계(Total)	135,215,587	144,807,610	9,592,024	7.1

단위 : 백만원(In Million Won)

● 기능별 세출예산(Budget Expenditures by Function) ①

기능 Function	2005년도 예산 FY 2005 Budget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방위비(National Defense Exp.)	22,020,476	16.3
가. 국방비(National Defense Exp.)	21,102,611	15.6
① 경상운영(General Operation)	13,803,863	10.2
② 전력투자(Investment in Military Potential)	7,298,748	5.4
나. 기타방위비(Other Defense Expenditures)	917,865	0.7
① 병무행정(Military Affairs Administration)	130,637	0.1
② 전·해경지원(Support for Combatant & Maritime Police)	787,228	0.6
2. 교육비(Education Expenditures)	27,438,045	20.3
가. 초·중등교육(Primary & Secondary Education)	24,390,080	18.0
나. 인적자원개발	2,537,458	1.9
다.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	38,584	—
라. 실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325,230	0.2
마. 사회교육및체육(Social Education)	78,359	—
바. 교육인적자원행정(Education Adm.)	68,335	—
3. 사회개발(Social Dev't Expenditures)	17,779,505	13.2
가. 문화및관광(Culture & Tourism)	1,136,446	0.8
① 문화예술(Culture & Arts)	1,060,883	0.8
② 관광진흥(Tourism Promotion)	1,842	—
③ 청소년육성및체육(Uplbringing of Teenagers & Physical Training)	73,721	—
나. 환경개선(Enviroment Improvement)	1,883,346	1.4
① 상·하수도(Water Supply & Sewerage)	353,800	0.3
② 환경보전(Pollution Control)	1,529,546	1.1
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	13,586,028	10.1
①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4,287,189	3.2
② 보훈(Patriots & Veterans Affairs)	2,204,659	1.6
③ 근로자복지(Worker's Welfare)	243,452	0.2
④ 기타사회복지(Other Activities for Social Welfare)	5,768,038	4.3
⑤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240,934	0.2

2006년도 예산 FY 2006 Budget		증△감(B-A) Change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23,511,696	16.2	1,491,220	6.8
22,512,865	15.6	1,410,254	6.7
15,013,492	10.4	1,209,629	8.8
7,499,373	5.2	200,625	2.7
998,831	0.7	80,966	8.8
139,031	0.1	8,393	6.4
859,800	0.6	72,573	9.2
28,540,223	19.7	1,102,179	4.0
25,374,494	17.5	984,414	4.0
2,663,145	1.8	125,687	5.0
38,437	—	△147	△0.4
303,392	0.2	△21,838	△6.7
86,119	—	7,760	9.9
74,637	—	6,302	9.2
19,347,715	13.4	1,568,209	8.8
1,322,904	0.9	186,458	16.4
1,215,124	0.8	154,241	14.5
4,841	—	2,999	162.8
102,939	—	29,219	39.6
1,711,495	1.2	△171,851	△9.1
163,850	0.1	△189,950	△53.7
1,547,645	1.1	18,099	1.2
15,155,969	10.5	1,569,941	11.6
4,688,796	3.2	401,607	9.4
2,391,395	1.7	186,736	8.5
298,772	0.2	55,320	22.7
6,845,178	4.7	1,077,140	18.7
233,069	0.2	△7,864	△3.3

단위 : 백만원(In Million Won)

● 기능별 세출예산(Budget Expenditures by Function) ②

기능 Function	2005년도 예산 FY 2005 Budget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⑥ 직업안정(Vocational Security)	193,377	0,1
⑦ 보건위생(Health & Public Hygiene)	407,173	0,3
⑧ 보건복지행정(Health & Welfare Adm.)	241,206	0,2
라. 주택및지역사회개발(Housing & Dev't of Local Community)	1,173,685	0,9
① 주택(Housing)	1,111,955	0,8
② 지역사회개발(Dev't of Local Community)	61,730	—
4.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	28,060,533	20,8
가. 농림수산 개발(Dev't of Agriculture & Fisheries)	6,523,176	4,8
① 농업, 농촌(Agriculture & Rural Community)	5,211,905	3,9
② 어업, 어촌(Fisheries & Fishing Community)	330,946	0,2
③ 임업, 산촌(Forestry & Mountain Community)	469,138	0,4
④ 농림수산행정(Agriculture & Fisheries Adm.)	511,187	0,4
나. 국토자원보존개발(Conservation & Dev't of National Resources)	1,326,510	1,0
① 수자원개발(Water Resources)	203,500	0,2
② 치수및재해대책(Water Control & Counterdisaster)	940,678	0,7
③ 국토계획조사(Land Survey)	182,333	0,1
다. 상공업(Commerce & Industry)	2,092,326	1,6
① 공업진흥(Development of Industry)	64,179	—
② 중소기업지원(Support for Small & Medium Industries)	1,436,316	1,1
③ 수출및기타상공지원(Support for Exports and Commerce & Ind.)	465,274	0,3
④ 산업자원행정(Commerce & Industry Adm.)	126,557	—
라. 에너지및자원개발(Development of Energy & Resources)	3,510	—
① 광업자원개발(Development of Mining Resources)	3,510	—
마. 수송및통신(Transportation & Communication)	14,344,676	10,6
① 철도건설(Railway Construction)	2,324,619	1,7
② 도로(Highway)	6,841,137	5,1
③ 해운및항만(Marine Ports & Harbor)	1,554,068	1,2
④ 항공(Aviation)	417,950	0,3
⑤ 통신(Communication)	178,091	0,1
⑥ 도시교통(Urban Transportation)	1,701,511	1,3

2006년도 예산 FY 2006 Budget		증감(B-A) Change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184,525	0,1	△8,852	△4,6
216,880	0,2	△190,293	△46,7
297,354	0,2	56,148	23,3
1,157,346	0,8	△16,339	△1,4
1,080,806	0,8	△31,149	△2,8
76,540	—	14,810	24,0
28,303,225	19,6	242,692	0,9
6,364,396	4,4	△158,780	△2,4
4,861,941	3,4	△349,964	△6,7
312,676	0,2	△18,270	△5,5
537,224	0,4	68,086	14,5
652,555	0,5	141,368	27,7
1,269,187	0,9	△57,323	△4,3
207,900	0,1	4,400	2,2
882,681	0,6	△57,997	△6,2
178,606	0,1	△3,726	△2,0
2,563,783	1,8	471,457	22,5
82,379	—	18,200	28,4
1,879,714	1,3	443,399	30,9
491,627	0,3	26,354	5,7
110,062	—	△16,495	△13,0
3,352	—	△158	△4,5
3,352	—	△158	△4,5
14,027,632	9,7	△317,044	△2,2
2,067,704	1,4	△256,915	△11,1
6,393,691	4,4	△447,446	△6,5
1,638,603	1,1	84,535	5,4
404,192	0,3	△13,758	△3,3
170,206	0,1	△7,885	△4,4
1,839,015	1,3	137,503	8,1

단위 : 백만원(In Million Won)

● 기능별 세출예산(Budget Expenditures by Function) ③

기능 Function	2005년도 예산 FY 2005 Budget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⑦ 유통및보관(Circulation & Storage)	33,785	—
⑧ 건설교통행정(Construction & Transportation Adm.)	1,293,514	1.0
바. 과학기술(Science & Technology)	3,770,335	2.8
① 연구활동지원(Support for Research Activities)	2,301,465	1.7
② 기술개발(Technology Development)	1,273,574	0.9
③ 기타과학기술진흥(Others)	195,296	0.1
5. 일반행정(General Administration)	14,607,042	10.8
가. 입법및선거관계(Legislature & Election)	494,020	0.4
① 국회(Nat'l Assembly)	336,711	0.3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	157,308	0.1
나. 사법및경찰(Judiciary & Police)	7,255,763	5.4
① 법원및헌법재판소(Court & Constitutional Court)	680,764	0.5
② 법무및검찰(Justice & Prosecution)	699,123	0.5
③ 교도(Prisons)	831,172	0.6
④ 경찰(Police)	5,044,703	3.7
다. 일반행정(General Administration)	6,857,259	5.1
① 일반행정(General Administration)	4,601,806	3.4
② 외교통상행정(Foreign Affairs & Trade Adm.)	901,125	0.7
③ 징세행정(Taxation Adm.)	1,299,073	1.0
④ 홍보비(Public Information)	55,255	—
6. 지방재정교부금(Grants to Local Gov't)	20,135,831	14.9
가. 지방재정교부금(Grants to Local Gov't)	20,135,831	14.9
7. 제지출금및기타(Transfers to 2 Special Accounts & Others)	3,334,922	2.5
가. 채무상환(Repayment of Debt)	2,181,879	1.6
나. 제지출금및기타(Transfers to 2 Special Accounts & Others)	1,153,043	0.9
8. 예비비(Contingency)	1,645,159	1.2
9. 재정융자지원(Support for Fiscal Financing)	194,073	0.1
합계	135,215,587	100.0

2006년도 예산 FY 2006 Budget		증△감(B-A) Change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90,700	—	56,915	168.5
1,423,522	1.0	130,008	10.1
4,074,875	2.8	304,541	8.1
2,482,403	1.7	180,938	7.9
1,269,239	0.9	△4,335	△0.3
323,233	0.2	127,938	65.5
17,101,586	11.8	2,494,545	17.1
582,178	0.4	88,158	17.8
356,601	0.3	19,890	5.9
225,577	0.2	68,269	43.4
7,863,531	5.4	607,768	8.4
771,951	0.5	91,186	13.4
754,191	0.5	55,068	7.9
910,929	0.6	79,758	9.6
5,426,460	3.8	381,757	7.6
8,655,877	6.0	1,798,618	26.2
6,330,195	4.4	1,728,389	37.6
879,990	0.6	△21,135	△2.3
1,384,341	1.0	85,268	6.6
61,351	—	6,096	11.0
21,366,498	14.8	1,230,666	6.1
21,366,498	14.8	1,230,666	6.1
4,036,842	2.8	701,920	21.0
2,532,529	1.8	350,650	16.1
1,504,313	1.0	351,270	30.5
2,249,825	1.6	604,666	36.8
350,000	0.2	155,927	80.3
144,807,610	100.0	9,592,024	7.1

단위 : 백만원(In Million Won)

● 성질별 세출내역(Budget Expenditures by Object)

구분 Classification	2005년도 예산 FY 2005 Budget	2006년도 예산 FY 2006 Budget	증△감 Change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100 인건비(Personnel Expenses)	16,804,892	18,179,270	1,374,378	8.2
101 보수(Salaries)	16,240,341	17,599,929	11,359,588	8.4
102 비정규직보수(Salaries for Non-Ftes)	564,551	579,342	14,791	2.6
200 물건비(Goods Services)	10,163,888	11,407,010	1,243,122	12.2
201 관서운영비(Office Operation)	6,442,282	7,045,354	603,072	9.4
202 여비(Travel Expenses)	418,845	441,252	22,407	5.3
203 특수활동비(Special Operation Expenses)	743,179	782,909	39,730	5.3
204 업무추진비(Management Expenses)	199,292	173,077	△26,215	△13.2
205 복리후생비(Welfare Expenses)	194,860	245,673	50,813	26.1
206 용역비(Services Contracts)	630,385	1,050,459	420,074	66.6
207 시험연구비 (Examination & Research Expenses)	152,172	222,092	69,920	45.9
209 학교운영비(School Operation)	23,803	25,104	1,301	5.5
210 직무수행경비(Work Operation Expenses)	1,359,069	1,421,090	62,021	4.6
300 경상이전(Current Transfers)	68,374,080	71,796,586	3,422,506	5.0
301 보상금(Compensation)	5,564,140	5,881,661	317,521	5.7
302 배상금(Indemnity)	13,787	19,012	5,225	37.9
303 출연금(Funding)	7,533,844	8,287,779	753,935	10.0
304 민간경상이전 (Current Transfers to Privates)	3,492,564	3,199,032	△293,532	△8.4
305 자치단체경상이전 (Current Transfers to Local Gov't)	49,684,766	52,988,178	3,303,412	6.6
306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Current Transfers to Enterprise S/A, etc.)	1,084,004	543,993	△540,011	△49.8
307 해외경상이전 (Current Transfers to Abroad)	748,254	795,491	47,237	6.3
308 차입금이자(Interest Payments)	252,722	81,411	△171,281	△67.8
400 자본지출경비(Capital Expenditures)	10,248,213	10,529,495	281,282	2.7
401 기본조사설계비 (Basic design Expenses)	37,419	39,967	2,548	6.8

단위 : 백만원(In Million Won)

구분 Classification	2005년도 예산 FY 2005 Budget	2006년도 예산 FY 2006 Budget	증△감 Change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402 실시설계비(Detail Design Expenses)	109,737	83,964	△25,773	△23.5
403 토지매입비 (Acquisition of Land & Intangible Assets)	805,922	590,979	△214,943	△26.7
404 시설비(Construction & Facilities)	2,995,972	3,044,535	48,563	1.6
405 감리비(Supervision Expenses)	53,778	66,275	12,497	23.2
406 시설부대비 (Incidentals to Constructs & Facilities)	16,184	16,895	711	4.4
407 자산취득비(Asset Acquisition)	4,988,223	5,272,923	284,700	5.7
411 민간자본이전 (Capital Transfers to Privates)	465,523	443,190	△22,333	△4.8
412 자치단체자본이전 (Capital Transfers to Local Gov't)	712,449	921,033	208,584	29.3
413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 (Capital Transfers to Enterprise S/A, etc.)	44,629	46,590	1,961	4.4
414 해외자본이전(Capital Transfers Abroad)	18,377	3,143	△15,234	△82.9
500 융자금및출자금(Lending & Investment)	1,319,573	1,070,423	△249,150	△18.9
502 출자금(Investment)	1,319,573	1,070,423	△249,150	△18.9
600 보전지출(Financing)	44,620	21,000	△23,620	△52.9
601 국내차입금상환 (Repayment of Domestic Loans)	4,216	4,200	△16	△0.4
602 해외차입금상환 (Repayment of Foreign Loans)	40,404	16,800	△23,604	△58.4
700 정부내부거래(Intra-Gov't Transactions)	26,612,722	29,551,543	2,938,821	11.0
701 전출금(Transfers)	24,037,354	26,515,129	2,477,775	10.3
703 예수금원리금상환 (Repayment of Borrowing Intra-account)	2,450,317	2,943,090	492,773	20.1
704 전대차관원리금 상환 (Repayment of Sub-Loan(Foreign))	125,051	93,324	△31,727	△25.4
800 예비비및기타(Contingency & Others)	1,647,599	2,252,283	604,684	36.7
801 예비비(Contingency)	1,645,159	2,249,825	604,666	36.8
802 예비금(Reserve)	1,673	1,673	—	—
803 반환금및기타(Refund & Others)	766	785	19	2.5
합계(Total)	135,215,587	144,807,610	9,592,023	7.1

단위 : 백만원(In Million Won)

● 세출예산의 기능별 · 성질별 분류(Budget Expenditures by Function & Object)

구분 Classification	인건비(100) Personnel Expenses			물건비(200) Goods Services
	계 Total	보수(101) Salaries	비정규직보수 (102) Salaries for Non-Ftes	
1. 방위비(Defence Exp.)	7,526,885	7,444,265	82,620	5,896,651
2. 교육비(Education Exp.)	1,490,007	1,483,835	6,172	269,221
3. 사회개발(Social Dev't Exp.)	581,949	411,838	170,111	526,536
가. 문화및관광(Culture and Tourism)	140,728	121,255	19,473	207,376
나. 환경개선(Environment Improvement)	—	—	—	700
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	436,449	290,583	145,866	255,358
라. 주택및지역사회개발(Housing & Local Community Dev't)	4,772	—	4,772	63,101
4. 경제개발(Economic Dev't Exp.)	894,531	818,262	76,269	1,017,654
가. 농림수산개발(Agriculture & Fisheries Dev't)	438,987	388,433	50,554	283,427
나. 국토보존개발(Conservation & Dev't of National Resources)	7,648	4,829	2,819	137,147
다. 상공업(Commerce & Industry)	86,886	80,499	6,387	72,800
라. 에너지및자원개발(Development of Energy & Resources)	2,477	2,456	21	741
마. 수송및통신(Transportation & Communication)	174,702	166,847	7,855	285,793
바. 과학기술(Science & Technology)	183,832	175,198	8,634	237,746
5. 일반행정(General Administration)	7,685,898	7,441,728	244,170	3,696,947
가. 입법및선거관계(Legislature & Election)	292,398	279,204	13,194	163,893
나. 사법및경찰(Judiciary & Police)	5,699,501	5,604,349	95,152	1,804,999
다. 일반행정(General Adm.)	1,693,999	1,558,176	135,824	1,728,055
6. 지방재정지원(Grants to Local Gov't)	—	—	—	—
가. 지방재정지원(Grants to Local Gov't)	—	—	—	—
7. 제지출금및기타(Transfers to 2 Special Accounts & Others)	—	—	—	—
가. 채무상환및이자보전(Repayment of Debt & Interest Subsidy)	—	—	—	—
나. 제지출금및기타(Transfers to 2 Special Accounts & Others)	—	—	—	—
다. 예비비(Contingency)	—	—	—	—
8. 재특회계지원(Support for Fiscal Financing)	—	—	—	—
합계(Total)	18,179,270	17,599,929	579,342	11,407,010

경상이전(300) Current Transfers	자본지출(400) Capital Exp.	융자금 및 출자금(500) Lending & Investment	보전재원(600) Financing	정부내부지출 (700) Intra-Gov't Payment	기타(800-900) Others	합계 Total
1,797,146	6,609,274	—	—	1,681,739	—	23,511,696
25,968,149	386,860	—	—	425,758	228	28,540,223
12,951,333	1,046,883	1,050,423	4,200	3,186,365	25	19,347,715
320,469	599,084	—	4,200	51,025	22	1,322,904
—	11,650	151,500	—	1,547,645	—	1,711,495
12,519,215	357,249	—	—	1,587,696	3	15,155,969
111,650	78,900	898,923	—	—	—	1,157,346
8,390,399	1,733,540	20,000	—	16,247,098	3	28,303,225
1,893,789	375,946	—	—	3,372,247	—	6,364,396
54,900	1,014,233	10,000	—	45,259	—	1,269,187
1,913,812	135,983	10,000	—	344,302	—	2,563,783
—	131	—	—	—	3	3,352
999,047	86,741	—	—	12,481,349	—	14,027,632
3,528,851	120,506	—	—	3,940	—	4,074,875
1,248,061	752,938	—	16,800	3,698,741	2,201	17,101,586
73,161	51,339	—	—	—	1,388	582,178
158,798	199,749	—	—	197	286	7,863,531
1,016,101	501,851	—	16,800	3,698,543	528	8,655,877
21,366,498	—	—	—	—	—	21,366,498
21,366,498	—	—	—	—	—	21,366,498
75,000	—	—	—	3,961,842	2,249,825	6,286,667
75,000	—	—	—	2,457,529	—	2,532,529
—	—	—	—	1,854,313	—	1,854,313
—	—	—	—	—	2,249,825	2,249,825
—	—	—	—	350,000	—	350,000
71,796,586	10,529,495	1,070,423	21,000	29,551,543	2,252,283	144,807,610

단위 : 백만원(In Million Won)

● 세출예산의 성질별 · 기능별 분류(Budget Expenditures by Object & Function) ①

구분 Classification	방위비 Defense Exp.	교육비 Education Exp.	사회개발 Social Dev't Exp.	경제개발 Economic Dev't Exp.
100 인건비(Personnel Expenses)	7,526,885	1,490,007	581,949	894,531
101 보수(Salaries)	7,444,265	1,483,835	411,838	818,262
102 비정규직보수(Salaries for Non-Ftes)	82,620	6,172	170,111	76,269
200 물건비(Goods Services)	5,896,651	269,221	526,536	1,017,654
201 관서운영비(Office Operation)	4,681,326	148,918	307,285	369,529
202 여비(Travel Expenses)	127,558	4,503	27,860	41,469
203 특수활동비(Special Operation Expenses)	158,789	—	183	1,910
204 업무추진비(Management Expenses)	63,378	1,862	7,265	7,136
205 복리후생비(Welfare Expenses)	103,009	17,237	6,043	12,184
206 용역비(Services Contracts)	292,274	36,358	92,257	371,543
207 시험연구비(Examination & Research Expenses)	1,141	—	55,123	163,883
209 학교운영비(School Operation)	—	25,104	—	—
210 직무수행경비(Work Operation Expenses)	469,176	35,240	30,519	50,001
300 경상이전(Current Transfers)	1,797,146	25,968,149	12,951,333	8,390,399
301 보상금(Compensation)	373,884	80	5,381,927	15,238
302 배상금(Indemnity)	5,752	1	1,789	55
303 출연금(Funding)	837,948	835,277	299,791	5,703,760
304 민간경상이전(Current Transfers to Privates)	18,803	271,376	576,801	2,093,037
305 자치단체경상이전 (Current Transfers to Local Gov't)	—	24,809,533	6,607,909	140,146
306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Current Transfers to Enterprise S/A, etc.)	20,504	17,995	61,686	412,729
307 해외경상이전(Current Transfers to Abroad)	540,255	33,888	20,540	25,435
308 차입금이자(Interest Payments)	—	—	890	—
400 자본지출경비(Capital Expenditures)	6,609,274	386,860	1,046,883	1,733,540
401 기본조시설계비(Basic Design Expenses)	18,543	5,102	8,719	6,091
402 실시설계비(Detail Design Expenses)	31,432	2,933	6,998	39,943

일반행정 General Adm. Exp.	지방재정지원 Grants to Local Gov't	제지출금및기타 Transfers to 2 Special Accounts & Others	합계 Total
7,685,898	—	—	18,179,270
7,441,728	—	—	17,599,929
244,170	—	—	579,342
3,696,947	—	—	11,407,010
1,538,297	—	—	7,045,354
239,861	—	—	441,252
662,027	—	—	782,909
93,436	—	—	173,077
107,199	—	—	245,673
258,027	—	—	1,050,459
1,946	—	—	222,092
—	—	—	25,104
836,154	—	—	1,421,090
1,248,061	21,366,498	75,000	71,796,586
110,532	—	—	5,881,661
11,415	—	—	19,012
611,003	—	—	8,287,779
239,015	—	—	3,199,032
64,093	21,366,498	—	52,988,178
31,080	—	—	543,993
175,372	—	—	795,491
5,551	—	75,000	81,441
752,938	—	—	10,529,495
1,513	—	—	39,967
2,657	—	—	83,964

단위 : 백만원(In Million Won)

● 세출예산의 성질별 · 기능별 분류(Budget Expenditures by Object & Function) ②

구분 Classification	방위비 Defense Exp.	교육비 Education Exp.	사회개발 Social Dev't Exp.	경제개발 Economic Dev't Exp.
403 토지매입비(Acquisition of Land & Intangible Assets)	117,268	1,146	188,435	274,985
404 시설비(Construction & Facilities)	1,641,485	257,587	190,256	734,764
405 감리비(Supervision Expenses)	10,916	438	4,695	47,230
406 시설부대비(Incidentals to Constructs & Facilities)	10,858	1,069	751	3,682
407 자산취득비(Asset Acquisition)	4,776,021	115,343	45,471	119,111
411 민간자본이전(Capital Transfers to Privates)	—	—	134,978	307,712
412 자치단체자본이전 (Capital Transfers to Local Gov't)	2,700	—	452,963	168,626
413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 (Capital Transfers to Enterprise S/A, etc.)	50	100	13,616	31,396
414 해외자본이전(Capital Transfers Abroad)	—	3,143	—	—
500 융자금및출자금(Lending & Investment)	—	—	1,050,423	20,000
502 출자금(Investment)	—	—	1,050,423	20,000
600 보전지출(Financing)	—	—	4,200	—
601 국내차입금상환(Repayment of Domestic Loans)	—	—	4,200	—
602 해외차입금상환(Repayment of Foreign Loans)	—	—	—	—
700 정부내부지출(Intra-Gov't Transactions)	1,681,739	425,758	3,186,365	16,247,098
701 전출금(Transfers)	1,681,739	360,054	3,169,624	15,755,214
703 예수금원리금상환 (Repayment of Borrowing Intra-account)	—	—	—	485,561
704 전대차관원리금상환 (Repayment of Sub-Loan(Foreign))	—	65,704	16,741	6,324
800 예비비및기타(Contingency & Others)	—	228	25	3
801 예비비(Contingency)	—	—	—	—
802 예비금(Reserve)	—	—	—	—
803 반환금및기타(Refund & Others)	—	228	25	3
합계(Total)	23,511,696	28,540,223	19,347,715	28,303,225

일반행정 General Adm. Exp.	지방재정지원 Grants to Local Gov't	제지출금및기타 Transfers to 2 Special Accounts & Others	합계 Total
9,146	—	—	590,979
220,443	—	—	3,044,535
2,996	—	—	66,275
535	—	—	16,895
216,977	—	—	5,272,923
500	—	—	443,190
296,744	—	—	921,033
1,428	—	—	46,590
—	—	—	3,143
—	—	—	1,070,423
—	—	—	1,070,423
16,800	—	—	21,000
—	—	—	4,200
16,800	—	—	16,800
3,698,741	—	4,311,842	29,551,543
3,694,186	—	1,854,313	26,515,129
—	—	2,457,529	2,943,090
4,555	—	—	93,324
2,201	—	2,249,825	2,252,283
—	—	2,249,825	2,249,825
1,673	—	—	1,673
528	—	—	785
17,101,586	21,366,498	6,286,667	144,807,610

단위 : 백만원(In Million Won)

5. 특별회계 규모 및 개요

Special Account Budgets

회계별 Account	2005년도 예산 FY 2005 Budget	2006년도 예산 FY 2006 Budget	증△감 Change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1) 재정융자(Fiscal Financing)	14,870,257,317	10,382,406,871	△4,487,850,446	△30.2
(2) 국유재산관리(National Property Management)	2,011,786,322	1,392,618,543	△619,167,779	△30.8
(3) 농어촌구조개선 (Agri. & Fisheries Structure Adjustment)	6,327,970,343	7,067,249,522	739,279,179	11.7
(4) 농어촌특별세관리 (Rural Development TAX Management)	2,692,362,000	2,778,585,000	86,223,000	3.2
(5) 교통시설(Transportation Facilities)	13,058,661,676	12,595,344,729	△463,316,947	△3.5
(6) 등기(Registration)	240,933,898	266,835,302	25,901,404	10.8
(8) 교도작업(Prison Operation)	47,800,000	49,200,000	1,400,000	2.9
(9) 군인연금(Military Personnel Pension)	1,660,788,624	1,774,683,428	113,894,804	6.9
(11) 에너지및자원사업(Energy & Resources)	2,835,466,000	3,007,242,000	171,776,000	6.1
(12) 환경개선(Environment Reconstruction)	2,508,938,415	2,632,588,122	123,649,707	4.9
(13) 국립의료원(Nat'l Medical Center Management)	66,567,632	67,493,598	925,966	1.4
(15) 우체국보험(Postal Insurance Service)	526,031,306	561,100,262	35,068,956	6.7
(16) 자동차교통관리개선 (Automobile Traffic Management)	626,144,000	669,016,792	42,872,792	6.8
(17) 특허관리(Patent Management)	225,020,000	297,973,000	72,953,000	32.4
(18) 국가균형발전(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5,492,986,677	5,906,702,766	413,716,089	7.5
(19) 주한미군기지이전	—	626,416,370	626,416,370	순증
(2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45,259,465	45,259,465	순증
(19) 양곡관리(Grain Management)	1,441,187,673	1,293,150,627	△148,037,046	△10.3
(20) 책임운영기관(Agency)	707,592,543	616,798,756	△90,793,787	△12.8
(22) 통신사업(Communication Service Ent.)	5,134,610,013	5,006,226,007	△128,384,006	△2.5
(23) 조달(Government Supply Ent.)	150,551,537	215,130,966	64,579,429	42.9
총계(Gross Total of Special Accounts)	60,625,655,976	57,252,022,126	△3,373,633,850	△5.6
순계(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58,904,073,624	56,164,862,775	△2,739,210,849	4.7

※ 순계 : 계정 간 거래를 제외한 금액

단위 : 천원(In Thousand Won)

6. 국고채무부담행위

회계 및 소관	사항	금액		
		2005년도 예산	2006년도 예산	증△감
합계		(\$382,596,172) 2,079,038,601	(\$405,955,574) 2,412,275,696	(\$23,359,402) 333,237,095
I. 일반회계		(\$382,596,172) 1,779,038,601	(\$405,955,574) 2,012,275,696	(\$23,359,402) 233,237,095
1. 외교통상부		(\$23,778,000) 27,345,000	(\$36,398,000) 36,398,000	(\$12,620,000) 9,053,000
	① 재외공관국유화사업	(\$23,778,000) 27,345,000	(\$36,398,000) 36,398,000	(\$12,620,000) 9,053,000
2. 국방부		(\$358,818,172) 1,695,493,601	(\$369,557,574) 1,743,877,696	(\$10,739,402) 48,384,095
	① 전력투자비	(\$344,641,184) 882,600,000	(\$347,616,823) 805,454,000	(\$2,975,639) △77,146,000
	② 경상운영비	(\$14,176,988) 812,893,601	(\$21,940,751) 938,423,696	(\$7,763,763) 125,530,095
3. 해양경찰청		56,200,000	232,000,000	175,800,000
	① 대형 함정	56,200,000	64,100,000	7,900,000
	② 노후 함정	—	167,900,000	167,900,000
II. 특별회계		300,000,000	400,000,000	100,000,000
1. 교통시설특별회계 (건설교통부)		300,000,000	400,000,000	100,000,000
	① 일반국도 건설	300,000,000	400,000,000	100,000,000

단위 : 천원(In Thousand Won)/달러(\$)

7. 명시이월비

회계 및 소관	금액			사유 및 내역
	2005년도 예산	2006년도 예산	증△감	
일반회계	(\$62,979,569) 136,082,275	(\$57,388,619) 130,352,491	(△\$5,590,950) △5,729,784	
1. 국방부	(\$44,386,287) 114,700,000	(\$32,424,249) 105,388,121	(△\$11,962,038) △9,311,879	· 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 도입 지연 및 신장비 개발지연에 대비 · 기타 불리한 도입조건을 배제하고 민원제기에 따 른 부지매입 지연 가능성 에 대비
· 전력투자	(\$44,386,287) 114,700,000	(\$32,424,249) 105,388,121	(△\$11,962,038) △9,311,879	
- 기동 및 타격	(-) 12,500,000	(\$384,271) 27,559,121	(\$384,271) 15,059,121	
- 해상 및 상륙	(\$10,608,695) 18,500,000	(\$1,516) 16,000,000	(△\$10,607,179) △2,500,000	
- 공중 및 방공	(\$1,739,130) 16,200,000	(-) 6,000,000	(△\$1,739,130) △10,200,000	
- C41 · 전자전	(-) 4,000,000	(-) 10,009,000	(-) 6,009,000	
- 지원전력	(\$32,038,462) 54,500,000	(\$32,038,462) 41,500,000	(-) △13,000,000	
- 연구개발	(-) 9,000,000	(-) 4,320,000	(-) △4,680,000	
2. 산림청	(\$18,593,282) 21,382,275	(\$24,964,370) 24,964,370	(\$6,371,088) 3,582,095	· 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 도입지연에 대비
· 산불 진화용 헬기 구입	(\$18,593,282) 21,382,275	(\$24,964,370) 24,964,370	(\$6,371,088) 3,582,095	

단위 : 천원(In Thousand Won)/달러(\$)

8. 계속비

회계 및 소관	사업별	계속비 총액	계속비 연부액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교통시설 특별회계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	10,255,235,000 12,972,340,000	1,330,000,000 1,330,000,000	1,370,000,000 1,370,000,000	1,918,540,000 1,918,540,000	1,539,854,000 2,123,439,000	1,185,043,000 1,698,865,000	610,850,000 1,342,167,000	333,602,000 1,150,852,000	648,477,000
(건설 교통부)	1. 기간국도 8차간설 - 2005년 예산 - 2006년 예산	3,716,362,000 3,646,855,000	710,000,000 710,000,000	700,000,000 700,000,000	609,016,000 609,016,000	577,346,000 507,839,000				
	2. 기간국도 9차간설 - 2005년 예산 - 2006년 예산	1,689,854,000 1,675,600,000	370,000,000 370,000,000	370,000,000 370,000,000	370,000,000 370,000,000	309,854,000 295,600,000				
	3. 기간국도 10차간설 - 2005년 예산 - 2006년 예산	2,132,043,000 2,065,865,000	250,000,000 250,000,000	300,000,000 300,000,000	437,000,000 437,000,000	610,000,000 480,000,000	535,043,000 598,865,000			
	4. 지역간선 국도 - 2005년 예산 - 2006년 예산	1,586,126,000 1,827,231,000			222,524,000 222,524,000	300,000,000 300,000,000	350,000,000 400,000,000	380,000,000 485,000,000	333,602,000 419,707,000	
	5. 지역간선 국도 2차간설 - 2005년 예산 - 2006년 예산	2,625,939,000				220,000,000	400,000,000	626,317,000	731,145,000	648,477,000
	6. 장항선 개량 - 2005년 예산 - 2006년 예산	843,950,000 843,950,000			200,000,000 200,000,000	220,000,000 220,000,000	220,000,000 220,000,000	203,950,000 203,950,000		
(해양 수산부)	7. 부산산항 남측간선 부두22단계 - 2005년 예산 - 2006년 예산	286,900,000 286,900,000			80,000,000 80,000,000	100,000,000 100,000,000	80,000,000 80,000,000	26,900,000 26,900,000		

단위 : 천원(In Thousand Won)

제 2 장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1. 기금 요약
2. 기금 운용 규모 및 조성 규모
3. 기금 수입
4. 기금 지출

1

기금 요약

Summary of Gov't Funds

구분 Classification	기금명 Name of Fund
사회보험성기금 (6개)	- 국민연금기금(National Pension Fund)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The Korea Teacher's Pension Fund) - 고용보험기금(Employment Insurance Fund)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 군인연금기금(Military Pension Fund) - 공무원연금기금(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계정성기금 (5개)	- 공공자금관리기금(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 외국환평형기금(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 공적자금상환기금(Public Fund Repayment Fund) - 양곡증권정리기금(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복권기금(Lottery Fund)
금융성기금 (10개)	- 기술신용보증기금(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The Credit Guarantee Fund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Fishing Houses) - 신용보증기금(Korea Credit Guarantee Fund)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Korea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payment Fund)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 수출보험기금(Export Insurance Fund)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 부실채권정리기금(Non-performing Asset Management Fund)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Korea Student-loan Credit Guarantee Fund)
사업성기금 (40개)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사학진흥기금(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 보훈기금 (Merit Reward Fund)(40개) -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Governmental Fund for Patriotic Martyrs & Independence Fighters) - 청소년육성기금(Youth Supporting Fund) - 과학기술진흥기금(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 원자력연구개발기금(Atomic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Fund) - 남북협력기금(Inter-Korean Cooperation Fund)

구분 Classification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성기금 (40개)	- 국제교류기금(Korea Foundation Fund) - 군인복지기금(Military Welfare Fund) - 방위산업육성기금(Defense Industry Promotion Fund) - 관광진흥개발기금(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 국민체육진흥기금(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 문화산업진흥기금 (Endowment to Cultural Industries Promotion Fund) - 문화예술진흥기금 (The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 신문발전기금 (Korea Press Fund) - 지역신문발전기금(Local Press Development Fund) - 농산물가격안정기금(Fund for Agro-Fishery Marketing Price Stabilization) - 농작물재해보험기금(Crop Reinsurance Fund) - 농지관리기금(Farmland Management Fund)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Rice Income Stabilization Fund)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 Support Fund) - 축산발전기금(Livestock Development Fund) - 전력산업기반기금(Electric Power Industry Fund)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The Fund for Use Rationalization of Specified Substances) - 정보통신진흥기금(Information Promotion Fund) - 국민건강증진기금(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 응급의료기금 (Substitute Payment Fund for Emergency Medical Cost) - 금강수계관리기금(Fund for Management of Kum River) - 낙동강수계관리기금(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 영산강 · 섬진강수계관리기금(Fund for Management of Youngsan and Sumjin River) - 한강수계관리기금(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 근로자복지진흥기금(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 임금채권보장기금(Wage Claim Guarantee Fund)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 여성발전기금(Women's Development Fund) - 국민주택기금(National Housing Fund)(40개) - 수산발전기금(Fisheries Development Fund)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Small & Medium Enterprise's Promo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Fund) - 방송발전기금(Broadcasting Development Fund)
합계	총 61개 기금

2 기금 운용 규모 및 조성 규모

Fund Operation and Fund Formation

구분 Classification		운용 규모 Fund Operation		
		2005년도 FY 2005	2006년도 FY 2006	증△감 Change
수입	운용 규모	319,0	358,2	39,2
	자체수입	82,4	88,0	5,6
	정부내부수입	85,3	96,3	11,0
	차입금	80,9	84,4	3,5
	여유자금회수	70,3	89,5	19,2
지출	사업비	69,6	74,6	5,0
	- 사회보험성기금	20,1	22,5	2,4
	- 금융성·계정성기금	23,4	23,5	0,1
	- 특정사업지원	26,1	28,7	2,6
	기금운영비	2,3	2,3	—
	정부내부지출 등	134,3	164,3	30,0
	여유자금운용	112,8	116,9	4,1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Won)

3 기금 수입

Fund Revenues

기금명	자체수입	정부내부 수입	차입금	기타 여유 자금 회수	합계
1.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300,731	1,331	—	407,021	709,083
2.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66,2111	6,242	364	13,273	96,090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he Korea Teacher's Pension Fund)	25,683	5,405	—	30,742	61,830
4.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46	499	—	352	897
5.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41,074	2,277	—	74,875	118,226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44,171	672	—	21,685	66,528
7.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694	2,550	—	3,212	6,456
8. 사학진흥기금 (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1,293	300	—	168	1,761
9.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232	22,501	—	2,058	24,791
10. 국제교류기금 (Korea Foundation Fund)	538	—	—	450	988
11.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3,517	330	—	1,750	5,597
12. 방위산업육성기금 (Defense Industry Promotion Fund)	376	—	—	54	430
13.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1,565	4,188	—	989	6,742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자체수입	정부내부 수입	차입금	기타 여유 자금 회수	합계
1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Atomic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Fund)	1,662	—	—	79	1,741
15.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3,888	—	—	771	4,659
16.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3,316	457	—	1,716	5,489
17. 문화산업진흥기금 (Endowment to Cultural Industries Promotion Fund)	565	—	—	1,340	1,905
18. 문화예술진흥기금 (The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378	506	—	4,314	5,198
19.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2	250	—	40	292
20. 신문발전기금 (Korea Press Fund)	2	250	—	—	252
21. 청소년육성기금 (Youth Supporting Fund)	287	68	—	1,944	2,299
2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o—Fishery Marketing Price Stabilization)	18,569	—	—	1,191	19,760
23.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8,812	8,778	—	581	18,171
24.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6,826	—	—	3,116	9,942
25.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Rice Income Stabilization Fund)	478	7,982	—	1,572	10,032
2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FTA Support Fund)	109	1,445	—	629	2,183
27. 농작물재해보험기금 (Crop Reinsurance Fund)	43	200	—	72	315
28.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 Power Industry Fund)	10,346	—	—	8,620	18,966
29.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The Fund for Use Rationalization of Specified Substances)	35	—	—	181	216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자체수입	정부내부 수입	차입금	기타 여유 자금 회수	합계
30.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Promotion Fund)	5,157	7,962	—	472	13,591
31.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16,540	—	—	2,536	19,076
32. 응급의료기금 (Substitute Payment Fund for Emergency Medical Cost)	14	500	—	118	632
33.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Kum River)	665	—	—	164	829
3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1,560	—	—	—	1,560
35.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oungsan and Sumjin River)	482	—	—	—	482
36.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3,431	—	—	124	3,555
37. 근로자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1,038	342	—	1,649	3,029
38.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1,850	16	—	1,978	3,844
3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1,842	482	—	407	2,731
40. 여성발전기금 (Women's Development Fund)	90	225	—	36	351
41. 국민주택기금 (National Housing Fund)	80,764	5,540	89,000	36,969	212,273
42.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4,889	200	—	920	6,009
43. 보훈기금 (Merit Reward Fund)	1,953	436	—	937	3,326
4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Patriotic Martyrs & Independence Fighters)	5	54	—	79	138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자체수입	정부내부 수입	차입금	기타 여유 자금 회수	합계
45.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Promo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Fund)	31,099	2,151	33,483	362	67,095
46. 방송발전기금 (Broadcasting Development Fund)	1,452	20	—	728	2,200
47.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39,201	310,740	672,873	1	1,022,815
48.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20,493	192,000	10,000	154,547	377,040
49.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142	198,347	—	—	198,489
50.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3	24,384	—	63	24,450
51. 복권기금 (Lottery Fund)	27,763	—	—	1,403	29,166
52. 기술신용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9,364	6,000	—	677	16,041
5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The Credit Guarantee Fund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3,355	5,780	—	2,849	11,984
5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Fishing Houses)	735	975	—	645	2,355
55.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18,301	3,000	—	14,738	36,039
5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4,164	1,000	—	3,122	8,286
5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Korea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payment Fund)	38,040	123,954	38,000	38,974	238,968
58. 수출보험기금 (Export Insurance Fund)	6,045	755	—	7,003	13,803
5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127	300	—	649	1,076
60. 부실채권정리기금 (Non-performing Asset Management Fund)	17,256	—	—	39,407	56,663
61.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Korea Student-loan Credit Guarantee Fund)	1,002	1,490	—	496	2,988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Won)

4 기금 지출 Fund Expenditures

기금명	사업비	기금 운영비	정부내부 지출 등	여유자금 운용	합계
1.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43,078	4,275	—	661,725	709,083
2.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82,050	513	1,614	11,910	96,090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he Korea Teacher's Pension Fund)	23,992	310	650	36,879	61,831
4.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	—	—	897	897
5.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37,949	1,053	2,000	77,225	118,227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38,390	2,509	500	25,129	66,528
7.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2,600	36	1,285	2,533	6,456
8. 사학진흥기금(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1,100	26	582	51	1,761
9.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12,562	19	9,263	2,947	24,791
10. 국제교류기금 (Korea Foundation Fund)	414	77	—	497	988
11.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3,847	—	—	1,752	5,599
12. 방위산업육성기금 (Defense Industry Promotion Fund)	331	—	—	99	430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사업비	기금 운영비	정부내부 지출 등	여유자금 운용	합계
13.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5,024	7	70	1,639	6,742
1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Atomic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Fund)	1,665	30	—	46	1,741
15.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4,201	6	—	455	4,659
16.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2,603	702	400	1,782	5,487
17. 문화산업진흥기금 (Endowment to Cultural Industries Promotion Fund)	977	3	—	925	1,905
18. 문화예술진흥기금 (The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1,112	119	—	3,968	5,198
19.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214	3	—	73	292
20. 신문발전기금 (Korea Press Fund)	176	10	—	66	252
21. 청소년육성기금 (Youth Supporting Fund)	716	4	500	1,076	2,299
2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o-Fishery Marketing Price Stabilization)	18,206	524	—	1,029	19,760
23.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8,300	441	9,387	44	18,171
24.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6,682	47	857	2,353	9,942
25.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Rice Income Stabilization Fund)	9,096	38	189	709	10,032
2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FTA Support Fund)	1,953	40	—	190	2,183
27. 농작물재해보험기금 (Crop Reinsurance Fund)	200	3	—	110	315
28.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 Power Industry Fund)	12,885	89	—	5,992	18,966
29.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The Fund for Use Rationalization of Specified Substances)	69	2	—	142	216
30.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Promotion Fund)	9,633	228	1,000	2,727	13,591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사업비	기금 운영비	정부내부 지출 등	여유자금 운용	합계
31.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17,049	29	—	1,998	19,076
32. 응급의료기금 (Substitute Payment Fund for Emergency Medical Cost)	493	11	—	125	632
33.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Kum River)	815	11	—	—	829
3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1,532	23	—	—	1,560
35.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ongsan and Sumjin River)	469	8	—	—	482
36.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3,495	57	—	—	3,555
37. 근로자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1,288	149	550	1,039	3,029
38.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1,813	82	—	1,947	3,844
3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2,108	373	42	209	2,731
40. 여성발전기금 (Women's Development Fund)	312	1	—	39	351
41. 국민주택기금 (National Housing Fund)	109,330	1,739	98,533	2,671	212,273
42.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5,510	10	—	485	6,009
43. 보훈기금 (Merit Reward Fund)	2,484	19	—	822	3,326
4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Governmental Fund for Patriotic Martyrs & Independence Fighters)	60	2	—	75	138
45.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Promo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Fund)	33,208	644	33,243	—	67,095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사업비	기금 운영비	정부내부 지출 등	여유자금 운용	합계
46. 방송발전기금 (Broadcasting Development Fund)	1,656	311	—	231	2,200
47.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23,500	1	999,314	—	1,022,815
48.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	1	140,975	236,065	377,040
49.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123,954	—	74,535	—	198,489
50.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	24,384	66	24,450
51. 복권기금 (Lottery Fund)	20,339	504	7,231	1,091	29,166
52. 기술신용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13,210	1,574	—	1,257	16,041
5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The Credit Guarantee Fund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10,422	545	—	1,017	11,984
5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Fishing Houses)	2,045	—	—	311	2,356
55.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18,590	3,295	—	14,154	36,040
5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5,042	508	614	2,121	8,285
5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Korea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payment Fund)	9,874	1,053	216,654	11,386	238,967
58. 수출보험기금 (Export Insurance Fund)	6,096	662	—	7,045	13,803
5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280	46	—	748	1,076
60. 부실채권정리기금 (Non-performing Asset Management Fund)	—	581	18,697	37,386	56,663
61.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Korea Student-loan Credit Guarantee Fund)	1,398	117	—	1,472	2,988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Won)

❖ 찾아보기

가 격보조의 지양 55
 가정위탁 71
 건강보험 79, 80, 101, 135
 경부고속철도 90, 9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95
 경찰 부문 145, 146
 고등교육 29, 81~83
 고령친화산업 17, 68
 고속도로 89, 94, 95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지원 73, 75
 고용연장지원금 7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88, 97, 159
 공공부문분류위원회 172
 공공비축제 98
 공공임대주택 건설 77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1~148
 공기업 주식매각대금 38
 공적연금 78
 공적자금 상환 50, 51, 54
 과학기술국채 29, 149, 154
 관광 부문 127~128
 관광 · 레저도시 128
 관리대상 재정수지 48~50
 광양항 30, 92, 93
 광역위성통신망사업 146
 팬클럽은 일자리 부족 73
 교부세 156~158
 교육 분야 22, 29, 58, 81~86
 교토메커니즘 120
 교토의정서 120
 국가균형발전 부문 159~161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지원 분야 156~16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 30, 40, 83, 156, 157, 159, 160, 186
 국가보훈 75, 76, 196, 200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75
 국가재정법 13, 31, 179~181
 국가재정운용계획 22, 31, 164~166, 172, 177, 179, 180
 국가채무 31, 48, 51, 181
 국가채무관리계획 181

국고보조금 157, 158
 국도 89, 217, 219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 165, 166
 국민기본수요 60
 국민부담률 50, 51
 국민연금법 17, 78
 국민임대산업단지 97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사업 76
 국민주택기금 52, 187, 223, 227, 231
 국민체육센터 128
 국방 분야 22, 29, 131~135
 국방개혁 18, 22, 30, 59, 131~133
 국선번호 141~143, 188
 국세수입 28, 37, 42, 193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151, 152
 국채발행 28~31, 37~39, 41~44, 51, 187, 190, 192, 233
 국채탄력발행 181
 균형발전의 강화 55
 근로장학금(Work Study) 86
 급원클리닉 79
 금융지원 부문 114
 기금 수입 41~43, 225, 233
 기금 지출 규모 46
 기금존치평가단 178
 기술신용보증기금 114, 222, 228
 기술지원 부문 113~115
 기존주택 전세임대 77
 기초생활보장 16, 22, 29, 57, 66, 67, 69, 70
 긴급복지지원제도 69

노인수발보험제도 70
 노인일자리 창출 70
 농림 · 해양 · 수산 분야 98~106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85
 농어촌 구조개선 투융자계획 99
 농어촌 사업유치원 교사담임수당 72
 농업 · 농촌 부문 100~104
 농지은행 30, 101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77

다목적용 대형 소방헬기 148
 대기 부문 119~120
 대한장애인체육회 129
 대형 공공투자사업 31, 62
 도로 부문 89
 도시철도 부문 90~92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33, 172

□

매연저감장치 117, 119, 120
 무료 법률구조 74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110~111
 문화 · 관광 분야 29, 124~130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127
 문화기술(CT)대학원 126
 문화예술 · 산업 부문 126~127
 문화재 부문 129~130
 문화재 종합병원 129, 130
 물류 13, 30, 87, 88, 92, 95, 103, 142
 미래성장동력 13, 16, 22, 27, 29, 48, 57, 99, 107, 153, 154
 미래형 해양운송체계 154
 민간보수접근율 61
 민간자본의 활용 54

ㄴ

법률구조 74, 141, 142, 144
 법무 및 검찰 부문 144
 법원 및 헌재 부문 143
 병영문화 18, 131, 132, 134, 135
 보육 · 여성 부문 71~73
 보육 · 유아교육비 지원 72
 보육시설 신축 72
 복식부기 · 발생주의 173
 부산항 신항 92, 93
 ‘분야-부문-프로그램(정책사업)’ 165
 분야별 공개토론회 164
 분야별 작업반 164
 분야별 · 부처별 지출한도 166, 180
 불법체류 외국인 141, 142~144

ㄷ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143
 사전예방의 강화 55
 사회복지 · 보건 분야 29, 66~80

사회안전망 12, 16, 27, 57, 66, 67
 사회적 기업 73
 사회적 일자리 17, 29, 58, 67, 73, 105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105
 산업 · 중소기업 분야 23, 30, 58, 107~115
 산업진흥 · 고도화 부문 109
 산전후 휴가급여 74
 산학협력실 설치지원사업 113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사업 109
 상하수도 부문 116, 118~119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117
 석탄산업 합리화 112
 성과평가의 강화 56, 149
 성장잠재력 27, 32, 39, 59, 68, 108, 110, 149, 150
 세계성장률 36
 세외수입 28, 37~39, 42, 190, 192, 194, 198
 세입 규모 37~43, 190, 234
 세출 구조조정 30, 59, 60, 62, 157, 160
 소방방재 · 민방위 부문 147~148
 수송 ·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87~97
 수자원 부문 96~97
 시민참여의 확대 55
 신문발전기금 126, 223, 226, 230, 234
 신문유통원 126
 신용보증기금 30, 83, 84, 95, 99, 100, 114, 222, 228
 신재생 에너지 111~113
 실종아동전문기관 71
 실질성장률 36

ㅇ

아동그룹홈 71
 양극화 완화 22, 29, 57, 58
 양항(Two ports) 92
 업무추진비 30, 61, 208, 212
 에너지 및 자원 개발 111~113
 예비 타당성 조사 31, 62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169
 예산낭비 대응전담반 62, 169, 170
 예산낭비 신고센터 31, 62, 169~171
 예산성과금 62, 170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166, 168
 예산회계법 180, 181, 187~189
 외교 부문 136, 137, 139~140
 외환시장 안정용 31, 51, 52
 원유 자주개발률 111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81, 84~85
 유아교육 72, 81, 82, 84, 85
 의료급여 16, 69, 70
 인천국제공항 93, 94
 일반회계 세입 37, 190
 일반회계 적자국채 44, 48, 49, 52
 일반회계 지출 규모 44~45
 일정 규모 할당의 금지 56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174~175
 임업 · 산촌 부문 105

ㄹ

자연 부문 116, 122
 자원순환형 시스템 121
 자활근로 69, 70
 ‘장-관-항’ 165
 장애수당 70, 71
 장애아동 부양수당 71
 장애인생활시설 71
 재래시장 108, 110
 「재원배분 12대 원칙」 54, 59, 165
 재정건전성 31, 43, 78, 165, 173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30, 61, 168
 재정세제전문위원회 178
 재정수지 28, 43, 48, 49, 181
 재정유자 52, 99
 재정유자특별회계 40, 45, 178, 186
 재정의 통합운영 55
 재해보험제도 148
 저소득 노인 · 장애인 · 아동 지원 70
 저소득 · 빈곤계층 66, 67
 저출산 · 고령화 16, 27, 29, 31, 59, 66, 68, 158
 저출산종합대책 68
 전대차관 37, 40, 42, 45, 192, 198, 209, 214
 전자경비시스템 144
 정보보증 장기학자금 대출제도 8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178
 제2단계 BK21사업 83
 제2선수촌 이전 129
 제2의 남극대륙기지 건설 106
 제도개선의 우선 55
 조세부담률 50, 51
 종합부동산세 22, 37~39, 156, 158, 190, 192~194
 주택 부문 76~77
 지방 문화산업클러스터 127

지방공항 23, 60, 88, 93, 94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 55
 지방재정 지원 부문 158
 지역 문화산업 연구센터 127
 지역 · 도시 및 산업단지 부문 97
 지역개발 계정 160
 지역거점 문화도시 127
 지역신용보증재단 114
 지역아동센터 70, 71
 지역혁신 계정 159~161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109
 지출 규모 22, 28, 44~47, 164, 181
 지하철 부문 91
 지하철 부채 91
 직장보육시설 72

ㄺ

창조적 인재양성 155
 철도 부문 90~91
 체육 부문 128~129
 총수입 22, 37, 41~43
 총지출 22, 28, 44, 47
 추곡수매제 98, 102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102
 출산후 계속고용장려금 74

ㅋ

콜센터 62, 170
 클린카드 61

ㄴ

타당성 검증 강화 56
 타당성 재검증 31, 62
 타간안정대책비 112
 통일 부문 136~138
 통일 · 외교 분야 136~140
 통일준비 59
 통합재정 37, 41~43, 164, 172, 173
 통합재정수지 28, 48~50, 181
 통합재정정보시스템 173
 특별회계 세입 37, 40
 특별회계 지출 규모 45
 특별회계 · 기금 정비 177~179

II

평가인증 72

평생 · 직업교육 81, 86

평생교육 81, 86

폐기물 부문 121

품목별 예산체계 167

프로그램 예산체계 1675

10

하수관거 23, 117, 118, 176

한국은행 잉여금 38

항공 · 공항 부문 93~94

항공마일리지 61

해양 및 기타 환경보호 부문 123

해양경찰 부문 146~147

해양수산 · 어촌 부문 106

해양수색구조협약 146

해외관광문화센터 127, 128

해운항만 부문 92~9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0, 30, 88, 97, 159

혁신형 중소기업 14, 107, 114, 153, 155

호남고속철 90

환경기초시설 118

환경보호 분야 116~123

환경성 질환 85, 116, 117, 123

환경영향평가 122

‘희망한국 21’ 16, 17, 67

112 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 145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64

21세기 프론티어사업 153~154

8·31 부동산 종합대책 14, 37

BRT(Bus Rapid Transit) 95

CAI/전자전 133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133

Life Cycle Cost 175

R&D 29, 57, 63, 80, 149

R&D 분야 149~155

SOC 58, 87, 88, 160, 175

Two Track 54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문
유병서	재정운용협력과 과장	종합 편집
조규산	재정운용협력과 사무관	종합 편집
심혜영	"	"
김지선	재정운용협력과 주사	"
정홍상	재정총괄과 과장	제2부 중 지출규모, 자원배분 원칙 · 방향, 제3부 중 예산 통제
임형철	재정총괄과 서기관	"
박봉용	재정총괄과 사무관	제2부 중 지출규모
정광조	재정총괄과 사무관	제2부 중 자원배분 원칙 및 방향
주 영	재정총괄과 주사	제3부 중 예산 통제
최재영	재정분석과 과장	제2부 중 재정운용 여건
박홍기	재정분석과 서기관	"
노형욱	중기재정계획과 과장	제2부 중 수입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조용범	중기재정계획과 서기관	"
전재호	중기재정계획과 사무관	수입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정유리	중기재정계획과 사무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홍동호	성과관리제도팀 과장	제2부 중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이상영	성과관리제도팀 사무관	"
양충모	예산낭비대응팀 과장	제2부 중 예산낭비대응시스템
강준모	예산낭비대응팀 사무관	"
한 훈	기획총괄팀 과장	제2부 중 디지털예산 · 회계시스템
정향우	기획총괄팀 서기관	"
이종욱	민자사업관리팀 과장	제2부 중 BTL 민간투자사업
남경철	민자사업관리팀 사무관	"
김상규	기금운용계획과 과장	제2부 중 특별회계 · 기금정비, 제3부 중 기금 통제
강영규	기금운용계획과 서기관	"
권중각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제3부 중 기금 통제
정 한	재정제도혁신과 사무관	제2부 중 국가재정법 제정 추진
하 성	복지재정과 과장	제2부 중 사회복지 · 보건
윤인대	복지재정과 서기관	"
정경희	교육문화재정과 서기관	제2부 중 교육
계강훈	교육문화재정과 사무관	"
위성백	건설교통재정과 과장	제2부 중 수송 · 교통 및 지역개발
신민철	건설교통재정과 사무관	"
조봉환	농림해양재정과 과장	제2부 중 농림 · 해양 · 수산
정창길	농림해양재정과 사무관	"
송병선	산업정보재정과 과장	제2부 중 산업 · 중소기업
송복철	산업정보재정과 서기관	"
정기준	과학환경재정과 과장	제2부 중 환경보호, R&D
김유정	과학환경재정과 사무관	제2부 중 환경보호
박문규	교육문화재정과 사무관	제2부 중 문화 · 관광
실문식	국방재정과 과장	제2부 중 국방
이용욱	국방재정과 사무관	"
박춘섭	일반행정재정과 과장	제2부 중 통일 · 외교
박철건	일반행정재정과 사무관	"
안내형	법사행정재정과 과장	제2부 중 공공질서 및 안전
장승대	법사행정재정과 사무관	"
강대현	과학환경재정과 사무관	제2부 중 R&D
송언석	균형발전정책팀 과장	제2부 중 국가균형발전
권재관	균형발전정책팀 사무관	"

· 2006년 2월 인사이동으로 작성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으나, 현재 담당자 중심으로 작성.

